

인권정보자료실
R1.1.14


인권하루소식

합본 14호
(2000년 1월 ~ 6월)

인권하루소식

합본 14호
2000년
1월 ~ 6월

인권정보자료실
R1.1.14


인천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중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천인권운동사랑방

인권
시평

박하사탕, 그리고 홍자

공선옥(소설가)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문인들이 영화, 박하사탕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느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영상 운운의 선전포스터를 보고 철도원을 볼까, 어쩔까, 하다가 왜, 뭣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박하사탕, 박하사탕, 해쌍는가, 궁금해져서 마지막 순간에 나도 박하사탕 쪽으로 기울어졌다. 영화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다. 내가 처음부터 울 준비를 하고 봐서였을까.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그리고 배우 설경구의 표정, 몸짓들이 시간을 거슬러 가며 보여지는 풍경들이 사람 가슴을 '애리게' 했다. 흔히 이야기꾼이라 하는 소설가 출신 감독이라서인가. 영화 속에는 확실히 '이야기'가 녹아 들어가 있었다. 맞다. 소설을 쓰려면 저렇게 써야 하는데, 개인과 시대를 짓누르는 아픔을, 아프더라도 해집어 보지 않고는, 그런 시도 없이 하는 소리란 '부질없는 헛소리'들일 뿐이라는 자각이 들었다.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였다.

하지만.... 걸리는 게 있었다. 바로 설경구, 영화속 주인공 김영호의 아내로 나오는 김여진이 분한 홍자라는 인물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건대, 영화는 정말 좋았지만, 그래서 더이상 편지 걸 건덕지가 없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영화 속 홍자, 혹은 현실 속에 있을지도 모를 '홍자들'에 대해서 뭔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한마디쯤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영화 속에서 홍자는 철저하게 윤순임이라는 여성과는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는듯이 보였다.

말하자면 김영호의 첫사랑인 윤순임이 성녀라면 현재의 아내인 홍자는 악녀라는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잣대가 그대로 투영된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었다. 누차 말하건 데 영화는 좋았지만, 내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아이엄마로서 늘상, 눈에 안보이게, 혹은 눈에 보이게 느끼는 '폭력적인 시선'이 영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이분법적 잣대란, 늘 육체적으로 '순결(?)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다. 김영호라는 인물이 시대에 대하여, 작은 가해자이자 큰 피해자로, 영화를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동정과 연민이나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물로 그려졌다면 홍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주인공의 비극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부속장치로만 기능하다가 '아파트 문을 닫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한마디로 '나쁜 여자'로만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 김영호의 망가져 가는 삶을 바라볼 때 만큼이나 내 가슴을 '애리게' 하던 것이었다.

기실 우리의 삶은, 주인공 주변에 머물다 사라지고 만 무수한 '홍자'들에 의해, 정말,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는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그 어머니들에 의해 유지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커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홍자들'에게도 '인격'과 '인권'이 있다!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1. 범인 조사도 못하는 한국, SOFA개정 시급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이태원 미군 술집에서 살해당한 김 아무개 씨의 살해용의자로 매카시 상병을 긴급체포해 구속했지만 한국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아 한국정부의 수사가 애를 먹고 있는데...시민사회단체는 규탄집회등을 열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억울한 죽음만 늘어난다"며 SOFA개정을 촉구해 (2/21)

2. 탈주 핑계, 미결수 권리 침해
광주교도소 미결수들이 법정에서 교도관을 칼로 찌르고 도주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흉악범은 법정에서 수감과 포승을 채울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2/24) 이에 인권단체들은 "계호상의 문제를 고치려 하기 보단 미결수에게 수감을 채울 권리만 하고 있다"며 "재판 시 수감을 채우는 등의 행위는 수치심과 위축감을 발생시켜 자기 변론을 막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다"며 반대

3. 약법, 또다시 도마에 오르다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99년 인권보고서가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밝혀 (2/25)

4.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도 우리 식구'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선언하고 비정규직노조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2/21)

5. 괜찮다 하더니 못매만 날락오네
상명고, 양천여고 등 서울소재 일부 사학재단이 전교조 등 노조활동에 참여한 교사들을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출시키고 있어 "부당전출"이라는 교사들의 반발 거세 (2/22)

6. NO! 검열
헌법재판소가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가능케 하고 있는 조항(99년 폐지됨)과 관련해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비디오물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 내려 (2/23)

<수치로 본 인권>
밤 굶는 아이 서울만 1만 6천여명
서울에 거주하는 1만5천8백75명의 어린이들이 빈곤등의 이유로 점심을 굶고 있으며 이중 1/4인 4천1백82명은 아침과 저녁마저 굶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2/22)

인권하루소식

2000년 3월

(제1565호 ~ 제1586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1일(수)

제 156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법무부가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해 노동운동 및 재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를 간첩이라고 주장해 인권사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입장은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한 것이어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씨와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앞으로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여기서 법무부는 "주한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및 안기부해체 등은 원고(현정덕)를 비롯한 재야운동가 및 운동권학생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들 주장은 북한에서 수십년동안 상투적이고 끈질기게 주장해 온 것들"이라며 주한미군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것이 마치 북한의 사주아래 진행되는 행위인 것처럼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남한 내에서 걸으려는 통일이나 민주화나 외치며 노동운동이나 재야운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따라서 재야운동을 하고 있는 원고(현정덕)는 오히려 보안관찰의 지속적 인 실시로 재범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말할 가치도 없는 악의적 모욕"이라며 법무부가 정부기

관을 자처할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했다고 입을 모았다.

"재야운동가 간첩 많다" 비방

현정덕 씨가 몸담고 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성명을 발표해 법무부의 시각을 "악의적 음해"라고 규탄하고 "한국의 인권운동이 북과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를 밝히지 않거나 공식적 사과를 해오지 않는다면 법무부는 물론 정 부여당에 대한 대대적인 규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법과 인권의 주무부서라 자칭하는 법무부가 군사독재시절이나 통용되던 냉전적 논리를 가지고 우리사회의 인권운동과 재야운동을 바라본다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법무부의 인식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나 국가인권기구 설치 등 당연한 민주 개혁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가협 의 남규선 총무 역시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폐지 등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으로 그러면 UN도 간첩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냐"며 "이렇게 천박한 인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법무부 등 정부 부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민주 화가 아직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법무부는 인권사회단체의 비난이 점점 거세지자 "공식적인 입장"이라던 처음 입장을 철회하고 "작성 사무관의 의견"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 문건의 최종 담당자인 법무부 김진수 검사는 "오해를 살만한 내

용이 있다는 비판은 수렴하겠지만 이 문장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며 인권사회단체의 사과요구를 거절했다.

한·칠레무역협정 비판 거세 농민들, "농축산업 초토화" 우려

농업정책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가 최근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 농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전농)은 "농산물 수출국인 칠레는 케언즈그룹과 같은 대규모 농업회사들이 농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 수출해 우리나라 농업과 품목별 경쟁관계가 형성된다"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칠 자유무역협정은 관세완화 내지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어 포도, 키위, 사과 등 과일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농축산업의 초토화가 예상된다. 또한 전농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값싼 농축산물의 수입은 한 작목 뿐 아니라 대체작목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줘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어 "제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농축산물의 원전시장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말로만 식량자급, 농가소득보장을 외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한편, 28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감귤 및 당근 가격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제주농민대회에서 경찰은 당근과 감귤을 실은 시위차량의 대회장 진입을 막고, 도청에 진입하려던 농민과 학생들을 폭력으로 진압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날 시위로 제주도연맹 김수길 정책차장 등 28명이 연행됐다.

하루소식 3월 2일자 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000년 2월분 총목차 (1546-1564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546	2/1	1	휘발유 천지에 가스총 발사 - 동두천 시청 화재사건 피해자 증언/ 삼암동 철거민 구속 -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남·북·해외 공동장주진 - 김양무 씨 장례식, 범민련 장/ <공판안내>
		2	<인권시평> 못한 어머니, 못한 눈물(공선욱 소설가)/ 주간인권흐름(1월 25일~31일)
1547	2/2	1	준법서약, 재수감 사유 - 명동성당 농성 후 가석방 취소/ 봉천 3동, 철거용역 난입/ <새로 나온 책> 「노숙자와 이웃하기 - 노숙자 바로알기①」
		2	'혈액순환' 보단 '노동환경 순환'이 우선 - 동부제약, 창립 25주년에 1년 넘긴 노동자 없어/ 고려운수 파행 계속돼 - 노동자, "스스로 대안 만들겠다"/ <경기보조원에 대한 긴급토론회>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자다"
1548	2/3	1	공허한 체불임금 대책 - "실효성 없는 대출보다 악덕기업주 구속해야" / 모든 통신에 열린 '참세상' - 사회운동자료, 손쉽게 만나/ <만화 사랑방> 이겨라! 총선시민연대
		2	"설, 그러나 갈곳이 없습니다" - 서울역 노숙자, 귀향객만 보며 눈물만/ 민예청 이적단체 판결 - 교류있어도 복은 반국가단체/ 김양무 씨 장례식 13일 - 망월동 묘역에 안장
1549	2/8	1	직업병 초기 증상도 산재다 - 법원, 망간중독 용접 노동자 보상 길 열어/ 철거민 강제입원시켜 - 서울시와 경찰, 시립병원에/ <주요공판안내>
		2	<인권시평> 박하사탕과 거짓말(이재훈 한겨레 기자)/ 주간인권흐름(1월 31일~2월 7일)
1550	2/9	1	난민없는 난민 이사국 - 정부 태도 변화 시급/ 박해전 한겨레 차장 연행 - 범민족대회 주도 국보법 위반/ <새로 나온 자료집>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현장실태조사 자료집」
		2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하면 불법 -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인간안보 촉구여행 - 국 제민주연대 등, 분쟁지역 체험 준비/ <인터뷰> 김성환 삼성해고자 복지투쟁위원회 - "사람답게 살기위한 것발을 올린다"
1551	2/10	1	대화가, 장애인 입학 절대불가 - 청주대 등 "시설없다"며 원서접수 거부/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2	재산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 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동두천 화재사건 희생자 장례식 - 시청측 진상규명없이 장례비만 지급
1552	2/11	1	'제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참정권 요구시위에 경찰 난입 - 한총련 대학생 검거 명분/ <만화사랑방> 난민거부하는 한국의 난민이사국 선출
		2	옥중투병 박경순 씨 석방촉구 - 간경화 중기 불구, 6년 옥살이 남아/ <현장> 민가협 목요집회 - 인권조약 10년 무색한 2000년의 자화상/ 경찰폭력 말리다 구속 - 인천연합 김연호 국장
1553	2/12	1	갈수록 불안한 '해'과의 동거 - 전남 영광 주민들, 생존 위협 가중/ 장애인 차별대학 검찰에 고발 - 장애우단체, 유사 사례 모집
		2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하는 '불법' - 하여노역지부 설립, 법원 "합법"판결/ 어용노조에 부당노동 '합승' - 동경택시, 결근하면 해고
1554	2/15	1	"지원요청 않겠다" 각서 요구 - 청주대, 장애인 편입에 억지조건 제시/ 해고자 미행하는 삼성 - 가는 곳마다 감시/ 경찰 불법사찰 들통나 -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불법녹음
		2	<인권시평> 평화를 위한 반성(윤정숙 한국민우회)/ 주간인권흐름(2월 8일~14일)/ <주요 공판안내>

<인권하루소식> 2000년 2월분 총목차(1546-1564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555	2/16	1	미군문제 함께 풀다 - 매항리 미군 사격장, 주민생존 위협/ <새로 나온 책> 「자퇴일기」
		2	"비공개 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삼암동 주민 경찰서에 연행 - 주민 모두 구치소, 유치장 행/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1556	2/17	1	<매항리 미군 사격장을 찾아> 학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신자유주의 전도사, 강도쉬도 훈장감 - 빈곤인구 1천만 불구, 외환위기 조기극복에 감사패 수여/ '최저생활보장' 요구 -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집회 개최/ 국제연대에 나선 삼미특수강 노동자
1557	2/18	1	"학교에 가고 싶어요" - 불법체류자 자녀 입학 기회 차단당해/ <만화사랑방> 정형근 검찰출두
		2	불법사찰에 고개숙인 서울시경 -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 교육 약속/ 고용승계 요구 쇠시슬 시위 - 둔산자동차 노조원, 농성 305일째/ <논평>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교문의 진실
1558	2/19	1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 김용화 씨 2년제 수용생활/ 민주 학교운영 아직도 멀었나 - 학운 위 선정, 학교장 맘대로
		2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최종수 신부,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1559	2/22	1	"아들이 내가 풀어주마" - 투쟁에 나선 김태완 어머니/ 미군 살인범죄 계속되는데... - 한미 행형 벽 뚫고 사건 처리될지 미지수
		2	<인권시평>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짧은 생각(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주간인권흐름(2월14일~20일)
1560	2/23	1	철도노동자 53년의 숙원 - 직선제 대표선출, 노조와 노동자 대립/ <새로 나온 책> 「평화와 인권」
		2	작은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 거센 반발에 정부, 통폐합 대상 축소/ 동티모르 교통을 넘은 재건 - 6개월간 7백명 사망, 10만의 난민
1561	2/24	1	비전향장기수 51명 복송요구 - 인도적·인권적 접근, 민족화해의 단초/ 이인모 씨 복송 7년 지났지만... 전쟁포로에서 비전향장기수, 이젠 병마까지
		2	<세계노동자공개포럼 참가기> '시애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차미경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1562	2/25	1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해야" - 형사정책연구원, 불법검문 개선방안 제시/ 서울교대, 장애인 입학 허가 - 장애인 교육권 대책 마련 시급
		2	철도노조 민주화 협난 - 현 노조측 청년들 폭력사태 유발/ "교육개혁 실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만화 사랑방> 이태원 여종업원 살인사건 미군만 조사 가능
1563	2/26	1	네티즌 미군 비난 쇄도 - 한국정부, 저자세도 비난/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2	일본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준법투쟁하자 직 장폐쇄 - 경주문화회관노조 상경 13일째
1564	2/29	1	봉천동 화재로 학생들 연행 - 경찰, 뚜렷한 증거 없이 학생들에 혐의 뒤/ <주요공판 안내>
		2	<인권시평> 박하사탕, 그리고 홍자(공선욱 소설가)/ 주간인권흐름(2월 21일~27일)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 부탁드립니다.

미납액이 많은 분은 분납도 가능합니다. 문의 : 02-741-5363(이창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3일(금)

제 156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노동사회연구소 실태조사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2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건설산업 상용직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8.7 시간이라고 발표했다. 법정 초과 근로시간 상한선인 주 56시간을 10시간 넘게 웃도는 노동시간이다. 이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건설연맹)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26개 사업체 6백여 현장 상용노동자 3천4백50명을 대상으로 설문, 면접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이다. 더구나 정부 발주 공사장의 노동시간은 일반 공사장보다도 더 긴 71시간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데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건설연맹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깔 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항상 피곤하고 지쳐 있다(37.87%)", "나도 과로사할 가능성이 있다(14.28%)"고 답한 것은 장시간 노동의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건설연맹은 지적한다. 즉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소홀해지고 결국 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노동자들 입장에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에는 항상 해고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산업에 종사하는 한 건설현장 노동자도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하다보니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하면서도 "하지

만 인원감축의 회오리 속에서 살아남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정부 직무유기, 장시간 노동 불러

이처럼 건설현장의 장시간 노동이 방치된 데에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의 직무 유기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기준 초과 장시간 노동에 대해 노동부나 건설교통부의 조사 및 제재가 없는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조사 대상의 3분의 2(64%)를 차지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2조 연장근로기준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법정기준을 엄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 건설연맹은 이번 조사결과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참여 하에 노동시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촉구하고 있다.

철거민 생활 위협하는 경찰

봉천3동 화재 연행자, 집시법 구속

지난 27일 봉천3동 용역 사무실 방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던 사람들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화재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혐의로 구속됐다(관련 기사 본지 2월 29일자 참조). 이에 화

재사건을 빌미로 사람을 연행해놓고 별개 사건으로 구속하는 경찰의 처사는 철거민 조직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고있다.

이번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관악경찰서는 애초에 '주민 김삼초(전 철대위위원장) 씨를 주범으로 보고 학생들을 공범으로 몰아 수사를 진행'했으나 학생 5명은 모두 29일 석방됐으며, 김 씨만 구속했다. 그러나 관악경찰서는 김 씨의 구속사유에 대해 '상업동감제철거 항의집회에 참가와 관련한 '집시법 위반'과 흥기소지(쇠파이프)와 구호의지(철거반대) 등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며 이번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철거에 반대하고 있는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참고인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철거민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용역사무실 화재에 이어 28일 새벽에는 빈집에 화재가 나는 등 봉천3동 철거지역에서만 2월 들어 모두 4건의 빈집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의 빈집화재는 철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이후부터 발생해 7,8월에는 한달에 15건 이상 발생하기도 했으나 관악경찰서 측은 수사담당자를 밝히지 못하는 등 빈발하는 화재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회피하는 형편이다.

28일 화재진압에 나섰던 주민 김규영(세입자대책위원장, 44) 씨는 "화재에 대한 조사는커녕 당국에 의한 화재진압도 이뤄지지 않아 스스로가 진화해야 하는 실정이라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7일 화재이후 주민들은 다원용역들에게 더욱 노골적인 폭력과 폭언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몸매를 맞거나 위협을 당해 심지어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 용역들은 29일 주민들이 철거대책위 사무실로 사용하면 건물마저 철거했다.

철도노조, 위원장 등록 방해 의혹

공투본, "등록 사무실 하루종일 닫혀있었다"

노조대표를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철도노조(위원장 김기영)측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위원장 입후보 등록을 막기위해 입후보 등록 사무실 문을 잠궈놓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2월 23일 자).

철도노조는 오는 7일 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철도노조 대전사무실에서 위원장 입후보 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후보 등록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대전사무실을 방문한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대표 황영호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입후보 등록을 받기로 한 시간동안 사무실은 굳게 닫혀있었다.

공투본의 강제한 집행위원장은 "오전 8시 30분부터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으나 출입문에 서울출장 중이라는 핏말만 걸려있었을 뿐 사무실은 하루종일 잠겨있었다"며 "노조측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노동자들의 입후보를 막기 위해 등록 장소를 비운채 문을 잠그는 파렴치한 행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김현중 기획실장은 "공투본 관계자들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꾸민 거짓말"이라며 "현 노조 위원장인 김기영 씨가 그 시간 동안 단독으로 입후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중 간선제에 의한 노조대표 선출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철도노동자들은 노조대표 선출 문제를 놓고 간선제를 유지하려는 철도노조측과 대립을 벌여왔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노동자들의 총회요구를 무시한 채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강행해 83명의 지부장 중 53명의 지부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투표용지에는 반대여사를 표명할 수 없는 기표란이 없어 3백명의 노동자 중 15명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가 지부장으로 선출되는 등 파행이 계속돼왔다.

공투본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에 있

는 철도노조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조측의 행위를 규탄할 계획이다.

▼반대 기표란 없는 투표용지 ▼정상적인 투표용지

기호	1
성명	임승제
기표	

기호	1
성명	임승제
기표	찬
표	반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위험수위!

최근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지난 25일 체불임금지급, 단체협약체결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은 서울 마이크로노조와 서산 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 노동자들은 경찰로부터 혹심한 폭행을 당했다. 이들이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종합청사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이 방패와 곤봉들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것. 당황한 노동자들이 물러설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의 폭력은 계속돼, 최우탁

한국우주항공노조 조합원은 넘어진 상태에서 뒤통수를 방패로 찍혀 얼굴뼈가 함몰되고 귀가 찢겨 20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마이크로 노조 허영희 조합원 역시 1m가 넘는 곤봉에 맞아 실신했으며, 고영준 한국우주항공노조 조합원도 부상을 입고 얼굴을 11바늘이나 꿰매야했다.

노동자 16명이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자 금속연맹 등 노동계는 과천경찰서장의 사과는 물론 책임자 징계와 치료비 전액 부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정공 노동자들도 최근 경찰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정공노조의 김재갑 홍보부장은 "지난달 20일 사측이 노조원들을 강제로 홍익대로 데리고 가는 일이 발생해 노조원들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홍익대를 방문하자 3백여명의 경찰들이 몰려와 노조원들을 폭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조원 4명이 심한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신현훈 투쟁국장은 "경찰이 최루탄 사용을 자제하는 등 평화집회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집회 때 노동자들과의 몸싸움을 유발해 노동자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연행해 구속하거나 폭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특히 요즘에는 노동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 폭력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4일(토)

제 156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해고자 구속” 경찰과 논의

한화, 해고자 농성 와해 기도

‘한화’(주) 인력관리 부서 관계자들이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을 깨기 위한 주동자 구속방안을 경찰과 논의하는 과정이 우연히 목격돼 충격을 주고있다. 목격자는 범위운수 소속 노동자 정만근 씨. 그에 따르면 2일 낮 한화 본사 인력과 관리팀장 등 한화구로공장(오토론) 관계자 4명이 남부경찰서 정보과를 방문해, “해고자들이 회사 앞에서 농성을 계속해 신경이 쓰인다”며 “집행유예 기간인 해고자가 주동자인데 그 해고자를 다시 구속시킬 방안은 없느냐”고 의논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집회신고 차 경찰서를 방문했다 우연히 이상황을 목격한 정 씨는 “실마 했지만 오전에 오토론 노동자들을 만났던터라 대화 내용이 낱설지 않았고, 그중 한명은 전에 오토론 회사 앞에서 본적이 있던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1시간 정도 후 정 씨가 목격했던 사람 등 4명이 탄 승용차가

회사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돼 정 씨의 주장은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오토론 해고노동자들은 사측의 만행을 폭로한 대자보를 작성해 회사 문 등에 붙였다. 그러나 사측은 직원들을 동원해 자보를 찢고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노동자들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태는 해고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이 달려온 후에야 끝났다. 농성중인 해고노동자 정미정 씨는 “최근들어 사측의 탄압이 심해져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다”며 “그래도 한술밥 먹던 사람들이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 오토론 해고노동자 농성문제

오토론 해고노동자 12명은 지난해 체불상여금 문제를 노동부에 진정한 것이 문제가 돼 중징계를 받은 후 해

고됐다. 이들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3일 현재 287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종 이상희 씨는 지난해 말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돼 올 1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99년 10월 9일, 11월 20일자 참고).

농협, 악수에 악수 거듭

비료문제 항의하던 농민 연행돼

불량비료로 인해 한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상경 농성이 보름째 계속되는 가운데 3일 규탄 집회를 개최하던 농민들이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강원도 정선, 태백 등 고령지 지역 농민들은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농협과 남해화학(윤영호, 경북 청송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자)이 제조, 판매한 BB비료로 인해 막대한 작물피해를 입었다. 남해화학이 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료를 제조해 농작물이 다 죽고 만 것. 이에 분노한 농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농협은 남해화학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남해화학측 역시 “토양상 문제”라고 변명하며 소액의 위로금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농협중앙회관(서울 서대문) 앞에서 농성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농협측은 사과를 커녕 이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결국 3일 오전 농성에 참여한 농민 5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현재 서울 시내 11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의 김규영 총무부장은 “농협측이 농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현수막과 만장을 찢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농성은 물론 농협회장 퇴진투쟁과 남해화학 사장 낙선투쟁 등 강도 높은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와 동정

- 통일 강좌 143회 중 그 첫번째 - “통일 미래를 이야기한다”
 - 때: 3월 3일(금) ~ 5월 26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정도회관 3층 강당(참가비 3만 5천원)
 - 강좌: 북한의 식량난과 난민문제, 남성적 질서의 분단과 극복 등
 - 주최: 좋은벗들(담당 김윤태 02-587-8996)
- 3·8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 대회’
 - 때: 3월 11일(토) 오후 2시
 - 장소: 서울 종로공원
 - 주최: 민주노총(02-2635-1133)
- 3·8세계 여성의 날 기념 16회 ‘한국여성대회’
 - 때: 3월 12일(일) 낮 12시 30분
 - 장소: 서울 KBS홀
 - 행사: 99년 여성권의 디딤돌·결립돌 발표, 2000년 기념 여성선언 등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02-2273-9535) * 입장료: 5천원

<특별기고> 제주 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

엄혜진(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제주인권학술회의 2000, 나로서는 이 회의의 전반을 아우르는 평가를 하기가 조금은 곤혹스럽다. 베트남 참전과 관련한 인권문제, 빈곤층 어린이의 인권, 독신모의 모성과 여성성, 에바다 사태의 전개과정과 전망, 인연동화재사건을 통해 본 청소년의 인권, 가족구성에 관한 여성의 권리 등 인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30여 개의 구체적인 각론들이 색선으로 촘촘히 짜여져 있어 모든 내용들을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병렬식 구성은 인권운동의 방향성에 관해 총론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다양한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의 사례들과 그에 대한 운동의 현황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더 적절해 보였다. 따라서 회의 첫날, ‘왜 소수자의 인권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던 한인철 교수(서울대 법대)가 인권과 소수자 권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보다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 고양에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한 것은 이 학술회의의 미덕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이었다.

“가해자의 인권” = 인권의 감수성?

회의 둘째날,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에 관한 토론을 지지하겠다고 제주지역 베트남 참전 군인회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있었다. 이 때 한 토론 참석자가 ‘가해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며 “토론 발제자가 그들을 도발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인권의 감수성이 가해자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이야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조건 질타할 수 없는 일이지 이번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는 인권운동이라는 것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적 장벽을 뛰어넘어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민중들 간의 연대운동이라는 원칙부터 확립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반증은 아닐까?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인

권운동의 한계나 강대국의 수혜적 혹은 수사(修辭)적 인권정치에 대한 비판은 물론,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의 세계화가 초래한 다수의 사회적 배제가 인권 개념의 확장을 그 어느 때보다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서 확인했다더라면 좀더 질적인 ‘인권’의 감수성이 가능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억압하는 현실과 그들의 인권의 문제를 ‘일상’으로부터 끌어낸 점은 주목할만했다. 특별히 “선발된” 100여명의 학자와 활동가들 간의 의식수준의 차이가 예상 외로 커서 사실 좀 선별의 기준에 대해 의아해 했는데, 토론에 참여한 일부 남성 참가자들의 반여성적, 혹은 여성비하적 발언은 이 ‘일상’의 인권 억압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젊은 여성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남성 참가자들의 이러한 일상적 반인권 행위나 의식에 내재한 위계문화에 대한 항의성 대자보를 붙이는 ‘즐거운 반란’이 시작된 것은 둘째 날부터였다.

불붙은 대자보 논쟁

▶...한 남성은 이로 인해(대자보 폭로 때문에) 남성들이 “불편”하고 “위축”되었다고 말했다. 여성비하 발언으로 불쾌감(개인에 따라서는 모욕감과 분노)을 느낀 여성의 상처나 기분 보다는 남성들의 감정이 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좋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노동자나 장애인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해도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했을까? 가부장제 사회에서 “타자”로 처리되는 여성들은 24시간 내내 위축감과 소외감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남성들은 단 며칠도 그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되는가?...

▶...어제 발제자들의 발제가 끝난

후 00대학의 한 교수님께서 일어나서 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 “000 씨에게 충고 한 마디 하겠다”(000 씨는 젊은 여성이었다-인용자 주)로 시작된 교수님의 지적은... 교수님과 000씨는 똑같은 연구자의 입장이다. ...다 같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동료 연구자의 논문 발표 자리에서 “충고”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

▶...대자보에 씌어진 글들에서 힘을 얻어 저도 한자 적어보려 합니다. 25일 학술회 첫날 기초발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간단히 저의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이 미흡하다라는 한미디와 사회자까지 동승해서 저의 질문을 무참히 매도해버렸습니다...

가볍지 않은 논의를 기대하는 마음

위의 내용은 학술회 자리에서 붙여진 대자보의 내용 중 일부이다. 만약 학술회 기간 동안 내내 뒤흔었던 ‘인권의 감수성’이라는 화두가 여성활동가들의 이러한 거침없는 문제제기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나는 어쩌면 이번 회의에 대해 다소 격양된 비판을 가했음지도 모르겠다. 즉석에서 소모임이 꾸러져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으니 풀뿌리 민주주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 좀 과한 것일까?

일급 호텔에서 값비싼 음식을 먹으며 자원활동가들의 빈틈없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나로서는 다소 곤혹스러웠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너무 경직된 모습을 가졌다고 비판할지도 모르겠지만, 형식은 내용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소박하되 궁하지 않으며 열려있되 가볍지 않은 인권의 논의를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나만이 아니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7일(화)

제 156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경찰, 시민폭행 말성

시위현장 지나던 시민 법적투쟁 준비

시위현장을 지나다가 전경들에게 폭행을 당한 시민이 법적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오후, 통일운동가 김양무 씨(법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노제가 진행되고 있던 종로공원 주변. 길을 지나가던 윤지현 씨(28세)는 현장에 배치된 전경들이 인도를 가로막고 통행을 차단하자 다른 시민 약 30명과 함께 이에 항의하면서 길을 열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시위는 차도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인도 통행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던 것이다.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전경들이 윤 씨를 차도로 끌고 가 구타를 가했으며 윤씨가 쓰고 있던 안경이 파손·분실되는 일이 발생했다. 윤 씨는 구타는 없었던 걸로 할 테니 안경만은 찾아달라고 호소했으나 전경들은 "집에 돌아 가라"며 막무가내로 윤 씨를 밀어낼

뿐이었다. 격분한 윤 씨는 전경이 들고 있던 핸드마이크 선을 붙잡고, 폭행을 가한 부대의 소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나와 전경들로 하여금 윤 씨를 에워싸게 한 뒤 핸드마이크 선을 잡고 있던 윤 씨의 오른손을 비틀었고, 고통을 느낀 윤 씨가 잡고 있던 선을 놓았음에도 한번 더 손목을 꺾었다는 것이다.

15일, 고대안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윤 씨는 다발성 타박상 및 우 요골 골절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윤 씨는 인터넷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그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증인을 찾았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당시 사건을 지켜보았다는 시민 2명이 나타나 법정에서 기꺼이 증언할 뜻을 알려온 것. 게다가 당시 경찰관이 윤씨의 팔을 비트는 장면이 찍힌 사진까지 제공하는 시민이 나타났다.

윤 씨는 지금 폭력경찰관을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소한 문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길이라 믿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덕우 변호사는 "경찰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나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면 경찰 내에서의 인권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동티모르 유민 아직도 십만명 유엔, 동티모르 유민 숫자 공식 발표

지난 해 8월말 주민투표 이후 발생한 동티모르 유민의 숫자와 현재의 상황이 유엔 사무총장 파견 국내유민 담당관, 프란시스 덩 씨에 의해 지난 1일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덩 씨에 따르면, 동티모르 내 산으로 피신한 사람의 숫자는 총 5십만 명이며, 현재 그 중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하지만 주민투표 이후 서티모르로 달아나거나 강제 이주된 총 24만 명의 유민 중 오직 14만 명만이 귀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티모르에서 동티모르로 귀환하는 길목에 아직도 많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덩 씨는 밝혔다.

유민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한 방안으로, 덩 씨는 "유엔의 주최 하에 매주 열리던 서티모르 내 동티모르 유민과 귀환 가족의 상봉 행사가 우선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민간감시단의 숫자를 늘리는 등 유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덩 씨는 지난 달 26일부터 3월 1일까지 5일 간 동티모르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이달 20일 경부터 6주간 열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발표할 예정이다. -이주영-

주요공판안내

■ 3월 7일(화)

· 양지마을 사건(민사소송) -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 3월 9일(목)

· 이상준(손해배상) - 오전 10시, 서울고법 305호, 항소심 신진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8·15통일축전 행사에 참가했으나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한쪽 눈이 실명됨.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3월 10일(금)

· 함선규 외 6명(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 오후 4시, 서울고법 303호 98년 말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회원 7명이 구속된 사건으로, 1심모두 유죄를 선고받음

· 송계호(가석방취소처분 취소소송) -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202호 98년 준법서약서를 쓰고 8·15특사로 출소했으나 이후 준법서약서 폐지 농성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 됨.

인권
시평

이제는 평화를 이야기 하자

이재훈(한겨레신문 기자)

평화.

이 익숙하고 따스한 느낌의 말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평화는 멀기만 하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처럼. 지구 위에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사회는 평화운동의 불모지에 가깝다. 분단과 폭력이 난무했고, 지금도 여전한데, 평화는 왜 이리 멀기만 한가. 통일운동 단체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평화운동 단체는 왜 손가락으로 꼽아도 될 만큼 적은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 며칠 전 만난 한 통일운동가는 몹시 답답해 했다. "전통적 통일운동 방식"으로는 더 이상 활로를 모색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보인다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 통일운동에 평화운동을 접목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통일운동에 평화운동을 접목한다? 당연한 일 같지만, 이런 발상은 한국사회에서 그리 익숙한 게 아니다. 생각해볼 일이다.

통일운동과 평화운동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아마도 통일운동에 인권의 시각을 투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리라. 하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통일(운동)은 대체로 민족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하여 일상적으로 '매춘부'라 비난하던 한 한국여성이 미군에게 성폭행 당한 뒤 살해당하면 '순결한 우리의 누이'라 달리 부른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매춘부'와 '순결한 우리의 누이'는 같은 사람이다. 그것이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두 호칭 사이에는 한국사회의 '이중잣대'가 가로놓여 있다. '너'와 '나'는 다 같은 사람이라는 마음. 성별과 인종과 민족, 학력, 경제력의 차이를 뛰어넘어 누구나 '같은 사람'이라는 보편적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실천하는 일, 그 지점에서 통일운동은 평화운동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2000년은 '한국전쟁' 또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반세기가 되는 해다. 유엔이 올해를 '평화문화의 해'라 정해 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 민족분쟁 등 야만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지구촌 인류의 인권을 위해 이제는 정말 평화를 이야기할 때이다.

제2차 바티칸공회의 '현대 세계의 시목현장'은 평화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요 적대세력간의 균형유지만도 아니며, 전체적 지배의 결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다. 더욱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현실화가 바로 평화이다."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8일 - 3월 6일)

1. 살인적 노동시간,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 등이 건설노동자 3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1주일에 평균 69시간이상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 발주 공사장의 경우 71시간으로 정부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

2. 법무부의 떠돌아진 시각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의 보안관찰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운동 및 재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간첩"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인권단체가 반발(2/29)

3. 농협, 물량비료 해결 촉구한 농민 경찰서에 고발
농협과 남해화학이 만든 불량비료로 인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농협중앙회 앞에서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해왔으나 농협측의 고발로 3일 전원이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돼(3/3) ...이튿날 58명 전원이 석방됐으나 그중 49명은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4. 지방참정권 부여에서 배제된 조선적
일본 여당이 조선적 동포들을 제외한 체 재일동포 등 재일 영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을 제정하기로 하자 재일동포들이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반박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운동에 나서(3/1)

5.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 2동과 잠실 등 재개발지역 아파트 밀집 지구에 땅값이 비싸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인 초등학교 교육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3/3) ...동작구의 경우 한 학급당 학생수가 60명이 넘거나 통학거리가 30여분이 넘는 상태

6. '나는 억울하다'
경찰이 27일 발생한 봉천 3동 철거용역원 사무실 화재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과 대학생들을 대거 연행했으나 모두 화재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주민 1명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해 억지 수사라는 비난을 샀다.(3/1)

<수치로 보는 인권>
작년 노동자 월소득이 상위 20%는 4백47만원인 반면 하위 20%의 경우 81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 발표(3/3) 지난해 소득격차는 79년 이후 '최대' 수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전·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8일(수)

제 156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간선제 죽어도 양보 못해”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소화기 날라간 전쟁터

노조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철도노조 (위원장 김기영)와 소속 노동자들이 극심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7일 대의원대회 개최 장소인 성류파크 호텔 (경북 울진군)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3일 자).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대표 황영호 등)는 현 노조가 간선제 방식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함에 따라 7일 열린 대의원대회를 지지하기 위해 6일 저녁 7시경 개최 장소인 성류파크호텔을 방문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측은 이미 투숙객 신청이 돼있던 이들의 호텔진입을 가로막았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은 자정이 넘도록 극렬한 대치를 벌였다. 결국 7일 새벽 5시경 공투본 노동자 90여명이 호텔진입을 시도하자 2백여명의 철도노조 노동자들은 병과 소화기를 던지면서 이를 저지해 주변은 금세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망으로 병조각과 소화기 분말이 쏟아지면서 질식한 노동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공투본 소속 노동자 10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또한 공투본 소속 부산 정비장의

한 노동자는 철도노조측이 동원한 항운노조 조합원 윤자열 씨가 던진 소화기에 머리를 맞아 119 구급대에 실려 갔다. 하지만 싸움은 7일 낮까지 계속돼 주변엔 평평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투위, 대의원대회 무효선언

한편 철도노조측은 7일 오전 9시 50분경 48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호텔 복도 안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김기영 현 위원장을 재선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약을 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투본측은 대의원대회의 무효를 선언하고 “직선제로 규약을 개정했다하더라도 현 집행부가 이 위기를 넘기면 언제든지 규약을 간선제로 개정할 소지가 있다”며 “총투표를 통한 규약개정과 직선제 방식을 통한 노조대표 선출”을 강력히 촉구했다. 따라서 공투본은 오늘과 내일 서울역 광장에서 총선거 실시를 위한 총력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법원에 ‘선거무효 및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유해정>

<속보> 또 다시 국보법 연행

한동안 잠잠하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또 다시 터졌다.

7일 경찰청은 김대권 (단국대 정치학과 4년으로 추정), 안우춘 (단국대 사학과 4년), 박현정 (연구사 직원), 이광렬 씨 등 4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홍제동 대공본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정확한 혐의 사실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안 씨가 IS(한국사회주의자방위위원회)와 관련해 구속됐었고, 박 씨 역시 현재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책갈피 대표 홍교선 씨의 일을 도와 온 바 있어 IS사건으로 추정된다. <김보영>

새로 나온 책

『눈빛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랑』

2000/ 채지민 글·그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펴냄/ 92쪽

“제 꿈은 동화 속에만 있는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저와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아요.”

때어날 때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소연이는 아이들의 따돌림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소연이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좋은 나라’를 꿈꾼다.

진리의 전달이라는 대학에서조차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들의 대학입학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두 아이를 통해 장애는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따뜻한 책 한권이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함께사는 세상만들기’의 3번째 작품인 이 책은 평범한 대학생이 청각장애인 소연이와 민태를 만나면서 알게되는 장애인들의 아픔과 희망을 그리고 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로 전하고 싶어 가수를 꿈꾸는 귀여운 꼬마 소연이와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되면서 깊은 슬픔에 빠진 아이 민태. 이들은 부모님과 대학생 지선이의 도움으로 희망을 되찾고, 지선과 부모님 역시 아이들을 통해 ‘장애’는 몸이 아닌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는다.

동화책 형식으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는 이 책은 초등학교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문의 02-521-5364) <유해정>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①>

여성인권 위협하는 빈곤의 여성화

‘세계 여성의 날’이 92주년을 맞이했다. 1908년 오늘, 인간다운 삶을 요구했던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은 아직도 달성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여성이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새로운 세기를 설계하기 위해 성취해야 할 인권의 과제가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21세기에는 여성성과 여성적 감수성이 대립하는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는 희망적 예측이 곧잘 신문 지상을 오르내린다. 하지만 오늘날 전세계 여성들의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단순한 수사(修辭)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는 대다수 여성들이 여전히 시장의 폭력과 제도화된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

지난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하루 소득이 1달러에도 못미치는 15억에 달하는 절대빈곤 인구 가운데 70% 가량은 여성이 차지한다. 또 전체 성인 인구 가운데 문맹인구가 10억을 넘고,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여성들이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됨으로써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 여성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98년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0% 정도에 불과하다. 노인 단독가구 가운데 87%를 차지하는 여성노인의 대다수가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현실도 빈곤이 여성의 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후들이다.

가속화되는 여성의 빈곤

더 큰 문제는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지배가 빈곤의 세계화와 더

불어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 이는 IMF체제 이후 지난 2년간 우리 사회가 경험한 바이기도 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생계부양의 보조적 존재라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의 공세 아래 우선 해고의 대상이 되었다. 실직여성의 재취업을 은 남성의 50%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성화하는 경향도 여성의 빈곤문제를 더욱 증폭시킨다. 물론 이전에도 여성들은 노동시장과 가족 내에서의 성별분업으로 인해 4인이하 영세사업장이나 계약직·시간제 등 주변부 노동시장에 집중돼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여성을 계약직·임시직으로만 신규 채용하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해 왔다.

1월 현재 남성노동자의 42%가 비정규직인 데 반해,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70%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고서도 정규직의 40~60%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 각종 수당과 복지혜택에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까지 고려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의 복지정책이 빈곤의 여성화 흐름을 역류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복지정책이 대개 ‘기여에 따른 분배’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득 재분배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여성의 빈곤문제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임금과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급여액이 높다. 낮은 임금과 높은 이직률을 특성으로 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당연히 낮은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어 노후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난해 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빈곤의 여성화를 낳는 제도화된 여성차별과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유지한 채 제시되는 사후정책은 모두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배경내>

<투쟁하는 여성들> 성차별적 해고에 맞선 여성노동자

“회사를 그만둘 땐 이렇게 싸울 수 있으리라 생각 못했어요.”

지난해 1월 사내부부 우선 해고의 희생자가 됐던 김미숙 씨. 어느덧 김 씨는 자신을 비롯해 6백8십8명의 여성들을 ‘짜른’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싸움의 가운데에 서있다.

소송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싸워봤자 노동자가 질 것”이라는 주위의 말들은 낭패감을 안겨주곤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김미숙 씨와 동료 김향아 씨는 농협중앙회를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법에 고소했다. 또 서울지방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냈다. 뒤따라 지난 12월 서른 여섯 명의 동료들이 2차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김 씨와 그의 동료들은 검찰(담당검사 강찬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검찰이 농협을 기소할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2월부터 “곧 결정될 것”이란 말만 되풀이한 채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김 씨의 계약직 기한마저도 만료됐다. 농협측은 여성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과 함께 계약직 전환을 강요하면서,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계약직으로도 1년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이다. 지금은 비록 일자리를 떠나지만 정규직으로 당연히 복직할 날을 그는 기다린다.

한편, 김미숙 씨와 김향아 씨는 올해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여성단체들이 뽑은 여성인권신장의 디딤돌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9일(목)

제 157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국보법 억지 수사 기지개

무리한 긴급체포, 불법 도청 의혹

지난 7일 IS(사회주의자한국방어위원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흥재동 보안수사대에 연행된 사립은 안우춘, 박현정, 김대권, 이광열, 오승민, 임미정 씨 등 모두 6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국이 구체적 증거 없이 무리한 연행을 되풀이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군을 제대한 안 씨는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제대 후의 통화내역과 모든 행적을 제시하고 있어 불법 도청·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연행자인 박현정(출판사 '연구사' 직원) 씨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

반 혐의로 재판중인 홍교선(책갈피 대표) 씨의 자료수집을 도와준 바 있지만 IS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에 의하면 단지 흥 씨가 선물로 준 책과 IS가 발행한 '노동과 연대' 신문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경찰은 7년 전에 활동을 그만두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오승민 씨를 연행해 억지 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안우춘 씨의 가족들은 안 씨가 연행된 7일 오후 면회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흥재동 보안수사대는 "조사중이기 때문에 면회거절

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이들을 접견한 이상희 변호사는 △가족들의 면회신청을 거부한 점 △IS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단순히 책갈피 출판사 책과 노동자 연대라는 신문을 소지한 것을 문제 삼은 부분 △명백한 혐의없이 긴급체포한 문제 △감청이 합법적이었는지 등이 주요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영]

서울대 시설노조, 서명운동 돌입

학생과 함께 용역소장 퇴진 촉구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96년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학생들과 함께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2월 17일 자).

경비원, 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서울대 시설노조, 위원장 윤홍림)과 「서울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학생대책위원회」(시설관리 학생대책위)는 지난 7일부터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현 위탁관리업체인 대호(대표이사 조규석)와의 계약 철폐 △용역소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8일 오후 6시 현재 서명에 동참한 사람은 약 7천여명. 이들은 오늘까지 서명을 받은 후 이 서명용지를 모아 대학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설관리 학생대책위의 강진석(공대 4년) 씨는 "대학본부가 노동자들이 한 달 32만원의 박봉과 대호측에 의한 퇴직금 포기각서 작성 등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학생들과 함께 대호는 물론 대학본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유해정]

행사와 동정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번 주는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 올해로 92주년을 맞이하는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5천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뉴욕 루트거스 광장에 모여 "하늘아래 여자와 남자는 다를 수 없다"고 선언한데서 유래했다.

- "여성노동자! 주변에서 중심으로!" 전국여성노동자 대회
 - 때: 3월 11일(토) 오후 2시 · 장소: 서울 종묘공원
 - 내용: 비정규직 차별 철폐, 생리·보육휴가 보장, 여성 참여확대 등
 - 주최: 민주노총(02-2635-1133)
- "새로운 천년, 빈곤과 폭력없는 세상을 위하여" 한국여성대회
 - 때: 3월 12일(일) 낮 12시 30분 · 장소: 서울 KBS홀
 - 실내용: 99년 여성권의 디딤돌·결집돌 발표, 2000년 기념 여성선언 등
 - 거리, 야외행사: 여성미술전, 부패정치인 추방을 위한 여성 대행진 등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02-2273-9535) * 입장료: 5천원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제6차 정기총회 및 토론회
 - 때: 3월 11일(토) 오후 2시(토론은 3시부터)
 - 장소: 연세대 신상경관 B109호
 - 토론 주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방향(민영화 반대투쟁)
 - 프로그램: 철도, 한국전력, 외국사례 등의 소개와 공공연맹 등의 토론
 - 주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02-874-2933)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2>

여성의 몸에 대한 일상화된 테러

유엔은 "공적 혹은 사적 삶의 영역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성적(sexual) 혹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성에 기반한(gender-based)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한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여성의 존엄성을 총체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여성 인권을 위협하는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여성들은 일생을 통해 단 한 번도 '안전한 밤길'을 걸어보지 못한다. 거리뿐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사이버 공간 등 일상의 곳곳에서 성희롱, 강간, 구타 등의 폭력에 직면한다. 대개 이러한 폭력은 가장, 교수, 고용주, 어른 등 남성들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종속적 관계에 놓인 여성들은 이에 저항하기 힘들다.

우리의 경우, 최근 10년간 성폭력특별법에서부터 가정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지난해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법에 이르기까지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법과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여성의 일상은 전쟁터

매매춘(賣買春) 역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또다른 얼굴이다. 매매춘의 과정은 돈의 힘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남성이 여성의 몸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소유하는 과정이므로, 매매춘은 흔히 매춘남성의 폭력의 대상이 된다. 또 매춘여성들의 상당수가 과거 강간과 학대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 동기가 무엇이든 일단 매매춘구조 속에 빠져들고 나면 매춘여성이 업주나 중간착취자 등에 의한 폭력과 착취의 대상으로 노예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또다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의 지원과 육성정책 하에 형성된 기지촌의 존재, 외화획득이

는 미명하에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매춘코스를 집어넣는 관행을 묵인해온 정부의 태도는 국가권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조하거나 오히려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무력갈등 하에 증폭되는 폭력

특히 무력갈등 하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더욱 파괴적이다. 종군위안부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 무력갈등 하에서 여성들은 조직적 강간, 성노예(sexual slave), 성고문, 강제불임, 강제임신 등 성적 폭력의 희생양이 된다. 동티모르, 르완다, 구 유고, 버마, 코소보 등 대다수 무력갈등 상황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이러한 현상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하나의 전술로서 활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게이 맥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 보고관은 그 이유로 △적들을 극도의

공포에 떨도록 만들고 △여성이 속한 집단의 명예를 공격함으로써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강제임신 등을 통해 인종청소의 효과까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의 몸을 하나의 전리품으로 간주하는 남성중심적 전쟁 질서도 한 몫 한다.

제주 4·3항쟁과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여성들이 성고문과 강간 등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던 사례는 타민족이 아닌 국가권력에 의해 가해진 대표적 테러행위.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폭력행위가 처벌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인도적 범죄행위이자 인권침해로 간주하지 않고, 여성과 그 공동체의 수치로만 여기는 사회적 태도가 여성에 대한 폭력에 침묵하도록 만들기 때문. 무력갈등이 종식된 이후에도 피해 여성들이 일생을 통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역사적으로 고착되어 온 성의 불평등, 여성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행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없이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여성의 삶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배경내]

<특쟁>는 여성들) 매매춘 여성의 인권에 주목한다!

순전히 타인들에 의해 '창녀'와 '순결한 우리 누이' 사이를 오고가는 기지촌 여성. 그들의 문제를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가 바로 그들.

"매춘여성들은 경제적 착취, 감금, 폭행 등 일상적 폭력 속에 살아갑니다. 또 금전을 매개로 한 성 관계는 평등할 수 없습니다." '여성주의자 연대'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는 매매춘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렇다면 군사주의는? "군대에서는 남성문화의 부정적 측면인 '폭력성'이 극대화되고, 그것은 성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봐요. 이런 점에서 기지촌 여성은 매매춘과 군사주의, 이중적 억압의 희생자인 셈이죠."

'여성주의자 연대'가 미군부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주목하게 된 데는 기지촌 자원활동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지난 해 9월 동두천 기지촌에서 발생한 이정숙 씨 사망사건은 '여성주의자 연대'가 구성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정숙 씨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모였던 이들이 기지촌과 매매춘 전반의 문제를 계속 고민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은 것.

앞으로 '여성주의자 연대'는 "우선 '창녀'라는 낙인 속에 스스로를 묶어둔 채 살아가는 기지촌 여성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겪는 일상적 폭력의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인 말, "사람이 죽을 때만 반짝하는 선정주의적 접근으로는 절대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를 풀 수 없지요."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10일(금)

제 157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이태원 미군전용술집 여 종업원 살해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가 웹사이트에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을 올려 사회단체의 반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글에는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충분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사회단체의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웹사이트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이란 글을 올리고 주한미군범죄와 관련해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의 사법권에서 벗어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 '현행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서는 미군 상호간의 범죄와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 외에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

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의거해 우리 당국은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85년부터 98년까지 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 것은 불과 1.7%(법무부 통계)"라며 "91년 개정된 SOFA로 인해 형식상 한국정부의 사법권 행사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위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한국측의 사법권 행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의 이장희 상임대표 역시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곤 미군이 요청하면 한국정부가 재판 행사권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며 "나아가 범인구속 이후에나 한국측 신병인도가 가능하고, 미군관계자가 참

석하지 않은 상태의 진술은 법적 효력도 없어 초동수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지촌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새올터'의 김기영 사무국장은 "일선 경찰들이 미군범죄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는 오랫동안 지속된 사대주의와 미군범죄의 경우 외압이 심해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피해의식이 낳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SOFA 개정 국민행동」 등은 국방부 앞으로 위 문서에 대한 반박문과 형의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유해정)

경기대, 로비명단 삭제 강요

「경대학보」, 1면 백지 발간

경기대가 정치권, 검찰 간부 등 유력 인사에게 명절선물로 5천여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기대측이 이 사실을 보도하려던 자 대학 신문기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기사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총학생회를 통해 학교측의 거액 로비 사실을 확인한 「경대학보」 기자들은 지난 7일자 「경대학보」 1면에 위 내용을 전면 보도하려 했다. 그러나 이문의 주간교수(행정처장)는 "폐간을 했으면 됐지 절대로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며 기사삭제를 요구했고, 결국 7일자 「경대학보」는 1면 기사가 통째로 빠진 백지상태로 발간됐다.

「경대학보」 편집장 방극원 씨는 "기자의 양심상 학교측 요구대로 할 수 없어 백지상태로 신문을 발간했다"며 "빠진 기사와 로비명단을 유인물로 만들어 학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대 총학생회는 "학교측의 명백한 대학언론 탄압"이라며 "로비사실은 물론 이 사태에 대한 학교측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유해정)

만화사랑방



이동수

만화

퇴장 시켜 버릴까요?

경찰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③>

여성 인권, 국제적 보장의 발자취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다."

이런 외침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본격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인권의 중심 화두로 자리잡은 것은 1993년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 그 논의의 결과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은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선언하며 "여성의 정치·시민·경제·사회·문화생활에의 동등한 참여와 모든 성차별의 철폐를 국제사회의 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1995년에 열린 북경여성대회는 비엔나 대회의 원칙을 보다 구체화해 분야별 전략 목표와 행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여

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철폐를 중요한 인권 문제로 받아들인 신호탄이다.

지난 5년여를 돌아켜 볼 때, 여성 인권에 드러운 그림자는 여전히 짙지만 몇 가지 제도의 진전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로서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반인도적 범죄

1998년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문서는 "강간·성적노예·강제매춘 및 불임 등"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전쟁 중에 발생할 경우엔 전쟁범죄를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게다가 이 문서는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까지 포함하는 획기적 진전을 보여 주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앞서 처음으로 강간을 반인도적 범죄의 증거로 인정한 것은 1993년에 설립된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였다. 구 유고슬라비아 내전 중에 일어난 조직적 강간·성노예·강제임신 등이 던진 충격의 결과였다.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 조약'(아래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대한 선택의 정서의 채택도 빠뜨릴 수 없는 성과다. 1979년 채택된 여성차별철폐조약은 여성인권보장의 이정표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조약 가입국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인권 피해자는 달리 호소할 길이 없었다. 이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어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이 직접 유엔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선택의정서는 3월 현재 28개국이 서명한 상태다.

'약속'을 '실천'으로

이러한 제도적 성과 뒤에는 항상 차별과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들 스스로의 노력이 있었다. 현재 전세계 여성들은 또 한차례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올 10월 전세계 각국에서는 '세계여성대행진'이 열린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을 비롯해 146개국 3천5백여 단체가 참가 의사를 밝힌 이 행사의 주제는 '빈곤과 폭력의 추방'이다. 이 속에서 여성들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종식, 제3세계 부채담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요구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여성의 빈곤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폭력의 추방을 위해서 이들은 여성차별철폐조약 및 의정서의 비준과 이행을 국가들에 촉구한다. 물론 국제형사재판소 법령의 비준 또한 빠지지 않는 요구다.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기준'은 충분히 존재한다. 정작 필요한 것은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일일 것이다.

(이주영)

(투쟁하는 여성들)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학생법정 준비위원회'

대학생들이 '일본군 성노예 전범(戰犯)'을 법정에 세운다. 오는 4월 28일부터 3일간 이화여대에서 열린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학생법정'(이하 학생법정)이 바로 그것.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여성 억압의 구조를 다각도로 읽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해여성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가 착취당했고,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서도 가부장제 순결이데올로기에 의해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성의 인권과 평화가 실현된 새로운 세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법정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영희 씨(서울여대 4년)는 학생법정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한다. 학생법정 준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일본 대학생들과 함께 '무력갈등과 여성'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 한·일 학생워크숍 등을 거쳐 다음달 열린 법정을 활발히 준비해 왔다. 성노예문제를 국제법상 범죄행위로 심판함과 동시에 가부장제의 억압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 이들의 목표.

"무력갈등 하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폭력과는 연결되어 있죠. 과거문제일 뿐이라는 생각, 민족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는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이 과거 일본의 범죄행위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을 묻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학생법정이 피해 여성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법정은 행사 참가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예행사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배경내)

<기고> 엄혜진 씨의 '제주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에 대하여

정영선(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이 글은 지난 3월 4일자 <인권하루소식> 2면에 실렸던 엄혜진(국제연대 정책정보센터) 씨의 기고문 '제주 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에 대한 정영선 씨의 반론입니다.

엄혜진씨의 글을 읽고 한동안 고민한 끝에 무거운 마음으로, 어쩌면 더 무거운 마음으로 침묵하고 있을 인권회의 참가자 다수의 의견을 묻는 마음으로, 그리고 인권 논의의 참다운 방향을 한번쯤 점검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해 본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엄씨의 보고서는 일면 수궁이 가지만 상당 부분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 <인권하루소식>에 게재된 엄씨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중요한 부분인 '대자보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마치 회의 전 기간을 통하여 전체 남성 대 여성이 '여성인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데 있다.

이제 공론화의 정상 궤도에 올라야 할 인권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를 위한 계기의 장이었던 새해 벽두의 제주도 인권학술회의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가지고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본다.

가해자 인권은 건너뛰기식 이해의 산물

첫째, 베트남 참전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보고한 당시 발제자의 진실된 의도는 '건너 뛰기' (?)를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 상당히 왜곡되고 말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발제자는 베트남 참전 한국군은 가해자가 아니라 불행한 역사(이태우로기 및 독재정부가 잉태한)가 낳은 '피해자'임을 수 차례에 걸쳐 역설한 바 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 보충발언에서조차 "내가 당시 참

전 한국군이었던가도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총을 쏘았을 것..."이라고 고 통스럽게 말하지 않았던가?

회의 중에 즉석 발언을 했던 제주지역 베트남전 참전군인회장이 밝힌 '그들의 입장'에도 참석자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군인들 개개인이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가해자 인권' 운운하는 것은 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언어의 횡포라고 본다.

대자보 논쟁, 정말 즐거웠나?

둘째, 대자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두 남성의 실언(?)은 마땅히 공개적으로 사과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색한 변명과 묵비경으로 일관한 점은 일단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대자보 문화(?)를 이용해서 인권회의 전 일정을 경직케 만든 일부 페미니스트들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다.

하물며 대자보를 넘어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권하루소식'에 진실이 왜곡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자칫 '인권문제의 공론화' 과정 자체의 존립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

엄씨는 기고문에서 "젊은 여성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남성 참가자들의 이러한 일상적 반인권 행위나 의식에 내재한 위계문화에 대한 항의성 대자보를 붙이는 '즐거운 반란'이 시작"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과연 대다수가 즐거웠을까?

차이와 다름은 선별기준과 무관

셋째, 엄씨의 기고문 중에는 "특별히 '선발된' 100여명의 학자와 활동가들간의 의식수준의 차이가 예상외로 커서 사실 좀 선별의 기준에 대해 의이"

라는 부분이 있는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

발제문 중에는 주제의 이론적 배경 등을 제시한 후 논점을 전개하는 식의 논문식 구성과 사례 중심의 쟁점에 곧바로 진입하는 보고서식의 글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와 '다름'이 '인권'이라는 대주제로 통합되면서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곧바로 '의식수준의 차이' 및 '선별의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만한 것인지 오히려 '의아'하다.

일방적 공격 유감

마지막으로, 상당수의 남성 참가자들은 '전체 남성'을 싸잡아 폄하해 버리는 몇몇 대자보의 글에 그리 기분이 좋았을 리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칫 대자보 논쟁에 휘말리면 '인권회의' 자체의 의미를 실추시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자보에 반박문을 쓰는 사람은 다행히(?) 없었다.

대자보 사건은 '불붙은 논쟁' 아닌 '일방적 공격'으로 끝났던 것이다. 특히 엄씨가 위안을 받았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여성만의 소모임엔 '남성 절대 사절'이라는 문구를 삽입시켜 남성들의 언론을 아예 막아버리지 않았던가?

진정한 여성인권 운동은 무조건 '전체 남성'과의 '전쟁'이 아니라 남성우월주의를 배태하고 있는 제도적 모순과 그에 대한 타도, 그리고 여권 신장을 가로막는 반인권적인 일부 남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 폄박 받은 여성에 대한 한풀이로 인권회의에 참석한 남성들이 '며칠 동안만이라도' 위축되고 소외되어 살아가라는 식의 논리가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

본 글에 대한 제주 인권회의 참석자들의 허심탄회한 질책을 기대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11일(토)

제 157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두 번 죽일 순 없다”

시민단체, 남편살해 여성장애인 구명운동 나서

“이 땅의 여성 장애우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한 여성장애인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회는 물론 장애인 단체가 팔을 걷어 부쳤다.

군포 산본 14단지 부녀회를 비롯해 군포 여성민우회, 안양 여성회,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등 8개 지역, 시민단체들은 남편 최갑석(무직, 44) 씨를 살해한 죄로 감옥에 갇힌 '중복 장애인' 유순자(39)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공대위를 구성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구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미 유 씨의 지역 주민 4백여명은 유 씨의 석방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시민단체 역시 10일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유 씨의 구명운동과 함께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 장애인이 가정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들이 쉴 수 있는 '여성 장애인 쉼터' 만들기 운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상습적 폭행... 정당방위적 살인

지체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심한 척추후만증과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 씨는 남편의 상습적 구타에 시달리던 중 지난 1월 19일 남편이 심한 폭행을 또 다시 가해오자 과도로 남편을 찔러 살해했다. 경찰에 의해 존속살인으로 구속된 유 씨는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3월 말로 예정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유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시 남편인 최 씨는 부인이 폭행 중 실신하자 119에 전화를 걸어 “우리 부부 둘 다 실어가 달라”라는 요청을 해온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폭행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유 씨가 부엌에서 가져온 칼로 남편을 살해해 정당방위로 보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씨의 변론을 담당한 이덕우 변호사는 “정상인의 눈으로 장애인의 경우를 예단해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 변호사는 “정상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면 사람들이 웃겠지만 장애인들의 경우 심한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편의 가혹한 폭행 앞에서 유 씨 역시 죽음의 위협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 동안 유 씨의 집을 오가 ▶ 2면으로

<논평>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출국을 위하여 서울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이주노동자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3월 8일 법무부는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 밀린 임금 또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 대하여는 법률상담 등 지원을 확대하면서 강제퇴거를 유보하거나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외국인보호소 내 식생활·문화생활 등 처우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조선족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마저 외면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이들에 대한 약력기업주의 임금체불, 사기, 폭행 등을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또한 외국인보호소 내에서의 폭행과 열악한 처우를 조장해왔다. 사실 이번 '개선방향'은 이제까지 보호소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라면이나 빵, 그리고 오래 묵은 정부미로 끼니를 때우면서 TV·신문도 없고 옥외운동도 여의치 않은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해왔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울외국인보호소 7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법무부가 제시한 '개선방향'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것은 아주 최소한의 조치는 해도 '진일보'임에 틀림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개선방향'은 결국 미봉책에 지나지 않음을 감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정기간 체류한 이주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새로운 이주노동자로 교체시키면서 그들에게 정착할 틈을 주지 않는 정책이 계속되는 한 불법체류자는 양산될 수 밖에 없으며, 임금체불 등 그 솔한 이주노동자문제가 결코 '개선방향'으로써 해결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한국사회를 열망하는 우리는 각계가 이번 법무부 조치의 한계를 뚜렷이 인식하면서 이주노동자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향해 더욱 확실한 목소리를 낼 것을 호소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와 같은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서 한국사회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민중 인권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청년진보당, 총선 인권공약 발표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이념정당을 표방하는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이 인권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년진보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창수)는 10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시민·사회단체 초청 16대 총선 인권공약 설명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냉전의식과 반공논리가 지배해 왔으며, 경제적으로는 소수의 독점자본이 권력의 축을 형성해왔다"면서 "사람들이 고르고 풍부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현 시기 인권공약의 내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방향으로 △국가 통제 중심의 사회를 민중적 인권 사회 중심으로 전환 △반인권적·반민중적 감시 체제 해제 △인권침해 사건의 공식적 해결을 통한 철저한 과거 청산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방향 속에서 당면 인권침해 구조를 해결한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14개 분야 37개 항목의 인권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언급안돼

그런 노력에 따라 인권공약에는 그간 인권단체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국가보안법의 철폐, 독립적 인권기구의 설치 등의 조항들이 삽입됐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정보체계 수립, 주민등록제도의 단계적 폐지, 변호인 강제주의의 폐지, 인권공무원의 양성과 공무원 인권훈련 실

시 등의 항목들이 새롭게 제기됐다. 그러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진보정치이념을 주창하는 진보정당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청년진보당 인권위원회는 총선 공간을 통해 인권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리어나가기로 하고, 당원들로 '인권실천단'도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다. (박대균)

운동권내 가부장제 용납못해

시민사회단체 여성활동가, 11일 집회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운동사회 내에 뿌리박힌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세계 여성의 날이었던 지난 8일 운동사회 내에 일상화된 성희롱과 성폭력, 그리고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요구하며 한차례 파업을 벌인 바 있는 여성활동가들은 오늘 2시 종로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운동사회 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그동안 발생한 피해사례 보고와 함께 성폭력 피해여성의 고통을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공연된다.

이날 집회를 준비하는 「운동사회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활동가 모임」은 지난해 8월 진보운동 내 만연된 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으며, 현재 53명의 여성활동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혜정)

인권하루소식 합본 13호 발간!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외 인권사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권하루소식」 합본 13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열독 바랍니다.

신청문의 02-741-5363/ 판매가 1만원

민청노회, 항소심 결심공판

1심 모두 유죄, 선고 24일

지난 98년 말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형사 1부 이상경 재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함선규, 김관태 씨에게 징역 4년 △박종익, 이광복, 남경숙 씨에게 징역 3년 △김윤광, 유관경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관태 씨 등 7명은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는 한 국민으로 나라의 자주민주주의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당연할 일이며, 우리 단체는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국연합회지 등에 이미 게재한 글을 우리회지에 게재한 것과 신원조사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우리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재판은 오는 24일 오전에 있을 예정인데, 지난 1심 재판에서는 이들 전원의 유죄가 인정됐었다. (유혜정)

▶1면에서 계속

며 봉사활동을 해온 산본 14단지 부녀회장 최인옥 씨는 "남편이 일을 하기는커녕 유 씨에게 구걸까지 강요했다"며 "그렇게 유 씨가 벌어들인 돈으로 남편은 술을 사먹고 상습적으로 유 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최 씨는 "보다 못한 주민들이 수 차례 남편을 경찰서에 고발했으나 매번 유 씨가 극구 말려 사태가 해결됐다"며 "신체적 장애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유 씨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먼저 가슴이 메어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여준민 간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가족들의 외면, 그리고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까지 그 동안 유 씨가 겪었을 좌절과 아픔을 생각한다면, 그 누가 유 씨를 단죄할 수 있겠냐"며 "차별보단 여성 장애인의 가정 내 폭력근절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혜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14일(화)

제 157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혜정

맹인안내견 동반 거절

시각장애인 생활관 입소 거부당해

최근 몇몇 대학들이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대전에 있는 한 신학대학교가 시각장애인의 생활관 입소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전에 있는 모 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는 시각장애인 김아무개(97학번) 씨는 지난 2월 학교측으로부터 생활관 입소를 거절당했다. 맹인안내견을 동반할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김 씨가 "함께 방을 쓰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혹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면 방값을 더 내고서라도 혼자 방을 사용하겠다"고 애원했지만, 학교측은 냉정하게 거절했다. 결국 김 씨는 현재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들은 학교측의 처사가 "장애인복지법의 차별금지 조항과 교육받을 권리, 장애인보조견의 훈련 및 보급 지원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맹인안내견에 대한 물리적 편견"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2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맹인안내견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대구대학교의 조일용 생활관 관장은 "맹인안내견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도 아직까지 없고,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돼 앞으로도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맹인안내견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이삭도우미학교의 이형구 씨도 "맹

인안내견은 주위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도록 고도의 교육을 받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에게 맹인안내견을 동반하지 말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눈을 떠놓고 다니라는 말과 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피해자 김 씨는 학내에서 받게 될 비난이 두려워 이 문제를 사회화시키기를 망설이고 있다. 실제로 청주대학교로부터 입학할 거부당해 주목을 받았던 황선경 씨의 경우 일부 학생들과 교수들로부터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열심히 배워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꿈이 사회적 편견 때문에 좌절되고 있는 것이다. (유혜정)

모든 핵무기는 가라!

핵무기 폐기 국제서명운동 전개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국제적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네트워크(Abolition 2000)'는 오는 3월까지 세계 2천개 단체의 서명을 받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의 단체들도 이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핵무기없는 세상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인간안보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올해 안에 핵무기의 단계적인 폐기를 명시한 '핵무기 폐기협정' 체결협상을 끝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불사용 원칙 서약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완성 △핵무기 폐기 과정에 시민과 민간단체의 감시 보장 등 11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서명에 참가할 단체는 단체명 등을 적어 이메일 wagingpeace@nadf.org로 보내면 된다. (박대균)

주요공판안내

■ 3월 14일(화)

·고 노수석 군 사망사건 관련 민사소송 -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2호
96년 3월 교육제정확보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던 중 당시 연세대 법학과 2학년이던 노수석 군이 경찰의 투고물이식 과잉진압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3월 16일(목)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고천만(경기철거민연합 의장) - 오후 3시 수원고법 110호
지난해 여름 수원시 권선 4지구 철거촌에서 사제 총포가 발견돼 이를 배후조정 한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각각 실형 4년을 선고받았다.

■ 3월 17일(금)

·유병문(96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선고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지난 98년 8월부터 조계사에서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해왔으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인 권 시 평

“보살피는 사람의 권리”

조효제(성공회대 시민사회단체학과 교수)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이리 좀 와 보렴” 하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린다. 아버지 옷 갈아 입혀 드릴 시간이다. 오랫동안 중풍을 앓고 게다가 최근 골절로 하체를 쓰지 못하는 노인의 상반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다. 상의를 벗기고 알코올을 섞은 물수건으로 등과 가슴을 닦아내고 약을 발라 드린다. 욕창이 생긴 상처가 보인다. 새 옷을 입혀 드리는 것도 쉽지 않다.

어머니의 굽은 허리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 13년째 병치레를 도맡아 하신 흔적이다. 귀국 후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한 것은 어머니 고흥을 조금이라도 도와 볼까 해서였다. 그러나 우리 살림살이까지 도맡아 하시려는 바람에 부담만 더 늘어난 것 같아 안쓰럽기 짝이 없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환자가 생기면 환자 자신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집안 전체에 그림자가 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집안 대소사를 처리하는데 환자에 대한 고려가 고정변수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점은 실제 간병을 담당하는 사람의 노고에 비해 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다. 노인의 병 수발은 아들도, 며느리도 하기 힘든 부분이다. 몽땅 배우자의 몫이 되기 마련이다. 환자에 묶여 꼼짝도 못하고 하루 24시간 육체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일 처리해야 하는 세탁물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간병자, 특히 고령 간병자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 된다. 이들에게 허리디스크, 관절염, 고혈압, 소화불량이 흔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간병자는 정서적 노동이라는 과중한 짐을 져야만 한다. 환자의 투정과 감정의 기복을 스폰지처럼 받기만 해야하고, 잠깐이나마 쉼의 생각을 하지는 않았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야 하며, 제각기 생활에 바쁜 식구들을 이해하면서도 서운한 감을 떨치기 힘들다. 간병자들이 만성우울증에 시달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살 집이 있고 끼니 걱정은 하지 않으니 말이다. 노인부부 가정, 독거노인, 생계관련 만성 장애인 등 경제적 요인이 문제를 훨씬 심각하게 만든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뿐 아니다. 간병의 부담에는 고정관념적 성차별의 측면도 있다. 왜 보살피는 노동은 여성의 몫으로 당연시하는가? 더 나아가 오늘날 노인 간병자들은 해방 후 세대의 심리적 자유도, 베이비 붐 세대의 성장의 혜택도, 월남전 세대의 반항적 자유도 직접적으로 누리지 못한 세대다. 요즘 간병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 권리 확보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접한다. 경제·사회적 권리 중에서도 변방에 속하는 이런 문제에도 우리의 눈길이 필요하다.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6일 - 3월 12일)

1. “이제는 그가 살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비롯 시민사회단체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증북장애인 유순자 씨 구명운동에 나서 (3/10) 지체1급 뇌성마비 장애인인면서 심한 척추후만증과 언어장애를 갖고있는 유 씨는 지난 1월 심한 폭행을 가하던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바 있다.

2. 말 다르고 행동 다른 법무부

조선족 최광범 씨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외국인보호소 처우에 항의하며 자해를 시도해 법무부가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반발을 의식한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때까지 추방을 유보하고 외국인보호소의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3/8) 그러나 법무부 발표 당일 경찰이 조선족 동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또다시 밝혀졌다.

3. 국보법, 다시 꿈틀

서울시경이 IS(사회주의자한국방어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안우춘 씨등 6명을 체포하자 가족과 사회단체들이 “구체적 증거없는 무리한 연행”이라고 반발 (3/7)

4. ‘여성인권’ 각계 메이리

세계여성노날을 맞아 11일 민주노총이 전국 8개 지역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촉구한 데 이어 한국여성단체연합도 12일 폭력과 빈곤없는 세상, 여성권익보호를 주장하며 다양한 행사를 벌여. 시민사회단체 여성활동가들도 운동 내부의 뿌리박힌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재를 요구 (3/11~12)

5. 험난한 노조 민주화의 길

노조대표 선출방식을 놓고 철도노조와 노동자들이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철도노조가 대의원대회를 열고 직선제를 요구하는 노동자 30여명을 제명시킨 데 이어, 현 위원장을 재선출. 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해 노동자 10여명이 병원에 후송돼 (3/7)

6. 일자리는 뺏겨도 기계는 뺏길 수 없다

포항제철의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1천1백80일째 농성을 계속해 온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고용승계의 정당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순회투쟁에 나서 (3/7)

7. 매춘거래, 국제적 망신

필리핀대사관이 한국에서 필리핀 여성들이 불법 거래돼 매매춘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들의 매매춘을 막아달라고 요청 (3/10) 현재 한국에는 6백여명의 필리핀 여성들이 연예인이나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15일(수)

제 157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타이 인권, “암흑시대로”

버마 지원활동 탄압, 위기의식 고조

최근 버마 관련 인권활동가와 단체에 대한 타이 정부의 탄압이 심각한 지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 인권단체간 네트워크인 포럼 아시아(Forum-Asia)의 버마 프로젝트 담당자, 킴 쾅츠왕 씨는 “암흑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다”며, “우리는 체포되고 위협 당하고 있다. 경찰이 수시로 사무실에 들이닥치며, 어떤 단체도 버마인 지원활동가나 인턴을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일은 수년간 없었던 일이다”고 밝혔다.

사태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사례는 인도주의적 원조활동을 벌이던 외국인에게까지 그 손길이 뻗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1일 미국인 맥스 에디거 씨를 비롯한 8명의 활동가가 체포되었

다. 에디거 씨는 22년간 타이에 거주하면서 버마 출신 이주자와 빈민들의 권익을 위해 일해온 인물이다. 그의 혐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에디거 씨와 다른 여섯은 현재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여전히 기소될 위협에 처해있으며, 타이 변호사 10여명이 에디거 씨 변호인단을 꾸렸다. 에디거 씨 외에도 많은 외국인 활동가들이 추방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머지 6명의 구속자들은 버마인들로 타이-버마 국경지대로 추방될 위협에 처해있다.

지난 7일, 대책 회의를 가진 타이의 인도주의·종교·인권 단체들은 상당한 위축감과 위기감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위협만이 아니라 버마와 연관된 민간단체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테러리스트들과 연결돼 있다’는 흑색선전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지라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타이 대중의 이해를 높일 방안을 모색 중이다. (류은숙)

배경

불법체류자인 버마인에 대한 눈거리고 이용하는 식의 단속과 체포는 늘상 있었던 일이지만, 버마 문제를 다루는 타이의 민간단체를 표적으로 한 탄압은 근래 없었던 일이다. 더욱이 인도주의적 원조활동을 벌이는 외국단체까지 포함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지난 1월 버마의 카렌족 반군단체인 ‘신의 군대’ 소속원 10여명이 무장을 한 채 방콕 서쪽 120km 지점에 위치한 라차부리의 한 병원에 난입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난민 입국을 위한 타이의 국경개방 등을 요구하다 진압되었고, 타이의 민간단체들은 이들이 무장해제된 후 옷을 벗기운 채 전원 사살되었다고 보고 있다.

쾅츠왕 씨는 바로 이 사건을 현 사태의 주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타이의 정보기관과 군대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어떻게 무장세력이 타이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겠냐는 비난에 직면한 타이의 보안세력이 자신들의 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 버마인과 관련 단체에 대한 탄압을 도발했다는 주장이다.

버마와 국경을 접한 타이는 수많은 버마 민주·민족혁명단체들과 국제 지원 단체의 중심무대가 되어 왔다. 그렇다고 타이 정부가 타이 내 민간단체들의 버마 지원 활동을 합법적으로 ‘허가’한 적은 없었다. 허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것을 ‘불법시’하고 탄압할 근거는 없다. 그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은숙)

새로 나온 책

『아시아의 인권교육 호주·인도·홍콩 편』

199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역/ 사람생각 펴냄/ 551쪽 /1만5천원

외국에선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 궁금증을 풀어줄 반기운 책이 나왔다. 지난해 말 ‘동북아시아에서의 학교 인권교육 워크숍’을 주관했던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워크숍에서 소개된 인권교육 교재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 번역한 『아시아의 인권교육-호주·인도·홍콩 편』이 바로 그것.

호주인권위원회가 펴낸 「인권을 위한 교육」과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인권교육’, 인도의 국립교사교육위원회가 펴낸 「인권과 국민윤리」, 그리고 국제엠네스티 홍콩지부가 펴낸 「인권을 위한 우리 모두, 우리 모두를 위한 인권」과 ‘영어교과를 통한 인권교육’, 이렇게 다섯 권의 책을 번역해 묶은 이 책은 실제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또 인권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지점으로 삼아야 할 기준과 가치, 나아가 아이들의 일상생활로부터 출발해 인권을 가르칠 수 있는 풍부한 사례를 담고 있다. (◆문의 ‘사람생각’ 02-3675-4096) [배경내]

해외매각기업, 국내 관행 무시한 횡포

대한중석초경 노동자 농성

대한중석초경(주) 노동자들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한중석초경(주)은 노동권을 탄압하는 대표적 해외매각기업으로 손꼽힌다.

대한중석초경(주)은 지난 98년 8월 이스라엘 기업인 이스카(사장 일람 게이)에 매각됐다. 매입당시 이스카사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약속했지만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55명의 노동자들을 대기발령하고 퇴사를 종용했다. 그리고 끝까지 퇴사를 거부한 4명을 해고시켰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이중 3명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은 "근무평가의 반영일 뿐"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측(위원장 김득수)은 "회사의 인사조치는 노동조합 탄압의 일환"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사안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또한 회사측은 노조측과의 단체협약 내용도 무시하고 있다. 임금 인상폭이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은 물론, 노동조합의 경영자료 제출요구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스라엘 자본이 기업을 매각했으니 이제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이유로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인 외부인의 노조 방문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부당한 인사 조치 철회 △단체협약 준수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6일

째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조합의 하영준 사무국장은 "사측이 자신들은 국내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관행쯤은 무시해도 좋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사측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주영)

SOFA 살바 잠은 시민사회

16, 17일 대규모 집회

지난 1월 발생한 '파주 폭발' 사태부터 최근 의정부 노파 살인사건까지, 올해 들어서 굵직한 주한미군관련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불평등한 SOFA(주둔군 지위협정)개정 국민행동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노총 등 10여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 회원 40여명은 14일 오후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최근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사과와 SOFA의 전면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군의 양민학살과 비무장지대 교역제 살포,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환경오염 등 일련의 사건들은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미군이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불평등한 SOFA를 전면개정하고 잘못에 대한 공식 사과와 보상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했다.

나아가 이들은 이날 집회에 이어 오는 16일 매향리 폭격장 사태해결을 위한 연대집회와 17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대규모집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의 김종섭 씨는 "미군범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항상 미군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분노를 모아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는 집회장소 인근 도로(광화문거리)가 "내외국민이 통행하는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불허돼, 참가자들은 경찰들에게 겹겹이 에워싸인 채 집회를 강행해야만 했다. (유혜정)

고 노수석 사망사건, 패소

'개인 심장이상'으로 물고 가

96년 3월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사망한 고 노수석(당시 연세대 법학과 2학년) 군에 대한 민사소송 2심 선고재판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민사 14부 전봉진 판사의 주재 하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노 씨의 사인은 경찰의 과잉집압이 아닌 개인의 심장이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노부군(고 노수석 군 부친) 씨가 낸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노수석추모사업회의 이상훈 씨는 "당시 부검에 참여했던 양길승 의사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이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노 군이 일상생활을 무난히 해온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집회현장에서 벌어진 구타와 최루탄 피폭, 감압적이고 공포적인 검거과정이 심폐기능의 손상을 강화시켜 심장 이상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수석이의 경우 근본적인 사인 못지 않게 당시의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아 결국 경찰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게 됐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유혜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16일(목)

제 157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혜정

50% 국고지원, 약속을 지켜라

지역의보 적자 1조2천억, 또 다시 국민부담?

"국고지원 없는 의료보험료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보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역의보의 적자가 1조2천억원에 다다르자 농민, 보건의료단체는 물론이고 노동, 시민단체가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올 7월부터는 지역의보와 직장의료보험(직장의보)이 통합된 통합의료보험이 시행될 예정인데, 지역의보의 적자폭이 상당하다보니 직장의보에서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자액을 충선 후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한다는 추측까지 나와 이들 단체의 국고지원 요구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 등은 13일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지역의보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원 의료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만, 사용자가 없는 지역의보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보험료 전액을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가 지난 88년 국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50% 국고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1억2천억원에 달하는 지역의보 적자를 정부가 해결할 것 △지역의보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법제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각당과 총선출마자 전원에게 국고지원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집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나아가 정부가 국고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총선이 끝난 틈을 타 의료보험료를 인상한다면 이들은 범국민적인 의료보험료 납부 거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참여연대도 14일 성명을 내 "정부의 약속 불이행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방기"라고 지적하면서 "현 26.1%에 불과한 국고지원을 50%대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유혜정)

"신분증 없어도 투표 할 수 있어야" 중선관위 "인정하지만 대안없다"

신분증 없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은 과연 보장될 것인가? 총선이 다가오면서 신분증 없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지문날인거부 운동을 펼친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 "주민등록증 소지가 국민들의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혹은 관공서가 발행한 기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투표권을 제약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공식 집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지문날인을 반대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사람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지문날인 거부자의 경우 본인의 과실보다는 그 정당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돼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아무런 신분증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도 보장돼야한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진 못했다. 다만 "그러한 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의견제출 시 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의 홍석만 씨는 "중선관위가 현 선거법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책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중선관위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보영)

행사와 동정

- 해아래집과 함께하는 에바다 콘서트 '에바다의 밤'
 - 때: 3월 17일(금) 오후 6시 · 곳: 연세대 노천극장
 - 출연: 류금신, 꽃다지, 한스밴드 등 (입장료: 일반 1만2천원, 학생 9천원)
 - 주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02-361-4957)
-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제 10차 정기대의원대회
 - 때: 3월 19일(일) 오후 2시 · 곳: 서강대 다산관 국제회의실
 - 주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02-3673-3031)
- 다산인권상담소가 '다산인권센터'로
 - 지난 10년간 수원 시민의 벗이 돼왔던 '다산인권상담소'가 '다산인권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한 단계 높은 질적, 양적 성장을 꿈꾼다. 앞으로 다산인권센터는 △인권관련 상담 및 송무 △인권·복지 △시민사회와의 연대 △노동조합 법률고문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개소식은 18일(토) 낮 12시 다산 종합법률사무소에서. (0331-213-2100)

인권하루소식 합본 13호 발간!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외 인권사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권하루소식' 합본 13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청문의 02-741-5363/ 판매가 1만원

<반론>

정영선님의 반론을 반론한다

이정주(또 하나의 문화)

지난 2월 '제주인권학술회의'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을 두고 인권운동가 사이에서 논란이 뜨겁다. (인권하루소식)은 엄혜진 씨의 '제주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3월 4일자)를 게재한 데 이어 그에 대한 정영선 씨의 반론(3월 10일자)을 실었으며, 이번에는 다시 정영선 씨 글에 대한 이정주 씨의 반론을 소개한다. 제주에서 '일어난 일'이 도대체 뭐길래...? 이정주 씨는 이것을 "진보적 남성들조차 가부장제의 내면화로 인해 일상에서 쉽게 성차별적 발언을 한다. 이에 대하여 (여성활동가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라고 요약한다. 독자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 이 논쟁에 (인권하루소식)이 금쪽같은 지면을 제공하는 까닭은 이 논쟁이 우리 인권운동의 역사에 기록될 가치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편집자 주>

엄혜진님의 기고문에 대한 정영선님의 반론을 읽었다. 우리사회의 '인권 논의의 참다운 방향'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논쟁들이 생산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허심탄화하게' 정영선님 글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한다.

첫째, 정영선님은 글에서 '베트남 참전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보고한 당시 발제자의 진실된 의도는 '건너 뛰기'를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 상당히 왜곡'됐다고 하면서 '베트남 참전 한국군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나는 여기에서 정영선님이 파악한 '발제자의 진실된 의도'가 무엇인지 대체 알 수가 없다. 내가 이해하기로 구수정 씨의 발제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행해진 양민학살에 대해 한국 국민과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베트남전 당시 양민들에게 총을 들이댄 한국군들은 '자유 수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명령을 받아 동원된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베트남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을 살해한 한국군들은 분명 '가해자'이기도 하다. 정영선님은 왜 이를 부인하려 하는 것일까? 과연 베트남 피해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참전 한국군들을 가해자인 것처럼 운운하는 것은 언어의 횡포'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그렇다면 한국전쟁 당시나 전후 미군이 저지른 양민학살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미군 '그들의 입장'에 수긍해야지 그들을 '가해자 운운'하는 것은 미군 개인에 대한 '언어의 횡포'가 되는 것인가? 만

일 정영선님이 베트남전에서 양민학살에 가담한 한국군에 대해서나, 한국전에서 양민학살에 가담한 미군에 대해서 동일한 논리로 그들을 '가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양민학살을 덮어두고자 하는 것이라면, 제주 인권대회 참석자 중 문경 양민학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눈물로 호소하며 일이 해결될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체의잔담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정영선님이 미군에 의한 학살은 인정하면서 유독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학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면 정영선님에게 배타적 민족주의나 종족차별의 편견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상적 성차별, 여성인권 침해 지적

둘째, 정영선님이 제기한 대자보 논쟁에 관한 내용은 다분히 감정적이며 비약적이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지가 불분명하다. 추측컨대, 자신은 대자보 논쟁이 즐겁지 않았는데, 엄혜진님이 '즐거운 반란'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진실이 왜곡'됐다고 하는 것일까? 대자보의 내용은 '전체 남성을 싸잡아 폄하해 버리는' 내용이 분명 아니었다. 우리사회의 소위 진보적(민족, 계급문제에 있어) 남성들조차 가부장제의 내면화로 인해 일상에서 쉽게 행하는 성차별적, 여성인권 침해적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게 왜 '인권회의 자체의 의미를 실추시킬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일까? 인권회의에 온 사람들이

모두 '완벽'한 사람들로 비쳐야만 인권회의의 의미가 살아나는가? 오히려 이러한 논쟁들이 당위적, 추상적 개념이 기 쉬운 인권을 구체적 일상의 세계로 확대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정영선님은 여성인권 운동과 페미니즘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가부장제는 여성이 남성을 적대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가부장제는 남성이 여성을 타자화하여 분리하고 차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억압적인 '정치 제도'이다. 여기에 대항하여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조건을 바꾸고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왜 남성들은 자꾸 '공격'으로만, '적대감'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그리고 '인권회의 전 일정을 경직케 만든 일부 페미니스트들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양비론적 입장은 문제의 초점을 흐린다. 어떠한 모순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상황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일으킨 당사자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문제를 꺼내는 사람을 비난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엄혜진님이 언급한 즉석 소모임은 '남성 절대 사절'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분명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남성들이 참여해 토론을 풀어나갔다. 정영선님이 얘기한 '남성 절대 사절' 모임은 처음 대자보를 붙였던 사람들끼리의 일종의 대책회의였다. 이점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이번 제주 인권대회에서 문제가 됐던 대자보 논쟁은 바로 일상의 권위 문제를 가시화시켜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었다. 모든 인권 논의는 소수자의 인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인권의 담론 과정 속에서 소수자의 인권이 또다시 소외되고 된다면 인권담론은 천박한 수준의 거대담론일 뿐이다. 일상에서 소수자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사회의 인권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단 말인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17일(금)

제 157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고문에 관여버린 십년

정신분열 권대현 씨 지원 절실

10년 전, '국군의 대미 종속성 근절', '사병들의 인간적 대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신문을 만들었던 군인이 있었다. 그가 끌려간 곳은 국군 기무사와 군 교도소.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정신은 그곳에 갇혀있다. 현재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는 권대현(31세) 씨. 동아대 영문학과 88학번. 대학 2학년 초 입대. 육군 53사 단기 사병으로 복무. 그 이듬해 '애국군인'이라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동아리 선배들과 함께 긴급체포. 국군 기무사에서 20일간 조사. 9개월간 군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남. 이것이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의 자취다. "아가 완전히 병신이 됐어요. 민주화한다고 돌아다니더니..." 울화로 일흔이 된 부친 권영욱 씨는 복받쳐 오르는 슬픔에 말을 잊지 못했다. 착한 성격에 공부도 잘해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 세울거라 굳게 믿었던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은 지금 정신병원에 있다. "저는 아직 학생이고 수인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권 씨는 자신의 말처럼 지난 10년을 감옥에 갇혀 살아왔다. 동이 뜨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을 먹고 동아대로 가는 버스에 오른다. 학교 주변을 배회하다 4시경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TV를 본 후 잠자리에 든다. 그 시간이 밤 9시 50분. 그리고 잠이드는 건 정확히 9시 52분이다. 그는 지난 10년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런 생활을 반복해왔다. "20일간 빨간 벽지, 빨간 카펫이 깔린 30평 정도의 방에서 조사를 받았죠 '모든 것이 공포로 다가오는 충격'속에서 철창 매달리기 등과 같은 기합을

받으며 배후세력을 대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권 씨와 함께 애국군인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서재호(33) 씨는 "그때 미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쓰디쓴 옛 기억을 뱉어낸다. "군 교도소에서 잠깐 만났는데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후 벽에 머리를 찡고 바다를 뛰구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죠." 창도 없이 수면시간을 제외하곤 하루 14시간을 정좌상태로 앉아 있어야 하는 군 교도소. 대소변도 현병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그곳에서 권 씨는 조금씩 미쳐갔다. "씻지도 않고, 계속 횡설수설이고, 요즘은 자기 뺨을 때리고 있는데, 만성적 정신분열증 현상이예요. 이젠 조물주의 뜻만 기다릴 뿐이죠" 권 씨의

치료를 담당했던 김성부 해운대 정신병원 원장이 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한 달 40만원 밖에 안되는 수입을 반으로 쪼개 아들을 병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 일이 알려지면서 권 씨를 기억하는 선후배들이 '권대현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 지원에 나서게 됐다. "벌써 10년입니다. 그 좋은 22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대현이를 생각하면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하는 생각에 눈물과 안다까움뿐이죠. 고문관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 부를 누리는데, 왜 착한 대현이만... 소송할 생각도 해봤지만 이 사회에서 어디 고문범죄가 처벌되거나 합니까? 그저 이번에 통과된 명예회복법안에 기대를 걸 뿐입니다." 권 씨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병원치료를 받도록 마음을 빼놓았으면 좋겠다는 서재호 씨. 권대현 씨를 기억해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유해정) <모금문의:서재호 016-852-7051/국민은행 137-21-0090-071>



대인지뢰피해자 지원 사업 기지개

교회여성연합회, 교육·조직 활동 병행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대인지뢰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나섰다.

97년부터 대인지뢰 피해 실태조사를 벌여온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민간인 피해자 19명에게 매월 1가구당 10만원씩 10개월간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인 데다 시효가 지나 국가로부터 보상받지 못해 생계에 질박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직접 확인한 민간인 피해자는 50여명 정도. 주 피해지역의 경우 한 마을에서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무려 1천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생계지원뿐 아니라 △ 대인지뢰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집계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신고전화 개설 △ 5개 주요 피해 지역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인지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인지뢰 식별요령, 사고 후 대처요령, 보상 절차 등을 알려주는 예방교육 △ 피해자들이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적극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별 피해자 모임의 조직화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함께 피해실태 조사작업과 대인지뢰사진전 등의 행사에 참여해온 사진작가 이시우 씨는 "특히 피해자모임은 피해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연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이 직접 나서서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지뢰피해 문제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165개국이다.

또 지난해 2월 25일, 대인지뢰 매설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대인지뢰의 사용을 부분적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약속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본지 99년 3월 4일자 참조> (배경내)

인터넷 간첩 '이적표현물 소지' 둔갑 "검찰, 사건 조작" 주장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인터넷 간첩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권오혁(31,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한총련과 범민련, 범청학련 등에 인터넷을 통해 북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 씨를 그중 한 명으로 지목해 구속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권 씨를 이적표현물 배포 및 소지혐의로만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권 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내가 97년 서총련 사무처

장을 맡아 활동했던 전력을 들이밀며 인터넷 간첩사건과 관련한 자백을 강요했다"며 "심지어는 당시 범청학련과 관련된 문서를 내 자료에 끼어놓고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권 씨는 "검찰의 사건조작의도 및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씨는 "검찰이 이적 표현물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흰찬 우리역사 2>는 시중 서점에서 유통되는 책"이라며 "이를 이적 표현물로 규정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또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조항의 개·폐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권 씨에 대한 2심 선고재판은 오는 31일 서울고법320호에 열린다. [유해정]

'제야 운동가 간첩' 주장 철회 법무부, 문제 발언 삭제 시도

"겉으로는...노동운동이나 제야운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물의를 빚었던 법무부가 무마에 나섰다.

문제의 공문은 지난달 22일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정덕 씨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이다.

공문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던 법무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16일 속행된 해당 사건 재판에서였다. "답변서의 전체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재판부에 문제 내용의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인권사회단체의 사과 요구를 거절했던 법무부가 뒤늦게나마 문제 내용을 삭제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공식 사과 없이 엇나간 일로 하지는 식의 해결을 시도한 것은 환영할 일이 못된다. 이는 인권사회단체의 반응이다. <본지 2000년 3월 1일자 참조> (김정희)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18일(토)

제 157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정부 "선처", 알고보니 거짓말

자진출두한 유병문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유병문(97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유 씨는 정부의 선처 약속을 믿고 스스로 조계사에서 걸어나와 검찰에 자진출두했던 만큼 이번 선고결과는 본인에게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최병덕)는 17일 오전 유 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96년 한총련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관례를 들어 유 씨에게도 이와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활동한 한총련과 범청학련은 국가존립을 위협한 이적단체로, 특히 피고는 학생들의 방북을 주도하고 정부가 불허한 통일대축전 행사를 강행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주질서의 파괴를 가져왔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거꾸로 가는 법원 판결

이에 대해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남규선 총무는 "놀랍고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남총무는 "유 씨는 지난 98년부터 99년 말까지 5백일간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농성을 해왔고 이에 따라 정부도 유 씨가 학생이고 구 정권시절의 수배자라는 점을 들어 자진출두 시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며 이번 판결을 성토했다.

나아가 남 총무는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논의되면서 그동안 법원도 국가보안법 적용에 신중

한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와같은 전향적 추

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유 씨 등 40여 명의 김영삼 정권시절 수배자들은 작년 12월, '자진출두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할 경우 최대한 수배자 전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청와대 측의 약속에 따라 농성을 해산하고 자진출두 했었다. [유해정]

<논평> '유령공대위'는 가라!

수북한 팩스 전문만 남겨놓고 흐지부지 사라져버린 공대위의 수를 우리는 헤아릴 수나 있을까? 우리 운동단체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공대위가 도대체 몇 개인지 파악이나 하고 있을까? '치고 빠지는' 일은 결코 비겁한 언론만의 특기가 아니다. '유령공대위'는 우리 운동의 무책임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자화상이다.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준)'가 뜬 것은 작년 6월 29일이었다. 이런 저런 신문은 이 사실을 크게 다루었으며 지문날인 거부 홈페이지가 생겼다. 후원계좌도 널리 홍보되었다. 이날 각계 인사들 100명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의 지문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지문날인제도 폐지를 위하여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1년도 못가 이 '운동본부'는 스스로 내뱉은 선언에 책임지지 않는 '유령공대위'로 변해버렸다. 결국 1년 전의 그 열정은 주체적 역량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저들이었음이 드러났으며, 현란한 선언은 감당 못할 약속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즉, 그것은 객관적으로 '뺑'이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두려운 심정으로 고백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이 그 '뺑'을 짚던 8개 단체 중 하나였다고...

우리의 이 참담한 고백은 실은 부끄럽게도 우리 스스로의 자성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뺑'에 넘어가 온갖 불편을 감수하며 지문날인을 거부해온 이름 모를 시민들의 질타의 결과이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아프다.

5월부터는 구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 현실 앞에 '유령공대위'가 된 '운동본부'는 어떠한 답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운동에 열심히 동참해준 시민들은 4월 총선거에서 마저 '왕따' 당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명확한 대책도 성실한 설명도 진실한 사과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문날인거부운동 홈페이지에 쏟아지는 그들의 분노를 보라.

☞ 2면으로 이어짐

인권하루소식 합본 13호 발간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외 인권사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권하루소식' 합본 13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청문의 02-741-5363/ 판매가 1만원

장애인 입학 거부 또 말쟁

뇌성마비 장애인, 서원대·교육부 고소

장애인이란 이유로 대학입학을 거부 당해 미술학도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장애인이 대학당국과 교육부를 고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제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라는 이유로 서원대학교측에 의해 원서접수를 거부 당했던 서주현(25, 뇌성마비 1급) 씨는 오늘 오전 서울지검을 방문해 서원대와 교육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다.

서 씨는 고소장에서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원서조차 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의 교육, 차별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나아가 기본적인 인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해버린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장애인 야학의 박경석 교장은 "서 씨의 고소가 제대로 처리돼 그동안 장애인이란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거나 번번히 배움의 문턱에서 좌절해왔던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해정)

'홍교선 석방'

민노당, 배너운동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는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이 책갈피 홍교선 씨의 석방을 목청높이 외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서대문·마포·은평 지부(서대문 지부, 위원장 이성종)는 17일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한 홍 씨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에 '홈페이지에 홍 씨 석방서명 게시판 및 배너 링크'설치를 요청했다.

서대문 지부의 이형우 총무부장은 "홍 씨의 구속은 국보법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라며 "홍 씨의 석방은 물론 국가보안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첫 시도로 각 단체의 배너링크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링크가 되면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배너(깃발)를 클릭하여 바로 홍교선 씨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 사이트에 연결될 수 있으며, 거기서 홍교선 씨 사건 개요와 석방요구 서명 용지를 만날 수 있다.

홍 씨는 이적표현물 배포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 중이다.

홍 씨의 석방 서명 게시판 주소는 <http://my.netian.com/~laborstm/signature.html>이며, 배너가 있는 곳은 <http://www.jinbo.net/banner/hongsig.gif> 다. (김보영)

SOFA협상 재개에 촉각

개정축구 집회 연 이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17-18 양일간 한국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관심은 1백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16일부터 전개하고 있는 미대사관 및 국방부에 'SOFA 개정 촉구 팩스 보내기 운동', 그리고 17일 정오, 국방부 앞에서 열린 '미군범죄, 양민학살 공식사과와 SOFA 전면 개정 촉구대회'의 열기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는 참가자 4백 명이라는 근대 보기드문 규모로 진행되어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코언 장관 방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저질러온 범죄가 10만여건에 이르지만 제대로 처벌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단적으로 지금 교정시설에 갇혀 처벌을 받고 있는 주한미군은 4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노를 토했다.

이날 이들은 불평등한 SOFA 즉각개정을 비롯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공식사과 △미군범죄 제발방지 대책 마련 △고엽제, 양민학살 진상규명 및 배상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다.

한편 오늘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 지난 96년 9월 이후 중단된 SOFA 협상 재개 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간단체들에 의한 SOFA 개정 촉구 집회는 오늘(18일) 또 한차례 열릴 예정이다. (유해정)

☞(논평) 1면에서 이어짐

"이제와서 내발로 걸어가 내 지문 좀 찍어주소라고 말해야 하나요?"
"송금한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장서 행동해 달라고 하던 당산들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의 전선은 국가에, 또 하나의 전선은 직무유기인 당산들에게."

물론 우리는 언제나 바쁘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벽'은 절망적으로 완강하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선전포고만 하고 전선을 떠나버리는 우리의 행태를 정당화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떠나버린 후, 유명해진 '공대위'만을 바라보며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시민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줄'짜 장기알이 아니다. 우리 운동가가 만약에 무의식의 밑바닥에서라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벼락맞을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운동은 두려움을 가지고 반성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허풍을 거둬야 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21일(화)

제 157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속보> 철도노조 총돌, 긴장고조

직선제 요구 농성장 폭력탈취

노조 대표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대립 해는 철도노조 사태가 현 노조측에 의한 반대와 농성장 탈취로까지 이어졌다. <관련기사 본지 2월 23일/3월 3일/3월 8일자>

지난 2월 17일부터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대표 황영호 등)는 용산역 앞 철도회관 내에서 간선제를 유지하려는 현 철도노조(위원장 김기영)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철도노조 전임자가 주축이 된 250여명의 노조원이 농성장을 "탈환"하겠다고 들이닥친 것은 농성 33일째를 맞은 20일 오후 5시 50분경.

공투본 대변인 이정순 씨는 "9개 지방본부에서 출장형식으로 동원된 노조원 대부분은 소극적이었으나 60여명의 철도노조 전임자들이 석파이프와 가스총을 들고 앞장섰다"고 전했다. 이때 공투본 소속 노동자들은 60여명에 불과했고 불과 10분만인 6시경, 농성장 밖으로 밀려났다. 공투본 소속 노동자 10여명은 이 총돌과정에서 팔과 다리에 김스를 하고 이마를 꺾매는 등 부상을 당했다. 이 씨는 "농성장에 노조원들이 진입할 때는 지켜만 보던 경찰이 우리가 밀려나자마자 철도회관 정문과 담장을 에워쌌다"고 주장했다.

경찰, 농성장 탈취 방조

이후 상황은 철도 노조원들과 공투본 소속 노동자들간의 대치가 아니라 경찰과 공투본과의 대치로 양상이 바뀌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공투본 소속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합류하여 200여명으로 세가 불어난 가운데 밤 10시

경까지 경찰과 몸싸움이 계속되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지치게 되자 공투본 측은 인근에 있는 서울지방본부 사무실로 농성장을 옮겨 이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공투본 측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철도회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직선제 대표 선출'요구는 53년간 간선제를 통해 지속되었던 철도노조의 비민주적 관행을 바꾸려는 투쟁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여서 주목을 받아왔다. (류은숙)

'안티 포스코 !'

포철 규탄 전세계 메아리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이 1천1백89일째를 맞이한 지난 18일, 전세계 노동자들은 '포항제철 반대의 날(Anti POSCO)'을 선포하고 한 목소리로 포항제철을 규탄하였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반 노동자·반 노조 정책으로 일관해 온 포스코에 대항하는 여러분의 투쟁

주요공판안내

■ 3월 22일(수)

·오창규(93년 남총련의장)-오전 10시, 광주지법 219호, 선고
93년 남총련의장으로 수배. 98년 8월부터 조계사에서 '정치수배해제' 요구 농성을 벌이다 작년 12월 검찰에 자진출두. 국가보안법 위반

■ 3월 23일(목)

·한총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오전 10시, 서울지법 521호, 선고
작년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 배후조정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투쟁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미특수강 노동자 복지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스티브 켈저 씨가 보내온 메시지다.

미국 철강노조, 파키스탄 금속노조, 호주 철강노조는 현지 포철지사와 한국대사관 앞 항의집회로 노동자 국제연대를 과시했다. 또한 국제금속노련을 비롯하여 미국·일본·남아공 등 10여 개국 노동자와 진보적 학자 3천5백여 명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항의엽서와 서한, 성명서를 보내왔다.

'고용승계 결사대'를 이끌어온 해고노동자 김창남 씨는 "세계 굴지의 대기업 포항제철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장기간 투쟁을 전개해온 것이, 전세계 노동운동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인 것 같다"며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에 감사사를 표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의 전원 복지 판결에 불복해 포항제철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대법원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결을 미루고 있다.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손낙구 실장은 "만약 대법원의 복지판결이 나오게 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승계 의무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포철만 아니라 재계 전체가 치열한 막판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경내)

인 권 시 평

‘인간의 존엄’을 다시 생각함

강금실 (변호사)

아이엠에프 관리제상항에 놓인 이 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계층의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법인화(法認化)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것이 ‘인권’인가, 단순한 프로그램규정 아닌가 하는 논란이 학자들은 물론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곤 하였다. 이러한 논란이 빚어진 이유는 사회적 기본권이 국가사회의 경제력을 전제하여야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데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나, 인권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권’이 무엇인가 하는 기본 합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의 바탕개념은 ‘인간의 존엄’이다. 20세기 후반에 파시즘과의 투쟁에서 획득되어진 ‘인간의 존엄’의 원론과 구체적 각론들은 나찌의 태생지인 독일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인간의 존엄”과 관련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인권에 관한 토론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인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고, ‘인간의 존엄’을 기초로 한 인권론의 체계에서 문제를 사유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실감을 하곤 한다. ‘인간의 존엄’은 그 논의로부터 인권의 다양한 면모와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역적 개념일 뿐 아니라, 현실사회에서 행동하는 활기로 살아 움직이는 다양한 인권문제를 통하여 귀납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개념이기도 하다. 이제 누군가, 어디에선가 인권론의 베이스 자체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지하게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종래의 ‘인간의 존엄’론이 고유한 내면의사를 갖고 있는 인격의 주체성, 자율성을 중심으로 개개 인간의 자유와 본질침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사회적 기본권이 인권론 영역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현 시기에 서는 사회경제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인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의 설정에 그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또한 21세기로 접어드는 요즘, 인간, 인격의 개념 자체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는 도전을 받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정보가 완전히 해독되어 목적에 따른 유전자의 조작과 대체가 가능해지고, 인간복제도 멀지 않은 현실이 되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는 인간복제를 금지시키는 형법안이 마련되는 등, 인간복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된다고 모두들 쌍수를 내젓고 있지만, 이념적 정당성에 의하여 인류현실의 변화를 미리 막아본 사례는 역사상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미 원숭이복제와 사람의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실험이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나라밖에서 들려오는 시대이다. 인권운동내에서도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 관점들까지 아우르며 고민하는 단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박하여진다.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13일 - 3월 19일)

1. SOFA, 이번엔 제대로 고치자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등은 지난 14일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데 이어 코인 미국방장관이 17일 방한하자 미대사관과 국방부에 항의 팩스 보내기 운동과 항의집회 연달아 개최(3/14-18) 조성태 국방장관과 미국 코인 미 국방장관은 내달초에 SOFA 개정 협상 재개하기로 합의(3/19)

2. 성매매 청소년 형사처벌 대신 단계적 선도처분
청소년보호위원회, 7월부터 시행될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원조교제를 포함한 성매매 행위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사회봉사 등 4단계의 선도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혀(3/15)

3. 조선족은 괴롭다
서울조선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중인 조선족의 43%가 불심검문으로 검거됐다 풀려났으며 이중 53%는 돈을 주고 풀려난 것으로 밝혀져. 또한 전체 조선족의 68%가 임금을 체불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3/13)

4. 공무원, 노조사회 열리나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27일 발족한다고 밝혀(3/14)/현재 4급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인 2400여개 공무원 조직 가운데 직장협의회가 결성된 곳은 95개로 4%에 이르며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 대구, 광주와 경기, 경북, 전남 등 6곳

5. ‘신군부에 저항’ 손해배상 마땅
5·18 항쟁과 관련해 학생들의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전 교사 이상호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신군부의 불법행위에 대항한 이씨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국가는 해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등을 물려줘야 한다”고 판결(3/15)

6. 장애인, “학교에 다니고 싶다”
맹인안내견을 동반했다는 이유로 대전의 모 신학대학이 시각장애인의 생활관 입소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3/14)/ 장애인이란 이유로 대학입학을 거부당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학교측과 교육부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3/1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전·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22일(수)

제 157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제 56 차 인권위원회 개막

인권운동가 보호 조치 마련 시급

21세기 들어 첫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일 개막됐다. 제네바의 유엔 회의장에서 열리는 제56차 인권위원회는 53개 회원국을 비롯하여 다수의 참관국 및 인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4월 28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된다.

20일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개막 연설에서 평화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빈슨 씨는 “인권의 문화는 극한적 빈곤 속에서 자라기 힘들다”며 인권위원회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를 던졌다.

이밖에 인권단체들은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운동가를 위한 특별보고관 제도가 마련되도록 힘을 쏟고 있다. 전세계에서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살해, 협박, 고문, 폭력, 구금 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연대센터,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인권봉사회 등 주요 국제인권단체들은 공동 성명에서 “2년 전 인권운동가 선언이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었지만, 이제껏 인권운동가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없다”며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임명

될 특별보고관은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감시하게 된다.

〈해설〉 유엔인권위원회는 53개국 정부대표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경제사회이사회에서 3년 교차임기제로 선출된다.

〈해설〉 ‘인권운동가 선언’은 지난 98년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인권침해에 맞서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주영)

철도 공투본, 농성장 재탈환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대표 황영호)가 농성장을 재탈환했다.

20일 철도노조(위원장 김기영) 노조원들에 의해 농성을 전개하고 있던 철도노조사무실에서 쫓겨난 공투본 소속 노동자 2백여명은 21일 오전 10시 노조 규탄집회를 가진 데, 이어 11시 노조사무실 재점거에 들어가 별다른 마찰없이 노조사무실을 재탈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투본 소속 노동자 9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현재 용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유해정)

〈속보〉 시각장애인 생활관 입소 허가

맹인안내견을 동반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생활관 입소를 거부했던 대전 모 신학대학이 21일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이 학생의 생활관 입소를 허가했다. 〈본지 3월 14일 자 참조〉

이 대학 관계자는 “사회적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해도 좋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유해정)

새로 나온 논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조용환/ 서울대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년 2월/ 166쪽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이제 겨우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턱을 넘은 한국 사회가 마련해야 할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연구 논문 한 편이 나왔다.

연구자 조용환은 98년 9월 법무부의 ‘인권법’안이 발표된 이래 국가인권기구를 둘러싸고 지속되어 온 혼미한 논쟁이 생산적 논쟁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논문을 썼다고 한다. 이 논문은 연구자가 “국가기구나 법인이나”로 축약되는 논쟁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왜곡된 논리에 맞선 인권단체들의 노력과 함께 하는 가운데 나온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용환은 논문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정과 그 지위에 관한 국제기준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한국적 대안을 모색한다. 그는 한국에서 설립될 국가인권기구가 사회적 약자의 차별문제뿐 아니라 민주화 이행기에 있는 제3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듯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와 충분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년여에 걸친 ‘인권법’ 논란 속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 국제기준과 한국적 특수성에 맞는 국가인권기구의 꼴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배경내)

인권을 기초로 평화를 복원하자

인권고등 판무관 개막연설 요지

이번 호부터 매주 1회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이 실립니다. 다음은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 판무관의 개막 연설 요지로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주목해야 할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새로운 세기에 열리는 첫 회의는 20세기 인권위원회가 이뤄 온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 앞에 놓인 주요한 도전들을 올바르게 인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제껏 국제인권규범은 눈에 띄게 진보했지만,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여전히 엄중하다. 인권을 기초로 전세계에 평화를 복원하는 것,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존엄, 평등, 발전권을 향유하며 번영할 수 있는 경제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평화의 문제다. 전쟁, 난민, 인권의 광범한 침해는 여전히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이루고 있다. 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의 전략을 만들어나가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를 인권위원회에 부탁한다.

인권을 통해 분쟁 예방

지난해 열린 제55차 인권위원회는 코소보 분쟁의 절정 시기와 때를 같이했다. 분쟁으로 인해 코소보-알바니아인들 뿐 아니라 세르비아인들 및 여러 소수 민족들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평화와 인권의 존중은 아직 코소보 땅에 이르지 못했다.

6월에 시에라 리온을 방문했을 때 나는 그곳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음을 목격했다. 아동을 학살하고 불구로 만드는 만행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에라 리온에서만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곳곳에서 민간인들의 기본적 인권이 노골적으로 부인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달 간 러시아 연방 내 체첸 지역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

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접근의 제한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판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민간인들이 분쟁의 결과로 비극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인권 침해는 철저히 독립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인권침해의 책임자들은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사법처리에 이중잣대나,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9월에는 동티모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렸다. 그 후 나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치고 또 집을 등질 수 밖에 없었던 동티모르인들의 상황을 직접 보고, 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 동티모르를 방문했다. 현재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책임자들을 사법 처리하고 정의와 진실의 틀 안에서 진정한 화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효과적인 절차의 마련이다.

극빈 속 인권 없다

만약 우리가 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인권의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나는 극심한 빈곤 가운데서는 인권의 문화가 자랄 수 없다고 확신한다. 인

권위원회 설립 당시 인권의 약속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앉아 있다면 어떤 인권 문제를 제기할까? 그들은 우리 세계의 불평등에 경악할 것이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매일같이 수천명의 아이들이 죽어 가는 이 세계를 보며 말이다. 극한적 빈곤을 뿌리 뽑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인권의 중대한 과제다. 우선 우리는 발전권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이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급속하게 세계화되는 사회에서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기업의 역할이 아무리 증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나아가 세계인권선언 28조에서 제시하듯,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획득될 수 있는 국제 사회질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현재의 국제경제 질서가 인권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 부국과 빈국 사이의 엄청난 차이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이다.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나는 지금도 2년 전 위원회에서 인권운동가 선언이 채택될 당시의 느낌을 기억한다. 하지만 슬프게도 나는 다른 이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 노동조합운동가, 언론인, 변호사의 죽음, 실종, 구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매주 그들의 가족이나 동료들을 통해 듣게 된다. 인권활동가들은 2년 전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을 응시하고 있다.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 의제

- 7. 발전권
- 9.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침해 문제
- 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11. 시민·정치적 권리
 - (a)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 처형 (c) 표현의 자유
 -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
- 13. 아동의 권리
- 14. 특정 집단 및 개인 (a) 이주노동자
- 17. 인권 신장과 보호 (b) 인권운동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23일(목)

제 158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버마 활동가 추방 위기

강제송환 시 투옥은 불 보듯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버마인 활동가가 본국으로 쫓겨나 투옥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3월 9일 정부는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과정에서 6명의 버마인 불법체류자를 적발해 이중 5명을 즉각 강제퇴거(출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연행된 버마 민족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한국지부의 사린(29, 가명)만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과 난민지위신청을 제기해 현재 인천 출입국 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돼 있다. 그가 강제 퇴거를 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버마대사관, 출국에 적극적

지난 94년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사린은 지난해 4월 버마 민족민주연맹 한국지부를 결성하고 대외협력국장으로서 활동해왔다.

이와 같은 사린의 신원은 인천출입국관리소에서 쉽게 확인됐다. 이에 버마 대사관은 자국 이주노동자들에게 출입증명서 발급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던 것과는 달리 아무 조건없이 출입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사린의 강제퇴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사린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한국연락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했으며, 사린을 인터뷰한 동 연락사무소는 11일 한국정부에 사린의 출국을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0일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이에 맞서 사린은 법무부에 대하여 강제

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난민지위신청을 제기했다.

투옥위기... 법무부, 기한타령

사린이 구금돼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은 보류된 상태지만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난민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체류심사과의 오주호 계장 역시 "난민신청의 경우 입국 후 60일 이내에 이뤄져야한

다면서 "사린의 경우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조차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익명을 희망한 한 변호사는 "사린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되면 구금될 것이 뻔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재 상황을 보기보다 기간 타령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버마는 지난 62년 군사쿠데타로 군부 독재가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으며 모든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96년 내전에 따른 징집을 거부하며 한국에 난민신청을 해온 알제리인의 난민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그 알제리인의 경우 본국송환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유해정)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92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하며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고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외국에 체재하던 중 자국에서 발생한 상황 또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행동으로 인해 박해의 공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난민이 될 수 있다.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를 인정받아야 한다.

현행 국내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인 '입국한 날' 또는 '국내에 있는 동안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와 자신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심사결과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7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94년 이래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총 53명 중 단 한 사람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난민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자는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보호를 받는 난민지위를 획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UNHCR에 의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자가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배경내)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최근 법무부는 한 재소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금서목록'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저자의 명예보호' 등을 내세워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영호 (현 안양교도소 수감 중)씨는 '의식화 관련도서 또는 불은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목록 일체'와 '구치소에 보내는 수용자의 도서열람제한과 관련한 협조문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가 의식화 관련이나 불은서적으로 규정한 도서는 없다”면서 “다만 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도서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수용자들의 도서열람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도서목록은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이는 “목록에 수록된 도서의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법익보호를 위한 대외비 문서”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찬운 변호사는 “법무부의 답변은 궁색할 뿐”이라며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내용이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이 씨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재소자열독도서관리준칙'을 보면 각 교도소 (구치소와 감화원 포함)의 금서 기준은 매우 포괄적이며 모호하다. '준칙' 2조 1항에 따르면 △국체·국시에 위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론을 찬양 △계급투쟁, 공산주의 혁명사 및 농민전쟁사 등에 관한 내용 △범죄 및 범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시사성이 농후하여 보안상 저해요인이 되는 내용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기결수에 한해서 “교화를 목적으로 도서반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교정국의 기준은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광범위

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소원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영호 씨는 의식화 및 불은서적 목록 공개가 거부된 것에 대하여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보영)

또 국보법 체포

한총련 활동 혐의 3명

한동안 주춤했던 국가보안법 사건 연행자가 3월 들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안우춘 씨 등 6명이 IS(한국사회주의자방어위원회) 관련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2일에는 손태원(서울대 농대 졸, 95년 농대학생회장), 홍안나(한양대 안산캠퍼스), 황영수(수원 전문대 졸)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손 씨 등은 현재 경기도 대공본실에서 한총련 산하 경기남부총련 간부로 활동한 경력과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황영수 씨의 방 친구인 조남국(수원 전문대 졸) 씨도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조 씨 가방에 담긴 이적표현물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씨는 “그런 문건이 왜 내가 방에 들어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있을 예정이다. (유해정)

수배해제능성단 오창규, 집행유예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5백일간 농성을 해온 오창규(93년 남총련 의장)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22일 오전 오 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열고 “오 씨가 행한 행동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검찰에 자진출두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93년 한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수배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유해정)

행사와 동정

■ “10대 매매춘 청소년의 다각적인 사후지원방안”

- 때: 3월 23일(목) 오후 2시 · 곳: 종로성당 3층 강당
- 내용: 매매춘 청소년의 보호처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 주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02-708-4181)

■ 추모연대 7차 정기총회

- 때: 3월 25일(토) 오후 4시 · 곳: 연세대학교 공대 신관 강의실 B039
- 주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02-323-7504)

■ 지막방송 실시 1주년 기념 세미나

- 때: 3월 28일(화) 오후 2시 · 곳: 방송위원회 기자회견장
- 취지: 농아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를 위해 지막방송이 실시된 지 1년. 지난 1주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장애인 방송접근권과 방송참여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 주최: (사) 한국농아인협회 (02-588-3368-9)

■ 유엔 인권이사회 참관 출국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은아 씨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56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관 차 지난 19일 출국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24일(금)

제 158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수감·포송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감을 채우고 포송으로 결박한 채 재판을 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탈주사건 직후 김경길 법무부장관이 “형악법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감과 포송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감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모두에게 수감과 포송

인권운동사랑방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과 40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 30여명은 예외 없이 모두 수감과

포송으로 신체를 구속당한 채 재판을 받았다. 그 중 수감만을 찬 피고인은 20여명이며 이들은 대체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던 반면에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10여명은 모두 수감을 참 뿐 아니라 포송으로 결박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결수에게는 법정에서 사복을 착용할 것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이날 조사 대상이 된 30여명의 피고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수의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상희 변호사는 “요즘 법정에서 시승·시감된 피고인 수가 부쩍 증가한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우려를 표명한 후 “재판장은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면서 예외적으로 법정에서의 신체구속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 대법원 김용섭 공보관은 <인권하루소식> 기자의 전화 문의에 대하여 “인신구속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나 새로운 지침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담당자도 “일률적으로 피고인에게 시승·시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랑방’, 대법·고법에 서면질의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22일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질의서를 보내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시승·시감을 하는 경우가 증가한 이유 △변호사 선임 여부가 피고인의 시승·시감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 △판사가 각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피고인의 시승·시감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지 △피고인 모두가 수의를 착용하는 것은 스스로 사복 보다 수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지 등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280조>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김보영)

인권하루소식 합 13호 발간!

99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국내외 인권사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권하루소식」 합본 13호를 만나보십시오

문의 02-741-5363/ 판매가 만원

만화사랑방

이동수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경찰이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6 민사부(재판장 하광호)는 23일 오전 이상준(30, 건국대 졸)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재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국가는 이 씨 등에게 5천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최루탄 사용은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다른 무기 등의 사용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최루탄 투입(과 관련 준수해야 할)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루탄을 살포한 것과 곤봉 등으로 원고 등을 폭행한 것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축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시위진압과정에서 각각 부상을 입었다. 이 씨의 경우 연세대 구내에서 경찰에 쫓겨 탈출구를 찾다가 경찰관 중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아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이들은 지난 1999년 11월 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관련기사 본지 1999년 12월 8일자 참조> (유해정)

한총목 씨 집행유예 석방

전국연합 한총목 집행위원장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신귀섭)은 23일 한 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지난해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를 배후조정 한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유해정)

삼성해복투 김성한 위원장 체포돼

지난달 9일 발족한 삼성그룹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삼성해복투)의 김성한(이천전기 해고자)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22일 경찰에 자진출두한 김 위원장을 체포해 집시법위반과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혐의는 지난달 29일 삼성생명 본관(서울 중구) 앞에서 열린 삼성해복투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유해정)

<특별기고>

철도노조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김혜란(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의 철도노조 점거농성, 철도노조 집행부의 사무실 탈환, 공투본의 재탈환, 집행부의 대의원대회 강행 공투본의 지지, 이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사태 등이 연일 보도되면서 내막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가에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대통령도 87년부터 직접선출하고, 50만 민주노총의 위원장도 직선으로 뽑자고 주장되었던 관공에 찬성만만 있는 부정투표가 관을 치고, 노조가 사용자 측에 돈을 상납하고, 조직강제를 동원해 직선제를 하자는 노동자들을 습격하는 철도노조의 시계는 분명 거꾸로 돌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직접적 계기는 1월 14일 “간선제에 의한 대의원 선출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불발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용으로 점철된 철도노조와 민주노조를 건설하고자 하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의 역사에 있다.

1948년 노조가 설립된 이래 단 한번도 위원장을 전체 조합원의 손으로 뽑아본 적이 없는 철도노조는 최근 드러나는 비리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도청, 노동부, 용산경찰서 등과 두루 돈을 상납하는 우호적 지원 관계를 형성해 왔을 정도로 부패, 비민주, 관료화, 노동귀족화의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의 사건 악화에도 51%가 넘는 조합원의 총회요구를 묵살하고 조합원 3만3천여 명중에 간선으로 선출된 8십여 명만 모여 자신들만의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은 직선제로 개정하되 현재 임원의 임기는 보장한다”는 속이 편히 들여다보이는 결정을 강행한 집행부의 잘못이 크다. 그동안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반성하고 공개 물러나도 용서가 안될 처지에 기득권을 보호받기에 연연한 어용집행부에 대해 공투본은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한 직선제와 그에 따른 총선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들만의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러한 대회가 성사되지 못하도록 노조사무실을 농성장소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철도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외면한 채 민영화에 동조해 왔던 어용노조가 민주화돼야만 생존권 보장투쟁이 가능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철도, 한전, 체신 등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거대노조의 민주화 물결은 ‘민주노조건설, 어용노조민주화’를 내걸고 타올랐던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지금 철도노동자들은 그 마지막 임무를 향해,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투쟁을 책임지기 위해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25일(토)

제 158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경찰, 여성피의자 알몸수색

법 집행의 상식 의심, 인권침해 비난

경찰이 경미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연행한 여성들을 벌거벗겨 “자해용 도구를 찾는다”며 알몸수색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일 새벽 0시 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는 조합간부에게 민주노총 선전물을 전해주기 위해 길을 가던 김숙경(28, 성남지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서태래(23, 민주노총 경기동부협의회), 권아무개(30, *)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이 갖고 있던 선전물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들은 간단한 몸수색 후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시경 변호사와의 면회를 마친 이들에게 경찰은 “다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에 몸수색을 해야한다”며 대기시켰으며, 뒤이어 나타난 여경은 이들에게 웃옷을 모두 벗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질 속에 핀 같은 것” 숨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숙경 씨 등은 “곧 풀려날 사람이 자해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자 계장이 나타나 “남자 경관을 부르겠다”며 공포분위기를 만들어 결국 이들은 알몸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다섯 번이나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생리중이던 서태래 씨는 수치심에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다음날 이들은 모두 불구속으로 풀려났지만 지금까지 총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동부협의회 사무국장 이선규 씨에 따르면 서태래 씨는 현재 사람들을 기피하고 있으며 전화마저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 김도형 변호사는 ‘김 씨 등이 불구속으로 쉽게 풀려날

사안이 있음에도 경찰이 ‘자해’를 빚자 해 알몸수색까지 했다는 것은 분명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태 변호사 역시 “인간적인 모욕감이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의 법집행은 결코 정당한 것일 수가 없다”고 논평했다. 여성단체나 인권단체들도 ‘경 2면으로 이어짐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최근 정부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활동가인 버마인을 사지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그가 돌아갈 곳이 어떤 곳인가? 총선거에서 82%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정권을 인수하지 못한 나라이다. 대학문은 3년째 닫혀 있고, 어떤 정치활동에도 체포·고문·처형이 따라붙으며, 군부를 위한 강제노동에 생계조차 꾸리기 어려운 나라이다. 이와 같이 40여 년 군부통치의 광란이 춤추는 곳으로 우리 정부는 ‘한 인간’을 ‘강제퇴거’라는 관에 넣어 보내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난민의 홍수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난민을 수용하기에 인색한 것도 사실이다. 난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냉혹한 태도는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엄청 악독하다고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닐 지도 모른다.

그러나, 차갑게 얼어붙은 많은 정부들의 문단속을 열려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재단해야 한다. 현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인권외교’를 읊조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과 몇 주전에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국가원수는 버마 등 국제사회의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을 과시했고, “한국은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의 범세계적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94년부터 난민지위를 신청한 53명 중 단 한명도 대한민국의 심사대를 통과한 일이 없다는 사실은 공수포치고는 너무 황당한 공수포이다. 이번 버마인의 경우, 명색이 유엔난민조약의 이사국인 우리 정부의 처사는 “자신들의 난민심사 기간동안 출국시키지 말아달라”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요청까지 무시하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법은 다 어디에 있는지 ‘입국 후 60일 이내에 난민지위를 신청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만이 오도기라도 못할 난민 신청자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는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곳으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에 자신을 비취 봐야 한다. “박해국으로의 강제퇴거·송환금지”(non-refoulement)는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의 초석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난민과 조우하여 최소한의 인권 보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실현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 ‘단 한명도 안된다’는 철통 자물쇠는 난민을 향해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시대 기본적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단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한 미결수가 교정당국에 의한 도서열독 제한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양교도소(소장 박도석)에 수감중인 정형기(전 감총련 집행위원장) 씨는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자료집>이라는 책자를 들여오려 했으나 교도소 측으로부터 불허결정 통보를 받았다. "수용자 교화 및 수용질서 유지에 부적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교도소 측의 이와같은 결정에 불복한 정씨는 법무부에 청원을 했으나 법무부 역시 "교도소 당국의 반입불허결정은 적법하다"며 이 청원을 각하했다. <인권하루소식>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 보안과 임승지 계장은 "자신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누군가가 정보공개청구해서 얻어진 것을 교도소에 반입할 필요가 없으며, 그 책자에 수록된 '의의신청서'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법규를 부정하는 내용이 많다" 불허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질진 행정당국의 '불허'태도는 이 책자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의 시각이다. 즉 <정보공개자료집>은 과거 수감생활을 했던 어느 공안사범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옥중에서 했던 정보공개청구활동의 결과물을 집성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수감중인 공안사범의 교정당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활동을 위한 일종의 모범적인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한 정 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미결 수용자의 신분으로서 '교화'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혹 교화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자료집은 합법적으로 공개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법무부와 교정당국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형기 씨의 도서반입불허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첫 공판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김보영)

☞ 1면에서 이어짐

질이 최소한의 상식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경악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적대응은 물론 이무명 경찰청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여성단체와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해 9월 안양사랑청년회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신혜숙(28) 씨는 즉각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를 해와 자신도 경찰로부터 알몸수색을 당했다고 털어냈다. 그동안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했다는 신 씨는 격양된 목소리로 "9일날 나에게 행해진 몸수색은 자해할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해정)

<독자 투고> 경찰의 알몸수색에 부처 "설사 죄인이라도 이럴 순 없습니다"

김숙경(성남지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지난 20일 저와 동료들은 소지하고 있던 선전물이 선거법 위반이란 혐의로 성남남부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이때 통상적인 신체검사와 신발, 머리핀 등을 맡겨놓는 절차도 거쳤고요. 근데 그날 오후 근데 변호사가 접견을 와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가는데 여경이 오더니 다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날과 같은 신체검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웃옷을 모두 벗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속옷까지 내리라"고 했습니다. 놀라서 "왜 그러냐며" 이유를 묻자 자해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질 속에 핀 같은 것을 숨기고 들어 올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갔다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만나고 들어왔고 게다가 밖에서 의경이 이 모습을 모두 보고 있었는데 언제 그런 일을 했겠냐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음날이면 나갈 것이고 자해할 생각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항의도 했고요. 그러자 여경이 밖에 있던 유치장 담당 계장을 불렀습니다. 계장은 들어와서 "시키는 대로 하지 뭐 하는거냐. 계속 이러면 남자 직원을 대동하고 신체검사를 할테니 알아서 해라"고 욕박을 지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밖에 있는 남자 직원들을 부를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성 앞이라도 알몸이 돼 나서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남성을 부르겠더니요. 결국 우리들은 웃옷 모두 벗고 바지와 속옷까지 모두 내린 상태에서 질 속에 숨긴 물건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다섯 번이나 해야했습니다. 생리중이던 한 동료는 수치심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생리중이던 한 동료는 수치심에 눈물까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죄 없이 유치장에 들어간 것도 억울한데, 그러한 대우를 받았더니 정말 억울합니다. 세상 살면서 이보다 더 모욕적인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질차고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는 일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죄인이 된 사람에게도 최소한 지켜져야 할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장도 청구되지 않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시는 올바른 법집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28일(화)

제 158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삼성그룹, 건물 내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대기업이 집시법의 집회 금지규정을 악용,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남대문경찰서로부터 집회개최 불가 통보를 받았다. 25일부터 삼성생명 본사 건물 21층에 엘살바도르 주한 대사관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건물 앞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국내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지

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되며(제11조), 이를 어길 경우 주최자, 질서유지인, 집회참가자 모두 처벌받게 된다.

결국 삼성그룹은 노동자들의 집회가 자주 열리는 건물에 대사관을 유치함으로써 집회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것. 앞서 삼성측은 주요 간부 8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건물 앞에 2000년 1

월부터 12월 사이 9개월간 집회신청을 하는 등 해고자들의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왔다. 지난 97년에도 삼성측은 이천전기 노동자들이 고용승계 및 복직을 요구하며 그룹 본관 앞에서 연일 집회를 갖자 바로 옆 별관에 싱가포르대사관을 유치해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한 바 있다. 그 후 노동자들은 그룹본관 대신 계열사인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게 됐다.

한편, 지난해 7월에도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광화문빌딩은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에 가까운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건물 앞에서 대형집회들이 연일 개최되자 파격적인 임대조건을 제시, 브루나이 대사관을 빌딩 내로 입주시켜 건물 앞 집회를 금지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대사관 앞 집회의 경우 외교상의 이익과 집회의 자유 사이의 비교 법익을 고려한 뒤 특정한 집회방법만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며 "현행 집시법이 대사관 앞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매향리는 지금 전쟁 중'

국방부 앞, 미공군 폭격연습 중단 촉구 집회

"국방부 장관 얼굴이라도 보고 사과라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절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잘못 투하된 폭탄에 의해 머리가 박살난 16살 소년과 폭격으로 즉사한 임신 8개월의 주부. 폭음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한 마을에서만 자살한 사람만도 30여명... 지난 51년 8월 매향리(경기도 화성군)가 미공군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된 이래 매향리 주민들은 오늘날까지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치루고 있다. 그리고 27일, 매향리 주민 5백여명은 폭격 중단을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국방부 앞에 모였다.

"비행기가 뜨면 유리창이 깨질 정도예요. 임신기간에는 아예 매향리에서 살 생각을 버려야해요." (고혜숙, 51) "폭음소리에 주민들이 목소리가 하도 커져서 객지 사람들이랑 전화통화를 하면 화를 내거나 시비를 거는 걸로 알아듣기 십상이죠. TV 시청이요? 말도 마십시오. 하루하루가 이런 전쟁통인데 다른 일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우종근, 49)

지난 50년간 국가안보란 미명하에 말 한마디 못하고 공포에 떨며 살아야만 했던 이들은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내며 "국방부 관계자들이 매향리에 와서 살아봐야 그 고통을 알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집회참가자들은 대부분이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지만 이들은 "죽을 때까지 이 투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집회에는 국방부 관계자는 물론 단 한 명의 미군 관계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오직 전투경찰 6백여명이 동원돼 이들을 에워쌀 뿐이었다.

미 폭격장으로 인한 매향리 주민들의 소음피해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재판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택진)

서울고법, '수감포송 새 지침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3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질의한 '법정 피고인 인신구속 기준'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왔다(본지 3월 24일자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해 △새로운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선임이나 참석여부는 신체구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재판장은 교도관의 보고를 참작해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영)

알몸수색 피해자, 경찰관 고소

민주노총, 30일 경찰청 규탄집회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성남남부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 수감 시 알몸수색을 당한 김숙경(성남지역여성노조 조합원) 씨 등 3명이 27일 민주노총과 함께 김용식 성남남부경찰서장과 조종일 성남남부경찰서 수사 2계장, 성명 불상의 여경을 고소·고발했다(본지 3월 25일 참조).

이들은 고소·고발장에서 "피고소인들에 의한 강제 알몸수색 행위는 적법한 절차와 영장에 의한 수색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불법행위"라고 밝히고 "경찰이 경찰청 훈령 8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근거로 합법행위라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피해자들은 오는 30일 낮 12시 경찰청(서울 서대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는 물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경찰청 훈령 폐지 등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유해정)

주요공판안내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 3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

청송감호소 출소자, 무고 사건

· 윤치고(무고죄) - 청송보호소 수감당시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제기. 그러나 하루만에 재정신청 취하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자 교도관들이 서류를 조작했다며 교도관을 고소. 이에 교도관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윤 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 3월 28일(화)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속행

매항리 미 폭격장 소유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 매항리 주민 전민규 외 14명
- 3월 29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법 561호, 선고

인권운동가 서준식 국보법 위반 사건

·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국보법 및 보안관찰법)
- 97년 제 2회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여기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지난해 열렸던 1심에서 국가보안법은 무죄판결을 보안관찰과 관련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3월 31일(금) 오후 4시, 서울지법 321호, 속행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권오혁(민권공대위, 국보법 이적표현물 소지)
- 3월 31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법 320호, 선고

▶ 인권시평은 필자 사정으로 한 주입니다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0일 - 3월 26일)

1. 56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53개국 정부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56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 이번 회기에서 인권단체들은 고문과 위협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운동가를 위한 특별보고관'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회기는 오는 4월 28일까지(3/20)

2. 경찰에게 인권을 말할 수 없다

경찰이 자해도구를 찾았다며 경미한 선거법 위반 여성 피의자들에게 알몸수색을 실시(3/20) / 한국말이 서툰 네팔여성이 경찰에 의해 정신병자로 몰려 정신병동에 6년간 수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3/24)

3. 버마 활동가 강제추방 위기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해온 버마인 활동가 샤린(가명)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해. 샤린은 정부의 강제퇴거 명령에 맞서 이의신청과 난민지위신청을 제기한 상태지만 한사코 난민인정을 거부해온 한국정부가 샤린을 난민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3/22)

4. 용산구청장, 미군과의 전쟁선포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관내에 있는 미군부대원들이 소속차량의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과 관련해 한미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나선데 이어, 미군영내에 불법으로 짓고 있는 호텔과 주차장 철거를 요청. 성 구청장은 미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는데(3/22)

5. 과잉진압 부상자, 국가배상 당원

서울고법 민사 16부, 경찰이 집회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3/23)

6. 직선제행 열차는 달리고 싶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직선제를 요구하며 철도노조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자 철도노조측이 지난 20일 폭력을 동원해 농성장을 탈취해. 이 과정에서 조합원 10여명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3/20)

<나라 밖 인권소식>

유엔개발계획, 세계 3대 부자의 재산이 인구 6억명인 48개국의 전체 국내총생산보다 더 많다고 밝혀(3/20) / 유엔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 사무소, 전세계 어린이 9백여만명이 조직범죄단에 의한 섹스무역이나 아동일매에 걸려들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혀(3/2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29일(수)

제 158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장애인 시청권 나 몰라라

자막 방송률 고작 평균 10%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자막방송이 실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방송사들의 자막방송률은 평균 1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청각장애인이 19만여명에 달하는 것에 비해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수신기 보급 역시 1만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28일 오후 자막방송 실시 1주년을 맞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 방송 접근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백50여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참가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 장애인 정책의 빈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종인(나사렛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100%, 일본은 30% 정도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자체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송3사의 평균 자막방송률은 10%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청각장애인 수가 95년 현재 19만 4천여명을 웃돌고 있지만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외장형 자막수신기와 자막수신용 TV 보급은 1만여대에 불과하다"며 "이는 외장형 자막수신기와 자막수신 TV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개정 방송법 역시 허수아비

또한 최근 개정된 방송법 역시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별다른 진전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노력하여야한다'는 규정이나 '보도방송, 선거방송, 행사(국경일이나 기념일의 의식)방송 등을 자막방송으로 방영'하도록 한 규정이 새로이 신설됐지만 그 실효성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부분. 이에 대해 김종인 교수는 "이 모든 조항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며 이 조항을 '방송하여야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꾸지 않는 한 방송사업자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를 시행할 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잠시 측사만하고 세미나장을 빠져나가 참가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남택진)

<알려드립니다>

▷ 28일 열릴 예정이던 양지마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결심재판이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인 연기군청측 요청에 의해 5월 2일 오후 2시로 연기됐습니다.

▷ 오늘로 예정되었던 매항리 미 폭격장 소유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재판부 사정으로 한 달간(4월 29일) 연기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

『한 노동자가 위험하다』

『일파시』 제5집 / 갈무리 / 1999 / 143쪽

"유일하게 세금 낼 때만은 나도 인간이라는 것을 느낀다 / 국가는 세금과 지서만은 차별하지 않고 고루 나누어주기 때문이다 / 은행 창구 앞에 돈을 내밀자 / 한달 치의 인간구실값이 / 팍! 도장 찍힌다 그러나 꼭 한 달 / 한 달만 유효한 생존영수증 / 한달 후에도 내가 인간일지 장담 못한다" (손헌수, 「인정받던 시절에는」 중에서)

뼈아픈 노동, 더 뼈아픈 실업의 고통 속에 흔들리는 노동자의 삶을 담은 시집이 나왔다. 『한 노동자가 위험하다』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동인모임 '일파시'가 펴낸 5번째 시집. 93년 1집 『햇살은 누구에게나 따스히 내리지 않았다』를 통해 존재를 드러낸 이들은 이름 그대로 '노동과 삶과 시는 하나'라는 낮은 진실을 몸소 증명해온 사람들.

『일파시』의 시에는 곧 끊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연처럼 고단하고 불안한 노동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변경으로 내몰린 가난한 하층 노동자로서의 시인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실업의 위협. 기계화, 세계화, 구조조정 등의 터널을 지나면서 비축된 식량도 무기도 없이 실업의 위협에 내몰린 이들 시인은 자신들이 인간이 아닌 실업자, 영세민, 사회적 부담으로 불리는 현실을 고통스럽게 뱉어낸다. 스스로 더 이상 인간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절규한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일만 바라보고 살던 한 노동자가, 그의 가족이, 세상이 위험하다고 외친다.

하지만 시인들은 흔들리는 연을 지탱해줄 연줄을 열매에 감고 잘게 부서진 희망을 추려모으는 일도 잊지 않는다. 불거진 이 땅의 지하도에서 기거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마음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배경내)

제네바 인권소식 ②

인종차별 위험 수위

2001년 인종주의 반대 세계대회 개최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셰퍼빌이란 지명의 도시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맞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이 대량 학살되었다. 훗날 사람들은 이를 기념하여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그로부터 40년, 인종차별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안타깝게도 답은 부정적이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오스트리아 극우 정당의 연정 참여는 이러한 추세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부딪쳐 하이더가 자유당 당수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외국인 혐오주의·신나찌즘은 유럽 전역에서 점점 세를 더해 가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급증한 이주노동자들이 신체적·정신적 차별과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 2월 스페인 남부 알메리아 지방에서 벌어진 모

로코 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사태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같은 신인종주의가 인터넷의 발달을 등에 업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인종 혹은 민족 간의 갈등으로 표면화되는 분쟁도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동티모르,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체첸 등지에서는 하나같이 인종청소가 뒤따랐으며,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도 서로 다른 인종들 간에 죽고 죽이는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 기승

이러한 흐름에 맞서 유엔은 내년 9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 및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계대회(이하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장소는 인종차별 철폐 투쟁의 성지로 꼽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지난 21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은 제네바 유엔 회의장에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토론회를 열고 '세계대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정부 대표, 민간단체들이 참석해 '세계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 편지를 보내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고용, 교육, 의료 혜택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죽음의 대열에서까지도 인종차별이 이루어진다. 피비린내 나는 인종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며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 등 참석자들은 "이번 세계대회에서는 아름다운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계획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특히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맥두갈 씨는 지난 1월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전문가회의의 논의 내용을 소개하고, "인종주의의 전파도구가 되고 있는 인터넷을 인권과 관용의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 등 인종주의에 맞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은아·이주영)

(최은아·이주영)

강대국 등쌀에 인권논의 휴탕물

미·중·러·쿠바 등 인권 공방

인권을 정치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강대국들의 버릇이 이번 인권위원회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지난 23일 오후, 평소와 달리 2백여명에 이르는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는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장은 삼엄한 경비 속에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국제외교 무대에서 '수퍼 파워'를 행사하는 미국 장관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우선 파룬궁 운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를 예로 들며, "중국에서는 정치적 신념을 평화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체포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나아가 "올해에는 중국에 대한 결의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대한 결의안"이란 중국의 인권 침해 규탄 결의안을 의미한다. 지난해 인권위원회에서 미국이 제출했던 '중국에 대한 결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또한 올브라이트 장관은 "카스트로 체제는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고, 러시아 연방은 체첸의 민간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무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쿠바와 러시아 연방에 대한 규탄을 서슴치 않았다. 수단, 버마, 이라크 그리고 이란 등도 그녀의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이에 쿠바, 중국 등은 회의 끝 무렵 반박권을 얻어 미국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차오 중화이 중국 정부 대표는 "인종차별, 경찰 폭력, 감옥 내에서의 고문,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캠퍼스 안에서의 총기 난사 등 미국 사회의 인권 침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미국은 중국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국의 인권상황부터 돌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연방 대표는 "체첸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 영토를 지키기 위한 행위"라며 변명을 열을 올렸다.

한편 이 광경을 지켜본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표정은 씩씩했다.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 대표들의 발언에도 그 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회의장엔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없이 외교적 이익만을 쫓는 정부 대표들의 얼굴이 출렁거릴 뿐이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30일(목)

제 158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신선대·우암 부두 노동자 파업 현장을 가다>

'내몰린 파업, 노조 포기 못해'

3월 25일 부산 대연동에 자리한 경성대학교 학생회관 2층 총학생회실. 그곳에는 학생회 간부 대신 한 눈에도 노동으로 단련된 단단한 체격, 구릿빛 얼굴의 중년 노동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20평도 채 안되는 공간에 2백명은 좁히 넘는 노동자들이 뿔뿔이 앉아서 구호를 외쳤다. 벌써 한달째 파업 농성 중인 신선대·우암 부두 노동자들.

"대학 문턱도 넘어보지 못했는데, 대학에서 밤낮없이 한달을 살고 있으니 호강임죠." 겉보기에 50대 중반은 된 직한 노동자가 묻지도 않는 말에 너스레를 떨었다. 노조 간부에게 나이를 물으니 부두 노동자들은 원래 나이보다 열 살까지도 더 들어보인단다.

키가 농구 선수처럼 커서 구부정한 감경동 신선대 지부 총무부장 '법원의

판결을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기 때문에 일이 꼬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의 공식적인 입장도 간부장의 입장과 같다. "폭력적으로 사업장 밖으로 내몰린 파업"이고 "회사측은 복귀조차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경성대에서 장기 파업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오 금정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성대에 있던 노조원들이 대열을 갖추고 앉아 노동가와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불법 연행된 우리 동료 투쟁으로 구출하자!"

익숙한 구호였지만, 따라하는 노동자들의 손짓도 구호소리도 자연스럽지 못했다.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과는 달리 부두 노동자들이 처용하는 투쟁이라 익숙치 못하다는 게 노조 간부의 설명이다. (2면에 계속-->)

행사와 동정

■ 민가협 제15차 정기총회

· 때: 3월 31일(금) 오후 2시 · 곳: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02-763-2606)

■ 사형폐지를 위한 열린마당

· 때: 4월 4일(화) 오후 1시 30분 · 곳: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 행사: 피해자가족 보호와 사형제도, 사형수의 삶과 죽음 등에 대한 강연 등
·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02-776-7208)

■ 부산 여성문화인권센터 창립

· 부산지역 여성들의 인권을 책임질 '여성문화인권센터'(대표 신혜숙)가 문을 연다. 부산여성문화인권센터는 지역 여성들과 함 살림인권문화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창립대회는 3월 30일(목) 오후 6시 30분 해운대 신시가지 좌동 전화국 5층강당에서. (051-702-1366)

한단석 씨 "간첩" 아니었다

피의자 인격권 보호대책 시급

지난 1월 간첩혐의로 구속된 한단석(72) 전북대 명예교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28일 서울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고영한)에서 열렸다. 이를 계기로 경찰이 단순 국가보안법 사건을 "고정간첩"으로 부풀려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 1월 한 씨를 연행해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고정간첩" 사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애초 경찰은 "한 씨가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돼 90년대 초 노동당에 입당한 뒤 공작금을 받고 각종 기밀을 북한에 보고해왔다"고 주요 혐의를 발표했던 것.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 씨가 "한국가단체 구성원인 조총련 간부" 최동욱 씨를 만난 점과 자택에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점을 들어 국가보안법 8조(회합·통신) 및 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 위반 혐의만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찰의 "고정간첩" 발표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가협 남규선 총무는 "경찰이 실적올리기에 급급해 합리적 증거도 없이 덮어놓고 '간첩'이라고 발표하던 구시대의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예로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권오혁(민권공대위) 씨의 경우도 결국 이적표현물 소지죄만으로 기소된 바 있어 수사기관에 의한 고질적인 피의자 인격권 침해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4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유해정)

아빠는 회사에 안 가고 왜 학교에 가나 마피아와 투쟁을 노-노 싸움이라니

경찰의 편파 수사에 분노

이들은 경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분개했다. 박대립 대의원은 "2월 26일 노동부와 회사, 양측의 노조 대표들이 협상을 하자고 해서 가는데 각목 들고 항운 노조에서 쳐들어 왔어요. 폭력사태가 났는데 경찰서장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동안 항운노조에 의한 폭력사태는 10여 차례. 20여명의 부상자가 속출했고, 26일의 사태에서는 KBS, PBS 기자들도 폭행을 당했다. 노조는 경찰에 폭력 사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항운노조 노조원 2명만 입건되는 것에 그쳤다. 그런 경찰이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저속으로 고속도로를 틀게이트로 빠져나가던 화물노련과 하역노조원들을 그대로 연행했던 것이다. 투쟁도, 파업은 더욱 처음인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은 왜 민주노조를 갈망할까. 그들은 자신들의 파업이 노-노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한국노총 산하의 항운노조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그게 무슨 노조냐!"는 게 신선대, 우암 부두 노동자들의 반응이었다. 마피아! 그들에게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다. "우리는 마피아와 싸우는 중입니다."

정부가 왜 마피아 편을 드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쳐먹은 게 너무 많다"는 말로 요약된다. 항운노조는 50년 동안 절대권력을 장악해왔다. 대표적인 어용노조로 군림하면서 노조라기보다는 인력공급업체 노릇을 해왔다. 이전에는 부두에서 일하려면 항운노조에 수백만원씩을 갖다 바쳐야 했다고 한다. 91년 개장한 신선대 부두가 회사에서 상용직 직원을 채용하자 항운노조가 이에 반발해 노임손실보상금을 회사에 요구 98억원을 받아냈고, 97년 개장한 우암부두에서도 2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게 무슨 노조여! 마피아지

"갈써 벌써 20건이나 사고가 발생했다잖아. 참 걱정이야. 대책없이 대체 인력을 끌어다 쓰면 어찌되는 거." 경찰서 옆 식당에서 만난 허준(47)씨가 걱정을 늘어놓았다. 25톤에서 30톤에 이르는 컨테이너 박스를 배에서 내려다 야적을 하거나, 트럭에 실는 일은 6개월은 경험을 쌓아야 겨우 할 수 있는 숙련 작업을 요구한다. 임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니 대형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당연했다. 주로 대형장비를

움직이는 그들은 때로는 12시간, 24시간을 장비차 안에 갇혀 신고 내리는 일을 쉬임없이 하게 된다. 예전에는 3교대였던 것이 지금은 2교대고, 일에 따라 1백만원에서 2백50만원까지 월급을 받았다. 그런 열악한 조건 때문에 항운노조가 아닌 민주노조가 생기자 대거 가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이 승리하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다시 예전의 세월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아빠가 회사에 출근할 날은?

25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가족대책위원회 이경희 위원장은 "초등학교 1학년 딸이 하루는 왜 아빠가 회사에 가지를 않고 학교에 가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3월 27일로 예정되었던 화물노련의 총파업은 시민중재단의 요청으로 유보되었다. 시민중재단과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여당을 바쁘게 접촉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신선대·우암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전국의 운송업계로 번지게 될 것이다. 노동을 천적으로 아는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부두 현장이다. 돌아갈 때 그들의 소박한 노동권도 들고 갈 수 있도록 연대의 손길을 뻗어야 할 때다. 그날도 신선대·우암부두에서는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대체인력에 의해 불안스럽게 계속됐다. [박래군]

==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 파업 주요일지 ==

- 1999년 12월 10일 민주노총 화물연맹 소속 전국운송하역노조 신선대·우암부두 설립
- 12월 13일-23일 하역노조, 양 회사에 4차례 단체교섭 요구, 회사측 거부
- 12월 29일 노동부, 신선대·우암부두에 대해 복수노조로 해석, 불법 규정
- 2000년 1월 11일, 노조, 부산지법에 단체교섭거부중지가처분 신청
- 1월 18일 노조, 1차 태업
- 1월 27일 1단계 파업, 고속도로 저속운행
- 1월 31일 2단계 파업, 고속도로 저속운행 전국 확대
- 2월 2일 민주노총, 3단계 파업투쟁 유보 선언
- 2월 11일 부산지법, 합법노조 인정, 회사측에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판결
- 2월 25일, 노조, 태업 돌입
- 2월 26일 노사정간담회, 항운노조측의 폭력사태로 부산, 노조, 경성대에서 파업 농성 돌입
- 3월 27일, 화물노련, 시민중재단의 요청으로 총파업 유보 선언

명예회복보상법·진상규명특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청회

- 일시: 3월 30일(목) 오후 3시
- 장소: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주최: (가칭) 민주화운동정신 계승국민연대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박래군(02-741-53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전·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3월 31일(금)

제 1586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유해정

에바다, 다시 혼미 속으로

'캐스팅 보트' 사퇴, 새 이사회 구성못해

에바다복지회 새 이사회 구성문제를 둘러싸고 현 이사회 내에서 팽팽한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캐스팅 보트'를 쥔 한 이사가 전격 사퇴를 표명했다. 이에 4년을 표류해온 에바다 사태는 다시 새로운 혼미상태 속으로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사의를 표명한 이사는 팽택대학교에 재직중인 김범수 교수. 그는 7명으로 구성된 현 이사회 내에서 3대 3의 팽팽한 세력구도 복판에 서서 최근 양측으로부터의 압박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에바다 사태는 1998년 국정감사에서 김성기 팽택시장이 사태 해결을 다그치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 이성재 의원(당시 국민회의, 현 민주당)을 관선 대표이사로 추대할 것을 약속한

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이성재 대표이사 체제의 이사회는 비리재단 측의 완강한 저항과 김성기 시장의 미온적인 태도 앞에 사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무엇보다도 7명으로 구성된 현 이사회에는 비리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최성창 전 대표이사의 일가가 여전히 3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왔다.

김 교수가 사의를 표명한 시점은 현 이사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31일 바로 전날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에바다 사태 해결을 바라는 강한 여론을 반영하여 김철준 변호사, 이찬진 변호사 등 개혁적 인사들 7명이 이미 새로

운 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있었고, 관계자 말에 따르면 김 교수는 애초 이들을 승인하는 쪽에 기울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달 전부터 갑자기 태도를 바꿔 최성창 전 대표이사도 함께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은 당연히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 교수의 사퇴에 따라 현 이사진은 새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게 됐다. 게다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관선이사 임명권한을 팽택시장이 행사하도록 돼 있어 김 시장과 가까운 구 재단측이 에바다를 다시 장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에바다 농아원 권오일 교사는 "에바다 사태가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탄했다. [유해정]

사이버토론 한창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4·13까지

'사이버 상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거법 위반인가?' 4·13 총선을 앞두고 네티즌들의 온라인토론이 한창이다. '선거법과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하여 진보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2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 4월13일까지 계속된다.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토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토론회 기간 중 세가지 발제문이 게시되며, 네티즌들은 게시관에 발제문에 대한 의견 및 의문사항 등을 올림으로써 토론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통신회사 검열 자체 촉구, 선거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문 순서는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3/30),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4/3) △선거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4/6)이다. [김정희]

만화사랑방



이동수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학생 내모는 등록금 인상,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에

“등록금 고지서를 보시더니 부모님이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오죽하면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더군요. 아무래도 휴학해야 할 것 같아요.” 한양대 교정에서 만난 한 학생의 한숨은 길다.

30일 한양대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총투표의 결과는 투표율 55%에 동맹휴업 찬성 92.5%였다. 공고된 등록금 납부기일은 28일. 학교측에서는 기한이 지나자 등록금 납부를 거부한 1천1백여 명의 학생들을 전원 제적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처럼 학생들을 몰아세운 등록금 인상은 재학생 11.45%, 신입생 15%. 이제 등록금은 2백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더욱이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는 것을 이용해, 대부분의 대학이 재학생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3때 1년 동안 밤 새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2백8십만원을 벌었는데,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니 한 푼도 안 남네요. 이제 2학기가 걱정이에요.” 올해 건국대에 입학한 조정식(수학교육 1)씨의 이야기다. 등록금이 12.5% 인상된 건국대의 경우, 지난 28일 1천8백여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열었고, 1천6백6십1명이 찬성해 현재 본관을 점거 중이다. 이 학교 부총학생회장 박범진(응용생물화학 4) 씨는 “지난 겨울 총장(맹원제)님을 만나, 학생과 학교가 함께 논의해서 등록금 액을 책정하자고 제안했어요. 돈 없어서 학교를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도 드렸죠. 그런데 총장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당연히 학교를 못 다니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더군요.’라며 당시의 황당함을 전했다. “그 이후 학교 쪽은 학생들과 협상이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 박 씨는 덧붙인다.

지나가던 최지혁(경영 3) 씨도 말을 거른다. “등록금이 오른 만큼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그래도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도대체 등록금은 어디다 쓰는 건지... 95학번인데 입학할 때나 지금이나 뭐 하나 좋아진 게 없어요.” 다른 학교라고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9%에서 많게는

15%까지 등록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일례로 경원대, 한국외대 용인 교정 등으로 이뤄진 경기 동부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는 경기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교육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30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동맹휴업에는 한양대 외에도 홍익대, 조선대 등 여러 학교가 함께 한다. 이들의 공통적 요구사항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GN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 △사학 재단의 이월 적립금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학 재정으로의 환수 등이다.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등록금이 본격적으로 문제화 된 것은 지난 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그후 10년 동안 사립대학 등록금은 3배 이상 인상되었다. 대학당국은 ‘불가인상과 재정난’을 들어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객관적인 수치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 인상을 훨씬 뛰어넘어 오히려 등록금 인상이 불가 인상을 조장한 꼴이다.

문제는 전체 학교 운영비에서 학생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83%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은 65.5%.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분 없이 학생등록금 징수가 없는 영국·독일·프랑스에 비교해 매우 높은 비율이다. 등록금이 비싸기로 소문난 미국만 하더라도 학생등록금 의존률은 50%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강조되어 온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등록금에 대한 의존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김삼호 연구원은 “비영리 기관인 학교에서도 시장논리가 판치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국가가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이죠.”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김선경 씨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 확보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이 기본적 권리인 만큼, 국가는 돈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차단되지 않도록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GNP 대비 교육재정 비율은 4.2%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0.1%가 줄었다.

한편 사학재단의 민주화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학교들은 ‘재정난’을 호소하지만, 99년 2월 현재 전국의 사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이월·적립금의 총액은 총 2조8260억 원. 98년 한해에만 7천4백8십2억원을 남겼다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발간한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고발한다. 이러한 현실은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윤을 추구했다는 비판을 가능케 한다. 이에 김 연구원은 “국고 지원이 늘어난다 해도 사학의 운영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말짱 헛것”이라고 강조한다. 교수·학생·직원이 참여해 학교 재정의 예·결산을 심의·운영하는 것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남택진, 백은관,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2000년 4월

(제1587호 ~ 제1605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4월 1일(토)

제 158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우리도 교사가 되고 싶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교사 임용 촉구

31일, '전국 시국사건관련 교원미임용자 원상회복추진위원회'(공동대표 유윤식, 이하 전미추)는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80년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여전히 교사임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의 임용을 촉구했다.

'전미추'가 현재까지 파악한 전국의 미임용자 수는 총 61명. 현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전교조운동이나 시국사건 등으로 해직되거나 임용에서 제외됐던 321명이 복직 또는 임용된 데 비해, 이들이 여전히 교사의 꿈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법의 미비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89년 7월부터 90년 10월 사이에 △국립 사대·교대의 졸업자 가운데 △시국사건과 관련 임용에서 제외된 사람만을 구제대상으로 설정한 것.

특별법이 특정기한을 설정한 것은 당시 전교조 출범을 전후하여 교원임용 과정에서 보안심사 강화지침이 내려져 임용되지 못한 피해자가 급증했던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89년 7월 이전과 91년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경력을 이유로 보안심사나 구 교육법 77조의 '성행불량' 조항에 걸려 임용되지 못한 피해자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85년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86년 노동운동으로 구속, 이를 이유로 임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유경에 씨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다 졸업이 늦춰지거나 임용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특정 시기에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와의 면담과정에 참석했던 '전미추'의 조호원 부위원장은 "정부도 현행 특별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수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구제방안은 제시하지 않고있다"고 전했다. (배경내) 서라도 차별없는 명예회복과 구제가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집회·시위현장에 신종 기동타격대가 등장했다. 출자 하나만 들고 백점만 점의 집회·시위통제 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의 경제지역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집시법 조항을 애용하여 삼성생명과 광화문 동화 빌딩 등이 줄줄이 '외국공관 유치작전'에 나선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 권리의 초라함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도덕하며 자의적인 행동을 할 때, 그에 맞서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이에 후자는 왜 하필 집회·시위로 의사표현을 하려 드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것은 의사표현의 효과적인 수단이 집중·독점되어 있는 현실사회에서 집회·시위란 사회적 약자나 정치적 소수자가 택할 수밖에 없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집회·시위로 의사표현을 하려 할 때 어딜 찾겠는가? 그 표현을 가장 들려주고 싶은 대상을 찾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갈 곳은 없다. 집회·시위가 제한된 주요도로는 세종로에서 통일로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촘촘하며, 청와대·국회·법원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폐쇄된 골목이며, 외국공관을 경쟁적으로 유치한 건물들은 길모퉁이마저 막고 서있다.

문제의 뿌리인 집시법이 어떤 법인가? 그것은 5·16 이듬해인 62년에 제정, 유신체제하인 73년과 서울의 봄을 뒤로 한 80년에 개정되었다. 즉 국회가 아닌 군사독재자들의 불법 '입법기관'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은 법이다. 이 과정에서 설정된 광범위한 금지구역은 보물찾기하듯 집회장소를 찾아내야 하는 불합리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다.

물론 집회·시위의 권리에 타인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외국 공관의 경우 외교관의 안전과 업무수행을 위협하는 시위·집회 방식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1백 미터의 출자'로 상징되는 무조건적 집회·시위 금지에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숨칠 수 있는 '공공의 광장'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가 없다. 천차만별일 수 있는 집회·시위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없이 집회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외치고 싶다.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후련하게 "양키 고 홈"을 외쳐대고 싶다. 줄자를 들고 집회장소를 찾아 헤매는 일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우리는 '1백 미터' 안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이달의 인권하루소식 (2000년 3월)

흐름과 쟁점

1. 알몸수색에 벗겨진 경찰의 인권의식

경찰이 자해도구를 찾겠다며 경미한 선거법 위반 여성 피의자들에게 알몸수색을 실시해 (3/25)
유치장 등에서의 몸수색, '관리' 일변도 관행에 '인권' 시각에서 문제제기

2. 살인사건 제조기 주한미군, SOFA부터 수리해라

지난달 이태원 미군전용클럽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이 미군에 의해 살해된 데 이어 동두천에서도 주한미군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적인 SOFA개정 촉구하고 나서 (3/16), 코언 미국방장관 방한, SOFA개정 협상 재개 결정 (3/17) 불평등한 SOFA개정없는 주한미군범죄 근절 못해

3. 사지로 등 떠밀 순 없다. 한국정부 난민고려 바닥수준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해온 버마인 활동가 사린(가명)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해 (3/23)

4. 처우개선 나팔속에 가혹행위 선음

조선족 최광범 씨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외국인보호소 처우에 항의하며 자해를 시도하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이목 집중돼.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체불임금 받을 때까지 추방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으나 발표 당일에도 경찰이 조선족 동포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3/8)

5. 외국공관 유치작전, 밀려나는 집회시위

삼성, 해고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집시법의 집회 금지규정을 악용해 사옥 내 외국대사관 유치 (3/28)

6. 천정부지 등록금 인상에 휘어지는 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외면한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학원가 몸살 (3/31) 정부 '수혜자 부담원칙' 교수, 교육기획 차단 막기위해 최소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선 확보해야

7. '장애인과 차별' 고리를 끊어라

장애인이란 이유로 대학입학을 거부당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교육부와 서울대를 고소 (3/18). 한편 맹인안내견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대학측으로부터 생활관 입소 거부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3/14) /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한 중증장애인이 남편을 살해해 재판을 받게 되자 시민사회단체가 구명운동에 나서 (3/11)

8. 92주년 세계여성의 날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노동단체와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권익보호를 요구하며 다양한 행사 벌여 (3/5-12)

인권시평

- 이제는 평화를 이야기 하자 (이재훈 한겨레 기자, 3/7)
- 보살피는 사람의 권리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3/14)
- 인간의 존엄을 다시 생각함 (강금실 변호사, 3/21)

논평

-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3/11)
- 유령공대위는 가라! (3/18)
-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3/25)

기획기사

- 3·8세계 여성의 날 기획1~3 여성인권 위협하는 빈곤의 여성화 (3/8)
- 여성의 몸에 대한 일상화된 테러 (3/9)
- 여성인권, 국제적 보장의 발자취 (3/10)

기고

- 제주인권학술회의와 관련해 엄혜진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3/4)
- 정영선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3/10)
- 이정주 (또하나의 문화, 3/16)
- 철도노조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김해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3/24)
- 설사 죄인이라도 이럴 순 없습니다 (김숙경, 성남여성지역노동조합, 3/25)

현장보고

- 내몰린 파업, 노조 포기못해 - 신선대 · 우암부두 노동자 파업 현장을 가다 (3/30)
-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 학생내모는 등록금 인상,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에 (3/31)

이달의 인권하루소식 (2000년 3월)

인권일지

1. 법무부, 인권운동가에 대한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재야운동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간첩" 이라고 주장. 인권단체들 격분 (3/2)
2. 봉천 3동 철거용역 사무실 방화 혐의로 연행된 철거민, 혐의 안 드러나자 애꿎은 집시법으로 구속 (3/3)
3. 건설 노동자 주 69시간 노동에 시달려, 건설연맹 실태조사 발표 (3/3)
4. 경찰, 시위현장 지나던 시민폭행 물의, 피해자 법적투쟁 준비 (3/7)
5. '간선제' 고집 · 강행한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직선제 요구 노동자와 충돌 아수라장 (3/8) / 철도노조, 직선제 요구하며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 내쫓아 (3/21)
6. 서울대 시설관리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생계 보장 요구, 학생들과 공동 서명운동 (3/9)
7. 96년 시위과정에서 사망한 고 노수석씨 손해배상 소송 기각, 재판부 "노 씨의 사인은 경찰의 과잉진압 아닌 개인의 심장이상" 판결 (3/15)
8. 지역의보 적자 1조2천억, 시민사회단체 국고지원 50% 약속 이행 촉구 (3/16)
9. 고문피해자 권대현 씨, 국군 기무사와 군교도소에서의 고문 후유증으로 10년제 정신질환, 지인들 지원 호소 (3/17)
10. 교회여성연합회, 대인지뢰피해자 지원사업 나서 (3/17)
11. 정부 선처 약속 믿고 자진출두한 수배자 유병문 씨 징역 3년 선고, 수배해제 요구 조계사 농성 5백일 물거품 (3/18)
12. 제56차 유엔 인권위원회 개막, 4월 28일까지 6주간 열려, 21세기 인권의제 총집결 (3/20)
13.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 포철의 고용승계 요구 전국순회투쟁, 전세계노동자 연대투쟁 '포항제철 반대의 날'로 화답 (3/21)
14.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를 이유로 교도소 급서목록 공개 거부 (3/23)
15. 국보법 재시동, 한국사회주의자방어위원회 혐의 6명, 한총련 산하 경기남부총련 혐의 3명 구속 (3/23)
16. 법정에 선 피고인 수감 · 포승 결박 사례 증가, 광주지법 피고인 탈주 사건 여파로 무죄추정원칙 증발 (3/24)
17. 외국공관 유치 집회봉쇄 수단으로 악용, 삼성그룹 사내에 대사관 유치로 해고자 집회 장소잃어 (3/28)
18. 50년간 미 공군 폭격연습에 시달린 매항리 주민들 국방부 앞 시위, 폭격연습 중단 촉구 (3/28)
19. 자막방송 실시 1년, 3개 방송사 자막 방송률 고작 평균 10% (3/29)
20. 한탄석 전북대 명예교수, "고정간첩" 발표해놓고 이제와서 '간첩 아니었다' 단순 국보법 사범으로 기소 (3/30)
21. 예바다 사태 다시 흥미 속으로, '캐스팅 보트' 쥔 이사 1명 사퇴로 새 이사진 구성 실패 (3/31)

나라밖 소식

- 동티모르 유민 아직도 십만명 - 유엔, 동티모르 유민 숫자 공식 발표 (3/6)
- 타이완 "암흑시대"로 - 미안마 지원 활동 탄압, 위기의식 고조 (3/15)
- 제 56차 인권위원회 개막- 인권운동가 보호조치 마련 시급 (3/22)
- 인종차별 위험수위- 2001년 인종주의 반대 세계대회 개최 (3/29)

주요판결

- 경찰이 집회를 과잉진압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서울고법 민사 16부) (3/23)

자료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메리로빈슨, 56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연설 요지 (3/22)

인권간행물

- 눈빛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펴냄, 3/8)
- 아시아의 인권교육 · 호주 · 인도 · 홍콩 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역, 3/15)
-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조용환, 석사논문, 3/22)
- 한 노동자가 위험하다(일과 시, 3/29)

수치로 보는 인권

- 99년 도시근로자 월소득이 상위 20%는 4백47만원인 반면 하위 20%의 경우 81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나 빈부격차가 79년 이후 최대 수치(통계청 발표, 3/8)
- 전세계 어린이 9백여만명이 조직범죄단에 의한 섹스무역이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유엔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 사무소 발표, 3/2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4월 4일(화)

제 158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의정부 환경미화원 대거 연행

현재 전면파업... 대체근로 반대 나서

지난달 31일 의정부시 환경미화원들이 경찰에 대거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반대와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26일부터 파업을 진행중이던 미화원들은 시청측이 공무원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자 이를 저지하려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1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연행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조합원들과 연행자의 가족, 민주노총 조합원 70여명도 추가로 연행되었다. 그중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지부장 김기열 씨 등 4명에겐 공무집행방해와 불법 집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지난 1일에 경찰차와 견인차를 앞세운 비조합원들이 파업 농성장인 차고지로 들어다쳐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태로 조합원 유인준 씨와 박형진 씨 등이 병원에 입원중이다.

주요공판안내

중증 장애인, 상습폭력 남편 살해사건

· 유순자(지체 1급 뇌성마비, 언어장애) - 지난 1월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남편을 과도로 찢어 살해. 유 씨는 지난 재판에서 "남편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어떻게 됐다"고 진술(관련기사 본지 3월 11일).

- 4월 7일(금) 오후 4시, 수원지법 110호, 속행

의정부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7월 폐기물 담당사무가 시설관리공단 측으로 위탁된 이후 노동조건 악화 및 시청 측의 비리의혹을 주장하며 8개월이 넘게 투쟁을 전개해왔다(관련기사 본지 1999년 11월 24일).

공단위탁 후 노동조건 악화

'환경미화원 김정복(경기도노동조합 경기북부지부 문화부장) 씨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이후 임금이 40만원-80만원 선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시청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 150만

원에서 170만원에 달하던 임금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김 씨는 또 "임금이 줄어든 반면, 담당구역은 1km 이상 늘어나는 등 노동량은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화원들은 의정부시와 청소대행업체인 (주)의정환경개발(대표이사 권오준, 권영자) 간의 결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50억원과 자녀 학자금 등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이 횡령됐다는 것. 미화원들은 이러한 수당이 청소대행계약서에도 책정되어 있으나, 정작 미화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복 씨는 "우리가 순진하게 가만있으니까 아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는 환경미화원이지만 끝까지 싸워서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택진)

민중연대로 민중세상을 연다

7천여명 참가한 민중대회, 6월 투쟁 준비

노동자, 농민 등 각계 민중들이 생존권 보장과 민주개혁을 촉구하며 지난 1일 서울역에서 2000년 민중대회를 열었다.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김대중 정권 규탄!" 등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민중대회에는 7천여명(민중대회위원회 집계)의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민중대회에는 해외매각이 추진중인 대우·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해 기업의 무분별한 해외매각에 강력히 항의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역 집회를 마친 후 거리행진에 나섰으며 시민들을 상대로 퍼포먼스와 가장행렬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다.

민중대회위원회 이희수 정책기획팀장은 "이번 민중대회는 그동안 분산된

각계 민중들의 투쟁을 하나로 총집결해내고 5월 민주노총 파업과 6월 2차 민중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총선 이후 김대중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민중대회의 핵심 요구안은 △한미·한일투자협정, WTO협상 즉각 중단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즉각 중단! 대우·쌍용자동차의 공기업화 △농기부채 특별법 제정, 계약된 통합농협법 철폐 △강제철거 중단, 철거민 주거권 및 노점 합법화 보장 △지역의보 국고지원 50%약속 이행, 의료보험 통합공단 즉시 확정 △대학등록금 인상 철회, 교육재정 6% 확보 등이다. (이희수) (유해정)

인권
시평

생태적 권리의 향기

강내희 (중앙대 영문과 교수)

3년 전, 아직 눈 덮인 덕유산 자락에 간 일이 있다. 겨울이 채 끝나지 않은 북향 산기슭에 닿으니 구름이 낮게 깔린 데다가 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한 풍경이 감동적이었다. 일행과 풍광을 즐기는 어느 순간, 산바람에 섞여 예상치 못한 냄새가 풍긴다.

이 냄새를 어디서 맡았더라? 허파를 어루만지듯 파고드는 풋풋한 향기는 분명 낯익은 것이었는데, 어디서 맡아본 것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제법 시간이 지난 후에야 어렸을 적 고향에서 맡곤 했던 냄새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옛날에는 겨울 야산에서 쉽게 맡을 수 있는 냄새였는데 근년에 들어와서 맡은 적이 없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갔던 곳은 전북 무주의 인성이라는 곳으로 여름밤이면 아직도 반딧불이가 날아다닌다. 반딧불이가 있다는 것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내가 그 향긋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것도 그곳이 청정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 후 다시 바로 그 산자락을 찾았을 때 그 향기는 온데 간데 없었다. 눈도 여전히 쌓여 있고 시간도 비슷한 오후였지만 내 허파를 휘돌아 기억의 한 자락을 들춰내던 그 냄새는 사라지고 만 듯했다.

냄새를 맡는 후각은 인간이 가진 감각 중에 가장 원시적인 층위에 속한다. 시각이 인류가 직접 생활을 하게 된 후에 발달했다면, 후각은 코를 땅에 가까이 두고 생활하고 있을 때 발달한 것이라 가장 동물적이고 본능적이라는 것이다. 어떤 냄새를 맡고 못 맡게 된다는 것은 그렇다면 인간 감각의 가장 근원적 차원의 변동을 의미한다. 가슴속을 후미고 들어왔던 그 냄새가 사라진 것도 어떤 근원적 감각의 상실을 말해준다고 분명하다. 여기서 인권과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권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 생태권 혹은 자연권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건강한 환경 속에 사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에 속한다. 이 환경이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 인권은 인간의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연의 권리도 동시에 전제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어렸을 때 맡았던 야산의 그 풋풋한 냄새, 3년 전 반할 만큼 향긋하게 느꼈던 그 냄새가 사라진 것도 이런 생태적 권리, 자연적 권리를 외면한 후유증이다.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인권을 구성하는 자연권, 생명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자연이 주는 향기로움이 사라지면 내가 누릴 인권도 그 만큼 향긋함이 없어질 테니까.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8일 - 4월 3일)

1.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 5백4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이상이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또한 이중 43.7%가 퇴직금을, 46.0%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절반이상이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 (3/31)

2.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TV

자막방송 실시 1년이 지났지만 3개 방송사 자막 방송률은 고작 10%대에 머물고 있어. 또한 19만명에 달하는 청각장애인에 비해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수신기 보급은 1만여대에 불과해 (3/28)

3. 대책 없는 등록금 인상에 학생들 거리로

대학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한양대, 국민대생 등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학생들이 국가 교육재정 GNP 6%확보를 요구하며 30, 31일 동맹휴업 실시 (3/29)

4. 경찰, 너도 한 번 벗어봐

선거법 위반혐의로 성남남부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 수감과정에서 알몸수색을 당한 여성피의자들이 담당 경찰관을 고소 (3/27)

5.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뜨거운 감자

청소년보호위원회, 원조교제 등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구체적 신상을 관보와 관공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방법 1차 시안 발표 (3/31) 그러나 이 시안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문을 구한 4명의 전문가 모두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부정적 견해 밝혀

6. 남녀차별금지법, 전성시대 열릴까?

여성특별위원회,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간부가 여사원에게, 동장이 동사무소 여직원에게 심한 성적 발언을 한 것을 각각 성희롱으로 규정해 사업주와 기관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 (3/31)

7.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50년간 미 공군 폭격연습에 시달린 매항리 주민들, 국방부 앞에서 폭격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3/2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4월 5일(수)

제 158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버마인 샤린 씨(29, 가명)가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놓이자, 국내 인권 사회단체들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관련기자 본지 3월 23일>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와 우리'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는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는 샤린 씨를 정치적 박해와 고문의 위협이 높은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샤린 씨의 강제송환은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난민 조약 33조와 고문방지조약 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박해자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샤린 씨의 경우 NLD(버마 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의 결성과 버마대사관 앞에서의 군사정권 퇴진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위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버마군부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미 버마 대사관 측은 샤린 씨가 구금되어 있는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 그의 강제송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샤린 씨와 함께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후 본국으로 강제송환된 한 버마인이 입국하자마자 당국에 의해 NLD 한국지부의 활동에 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진 사실도 샤린 씨의 정치적 박해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대내외에 인권국가를 표방해 온 한국정부가 자신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마저도 위반한다면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정부에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준수 △샤린의 난민지위 조사절차의 미주성과 전문성 보장 △난민지위 여부에 대한 전향적 결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샤린 씨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과 송병익 계장은 "현재 난민심사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부 체류심사과로 이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무부에 난민심사를 요청하면, 법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난민인정협의회'가 소집, 샤린 씨에 대한 난민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배경내)

새로 나온 자료집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조직화 방안』

2000년/ 민주노총 펴냄/ 137쪽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조직화방안 등을 제시한 자료집이 나왔다. 민주노총이 펴낸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철폐 및 조직화 방안』에는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외국노동조합의 활동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자료집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40%가 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방치된 상태다. 또 55%이상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향상 해고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성과는 노력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자료집은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한 노동조합 간부들을 위해 외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 예로 영국노총 산하 최대노조 TGWU(일반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우선에 두기보단 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섬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TGWU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해 조직 내부의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특별조직활동을 채용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렇듯 성공한 외국의 사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남택진]

◆문의: 민주노총 대외협력국 (02-2636-0166)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4월 6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

· 주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문의: 국민연대 사무처장

박래군(02-741-5363)

※ 9시부터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더이상 발전권의 개념을 갖고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행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굶주림, 영양실조, 문맹으로부터 세계를 자유롭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발전권에 관한 독립적 전문가 아르준 쉐굽타

지난달 27·28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발전권'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올해 색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과 일본 등이 발전권을 '일단' 인권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86년 발전권 선언 채택시 반대표를 던졌으며, 일본 역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런 주제는 국제무역기구, 세계은행 같은 공간에서 얘기돼야 할 것"이라며 발전과 인권을 무관하게 취급해온 대표적 국가이다.

하지만 '발전권의 실현방안'에 대해선 상당한 시각차이가 여전했다. 우선 외채탕감에 대해, 일본은 "발전의 권리는 개별 도상국이 선진국에게 원조를 주장하는 권리가 아니"라며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정부 대표들은 "외채는 가난한 나라의 국민을 노예화하는 것은 물론, 발전권 실현의 큰 장애물"이라며 외채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시장의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화'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맞붙었다.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가 대부분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경향에서 보듯, 자유로운 시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근히 세계화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파키스탄은 "불공정한 세계 경제구조야말로 발전권 실현의 걸림돌"이라며 "인권위원회는 국제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치료하는데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은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민주적 의사 결정을 강조했다. 세계시민연합 등 인권단체들도 "국제경제질서의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난번 시애틀에서 보았듯 민중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 자리에는 세계은행 측 대표도 참석해 "우리는 줄곧 가난한 사람, 홀리스 등 힘없는 사람들을 깊이 염려했다"는 말을 보탰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에 쏟아진 비난을 다분히 의식한 발언으로 보였다.

한편 회의장 주변에서는 티벳인들의 피켓시위와 인도네시아 인권단체들의 '불처벌에 관한 투쟁과 민주화 이행'이란 간담회 등 민간단체들의 행사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한 명의 한국인도 눈에 띄었다. 지난 87년 1월 동진호 사건으로 납북된 아버지 최중식(55, 당시 동진호 27호 어로장) 씨의 사례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온 최우영(31) 씨는 '납북자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가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아)

<현장>

한 철거민의 죽음

"저것들 다 죽여서 쓸어 버려야해. 왜 더럽게 그러구 살아. 깨끗하게 재개발하면 좋지. 미친것들..."

관악구청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행인이 이런 말을 내뱉고 지나갔다. 철거민들의 악에 바친 욕설이 구호와 함께 쏟아진다. 4일, 구청 앞에 모인 봉천 3동 주민 20여명은 강제철거를 비난하고 기수용단지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고갯마루에서 내려다 본 봉천3동은 뻗뻗이 들어선 아파트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시장길을 쫓아 올라간 철거대책위원회 사무실 주변 곳곳에는 산처럼 쌓인 건물잔해와 등성등성 남은 빈집만이 마을의 흔적을 전하고 있다. 이제 재개발대상인 옛집들은 사람들과 함께 많이 자취를 감추었다.

이런 동네에서 한 철거민이 죽었다. 이형재(52) 씨는 지난 31일 단식 15일만에 숨을 거두었다. 그와 잘 알고 지내는 주민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월래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오래 전에 부인하고도 헤어져 혼자 살았지"라고 봉천3동 서정철 철대위 위원장은 말한다. "팔순 넘은 어머니가 밥 해주러 한번씩 들렀는데 술만 마신 지 보름째 었다니... 쓰러진 후 119로 병원에 후송되면서 숨을 멈췄어." 한 주민은 죽기 전에 교회에서 만났지만 기력이 없어서 병이 난 줄 알았지 밥을 굶어 그런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전했다.

주민 전속 씨는 "철거민들은 그동안 싸우면서 겪은 좌절로 인해 가슴에서 불명이 같은 게 치밀어 오른다"고 토로했다. 또한 철거민 생활이란 자다가도 발자국소리나 대문소리가 나면 놀라 깨고, 포크레인소리나 철거하는 소리에도 가슴을 졸이며 '마음의 병을 키우는 생활'이라는 것이다. 이웃 이영숙 씨도 "철거민들은 특별한 대상 없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자식 같은 놈들이 두들겨 패며 이사가라고 욕설을 퍼붓는데 견딜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되묻는다. "그를 죽인 것은 세상에 대한 비판과 좌절감"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이날 오후 1시경 또 빈집화제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생가 옆 빈집화제는 떠나라는 위협을 의미한다"고 했다. 지난 2월 27일 발생한 사회복지관 화재 이후 5·6일에 한번씩 빈집화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서는 지난 여름부터 철거민들을 위협해 온 이 수십 건의 빈집 화재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저녁 짙은 소독약 냄새와 포크레인의 소음은 봉천 3동 7-2지구의 몇 안 남은 담벽의 '쇠파이프를 들고 다니며, 화염병을 던진 자를 보았냐'는 경찰의 벽보와 참 잘 어울린다. [김보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4월 7일(금)

제 159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민주화운동정신계승 이제 시작

31개 민간단체, '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후대에 자랑스런 정신적 유산으로 남겨주고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 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5월 시행을 앞두고 민간단체들이 힘을 하나로 결집했다.

6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총 등 31개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정신계승 국민연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두 법의 제정은 단순히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의문사의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는 민주세력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을 떼는 작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시 역사적 왜곡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오는 10일 입법 예고 될 민주화운동 보상법 시행령을 올바르게 제정하는 것을 당면 최우선 사업으로 하고 두 법의 시행과정에서 만 들어지게 될 정부의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와 '진상규명위원회'(가칭)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법 제

정과정에서 법 취지가 많이 훼손된 두 법의 개정운동과 열사 기념사업을 포함한 정신계승사업 등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유해정)

▶ <관련기사 2면>

불법체류자 자녀 불안한 등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이 불안한 신분 상태로나마 국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기사 본지 2월 18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은 6일 현재 불법체류자의 자녀 중 3명이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했으며 또 다른 3명이 입학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측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서류신고증을 해당 학교장에 제출하면 외국인의 자녀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만으로 아이들의 입학을 요청한 끝에 얻어낸 성과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의 처지는 불안하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일하는 정금자 씨는 "학교측은 지금 입학한 아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면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그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해석하면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학교입학이 가능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신분엔 여러 법이 관련돼 있어 문제가 생겼을 시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길은 여전히 험난한 상황이다. (남택진)

만화사랑방

이동수



구치감에서 수감 사라진다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개정

앞으로 구치감(법원·검찰청 내의 대기 감방)에서 재판이나 검찰조사를 기다리는 미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감을 차고 있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29일 법무부는 '계호근무준칙' 중 구치감에 수감되는 수용자에게 수감을 사용한다는 조항을 "구치감 거실 내에 있는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지 못한다"로 개정했다(300조 2항).

이는 지난 97년 <레드 헌트> 상영(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가 "구치감에서 수용자에게 하루종일 수감을 채우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했던 헌법소원과 관련, 법무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 서준식 대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수감을 찬 상태로 식사는 물론 감방 내 변기까지 사용해야만 했다"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구속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먼저 관련규정을 위와 같이 변경한 것이다.

한편 당시 서준식 대표가 미결수 처우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세 가지 사안 중 나머지 두 가지는 △법정에서의 미결수의 수의 착용문제 △구치소 내 인권하루소식 구독 금지와 일간신문 기사 삭제문제였다. 헌법재판소는 인권하루소식구독과 일간지 삭제에 대해서는 98년 10월 각 하 및 기각 처리했으며, 미결수 수의착용에 대해서는 99년 5월에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보영)

행사와 동정

-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와의 만남
 - 때: 4월 8일(토) 5시 30분
 - 곳: 여해문화공간(서울 동대문운동장역)
 - 내용: NLD 한국지부 회원들과의 토론 및 그 활동과 생활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데모크라시 예더봉' 시사회
 - 주최: 프리더션 '移夢', 독립영화협회의회(문의: 2237-0334)
- 국제인권규약 가입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 때: 4월 10일(월) 오후 1시-5시30분
 - 곳: 서울법대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
 - 주최: 민변, 국제인권법학회(문의: 02-735-2777)
- 경찰의 알몸 수색 사건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토론회
 - 때: 4월 10일(월) 오후 2시
 - 곳: 여성사회교육원(서울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
 - 주최: 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문의: 02-2636-0161)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422일에 걸친 유가족의 농성투쟁은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들 두 법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아쉬움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들 법률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올바르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

정부는 오는 10일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시안은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기준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 민간단체들의 판단이다.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기준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노동운동, 사립학교민주화운동 등등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대한 영역이 남겨지게 된다.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이 선출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법의 정신이 오히려 구현되려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

정부는 아직 시행령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검찰 등의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문사 진상규명과정에서 조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의 실효성을 첫판부터 의심스럽게 만드는 대목이다.

▶가장 큰 쟁점은 '의문사'의 범위 설정문제이다. 의문사인지 여부가 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조사대상이 대폭 축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시행령에서 최대한 의문사의 범위를 구체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실효성 있는 조사기관이 구성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의문사가 국가기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무원들을 대거 위원회에 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비율을 최소한 공무원과 민간인 5:5 정도로 명시해야 한다.

▶보고서에 담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 의문사 위원회의 보고서는 의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공식발표 자료이며 과거청산과 관련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사건의 진상을 비롯해 피해자의 피해상황, 사건발생원인, 의문사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 현재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 등 자세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한 반드시 위원회에서의 소수의견이 온전하게 기재되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한다. (유해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늙은 여자는 가라

43세 이상 여사원 무더기 용도폐기

(주)삼부커뮤니케이션(사장 김락현)가 43살이 넘는 생산직 여사원 70명을 무더기로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고자들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월 17일 핸드폰부품을 조립하던 생산직 여사원 70명을 별관 4층으로 불러모아

사퇴를 종용했다. 경영이 어려워 5층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하게 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여사원들이 사전에 고조차 없던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사측은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며 이들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결

국 70여명의 여사원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직'이란 이유가 적힌 사직서에 모두 서명하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으로 이사를 간다면 회사는 이들을 해고한 후 50여명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으며, 스키퍼 생산라인을 새로 개설하는 등 오히려 생산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고당한 여사원들이 사측에 부당해고에 맞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1월 25일 사측에 사직서철하심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2월 8일과 3월 18일 각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노동부관악지방사무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와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지난주부터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회사 앞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이정자 서울지부장은 "삼부커뮤니케이션 해고사태는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부장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여성노동자들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챙기고 있다'며 "이는 여성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심각한 고용불안 상태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택진)

▶ 관련기사 2면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와의 만남

- 때: 4월 8일(토) 5시 30분
- 곳: 여혜문화공간(동대문운동장)
- 내용: 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의 활동과 생활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네모크라시 에더몽' 시사회, 회원들과의 만남
- 주최: 다큐멘터리 프리덕션 移夢, 독립영화협회 (2237-0334)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과거청산 과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곧 시행에 들어가는 두 법이 있어 주목을 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문사특별법)이 그들이다. 이 두 법의 시행에 맞춰서 정부는 시행령 마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라는 공동연대기구를 결성해 이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지금껏 불순분자, 전과자, 자살자로 남아 있던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법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규정에 그치고 있어 당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제외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생략한 채 보상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들은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의문사특별법은 유가족들에게 '내 자식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죽였는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의문에 답하기에는 위원회가 조사권한만 갖고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찰, 국정원, 군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조사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로 인해 가해자들에게 불가피하게 면죄부를 주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잡자는 법으로 다시 진실과 역사를 왜곡하는 일을 되풀이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흡한 법률의 문구에 페이지 말고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 법률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구성도 민주화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자는 국민연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벌여졌던 잘못을 가리는 이 일에 지금껏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이들과 단체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 두 법의 올바른 시행으로 다른 과거청산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삼부커뮤니케이션 해고노동자들을 만나 "싸움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공장이 보증금 120만원 짜리 건물에 세들어 살던 시절에 입사해 10년이 넘게 일했습니다. 그야말로 창립멤버인 셈이죠. 하지만 입사 때 받은 가운이 다 해져서 망사기운이라는 농을 들을 정도가 되도록 회사는 가운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43살이 넘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남중순 씨가 그 시절 왜 그렇게 명칭하게 지냈는지 모르겠다며 회사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냈다.

4월 8일 오후 4시. 봉천동 산동네에 위치한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줌마 30여명이 모였다.

10여평이 채 안 되는 공간에 비좁게 자리를 잡은 이들은 지난 1월 해고당한 삼부커뮤니케이션 해고자들. 회사 앞 집회를 마치고 모인 이들은 그 동안 직장생활은 어땠냐는 물음에 지친 것도 잊은 채 너도나도 하소연을 해댔다. "생리 중에도 화장실 한 번 제대로 못 갔어. 그랬으니 오죽했겠어? 우리 대부분이 오줌소태에 걸리고 심지어 어떤 이는 방광이 부어 수술까지 했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아줌마가 거른다. "그나마 주어지는 휴식시간에도 그냥 놔두질 않고 청소를 시켰어요. 몸이 너무 아파도 잔업조차 못 빠지고 일했지. 안 그러면 사표를 써야하는 분위기였으니까. 일이 하도 고돼 2달간 하혈한 사람도 있고, 일하다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경로잔치도 열고 불우 이웃 돕기도 하는 등 번지르르한 회사였지만 생산라인은 영화에서 보던 '70년대 공장'이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하혈에 방광염까지

왜 진작 그만두지 않았냐는 물음에 이들은 "애사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5년간 삼부에서 일했다는 흥은희 씨는 "우리세대가 전후세대로 무척 어려울 때 태어났잖우. 그래서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우리 회사가 잘되면 우리

도 잘 살게 되는 줄 알고 약작까지 일했어"라고 말한다. 그런 흥 씨였기에 회사측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사표를 강요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직노동자로 오라고 했을 때 받았던 충격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다. "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느낌이었다" 이게 흥 씨의 당시 심경이었다.

이러한 배신감은 해고자들을 하나로 묶어냈다. 70명의 해고자 중 어느 누구도 회사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장스캐치] 최춘마을 철거주민 아들에 여중생 동창 "땃땃하니까 두렵지 않아요"

7일, 구리시청 앞. 저녁 어스름 속에서 피켓을 든 30여명의 여중생이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었다.

"박영순 시장은 사죄하라!"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라!" 구리시 안창동 최춘마을. 지난 해 7·8월에 있던 강제철거가 떠오른다. 용역강제들의 악랄한 강제철거. 200여명의 항의 연좌시위. 연행 66명 구속 3명. 다시 300여명 시위. 전원 연행... 그러나 이렇게 시골벽지였던 마을 세입자들은 대다수 떠나버렸다. 이젠 갈 곳 없는 생활보호 대상자들과 집 3채만 남은 버려진 동네일 뿐이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이 중 한 채가 철거된 것이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구리시청으로 찾아와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 동네 7명의 아이들 중 제일 큰 누나인 이해란 양(구리여중 3)도 물론 여기에 끼어 있었다.

"시청 직원들이 물려와 밤새도록 우리의 몸싸움을 벌이면서 세 차례나 천막을 걷어갔어요" 주민 박정자(53) 씨의 말이다. 새벽 1시쯤에는 술에 취한 시청직원들이 들이닥쳐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이 날 밤 시청 직원 4명은 비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양에게 달려들어 목과 가슴을 마구 밀치는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아이들까지 저렇게 물려와 데모를 하겠어요?" 주민의 말에 다시 피켓시위대로 눈길을 옮겼다. 여중생들은 이해란 양의 학교 친구들이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다. "우리는 땃땃하니까 무섭지 않아요" "집을 강제로 부수고 사람 때리기까지 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힘들지만 친구들이 있어서 든든해요. 무엇보다 시청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죠" 이 양의 말이 야무지다.

안대봉 주택계장은 상식적으로 직원들이 폭력을 행사했을 리 없다고 잘라 부인했다.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17만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인 시청 앞에 천막과 피켓은 절대 안됩니다"

거센 바람이 참담하게 찢어진 비닐 천막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천막 속에서는 대어섯살 돼보이는 아이 둘이 겨울옷을 뒤집어쓰고 잠을 자고 있었다. '천막과 피켓은 절대 안된다'던 시청 직원들이 그 천막을 철거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는지 안했는지는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라!" "박영순 시장은 사죄하라!" 여중생들의 가녀린 구호가 환사바람에 흩어지고 있었다. (김보영·백은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4월 11일(화)

제 159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국제인권조약 찬반신세

자유권 · 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10일로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자유권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에 가입한 지 10주년을 맞았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가입 10주년을 맞아 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두 조약을 적극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으며, 사법부와 법조인 양성기관도 조약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자유권위원회)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단결권·파업권의 보장 △사회보장 확대 등 두 조약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증거. 보고서는 또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조차 조약에 대한 교육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당사국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고, 전국 13개 국립대 법과대학 가운데 두 조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 분야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대학은 전무했다. 지난해 사법연수원에서 최초로 개설될 예정이었던 '국제인권법' 과목이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된 것도 국제인권법에 대한 법조계의 무관심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

사법부 역시 두 조약을 인권옹호를 위한 판결의 근거로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약을 언급하고 있는 판결은 불과 10여건. 이들 판결에서 사법부는 단 2건을 제외하고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약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해왔다. 91년 4월 민법의 사적광고제도가 헌법과 자유권조약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89헌마 160결정)과 지난해 4월 국가보안법 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대전지방법원의 판결(98고합532판결)만이 이례적인 판결로 볼 수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청와대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 대법원, 사법연수원, 국립대 법대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고 △조약상 의무와 조약위원회의 권고사항 적극 이행 △판결의 근거로 조약의 적극 활용 △조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가입10주년 학술회의도 열려

한편, 서울대 법대100주년기념관에서 국제인권법학회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 공동주최한 '국제인권규약 가입 1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열렸다. 서울법대 정인섭 교수등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조약가입 후 지난 10년간 한국정부가 가입 자체에만 안주했음을 뿐 적극적 이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배경내)

"알몸수색" 토론회 개최

10일일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 주최로 '경찰의 알몸수색사건을 계기로 본 형사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본지 3월 28일자 참조>

발제자로 나선 이상희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명시하고 있는 형사질차상 피의자 보호규정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도소, 유치장에서의 알몸신체검사의 경우는 '신체상의 상해를 가할 물품이나 마약류 등을 감추었다'는 상당한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 남부경찰서 알몸수색사건의 피해자였던 김숙경 씨도 사례발표에 나서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가 더 이상 질차와 관행을 핑계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호소했다. [김정희]

주요공판안내

● 8·15 범민족대회 주도 관련 국보법 사건

▶ 박해전(민권공대위 대변인, 한겨레 기자)

- 99년 범민족대회 주도 혐의로 올 1월 구속

- 4월 12일(수)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속행

▶ 최상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중앙위원)

- 98년 범민족 대회 주도 혐의로 구속, 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구형

- 4월 14일(금)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인 권
시 평

밥그릇 싸움의 정당성

박복선 (우리교육 편집장)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신문과 방송에서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서 나는 조금 당혹스러웠다. 직업상 서너 종의 일간 신문은 꼼꼼하게 읽는 내가 이 사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꽤 오래 전부터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양쪽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점잖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 밥그릇 싸움이지 뭐." 했고,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은 "배부른 XX들이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거야." 했다. 조금 조리 있게 설명하는 사람은 "시민의 건강을 불모로 밥그릇을 챙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교과서를 외우듯이 말하기도 했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사태를 이리저리 따져보는 사람은 없었다.

'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들던 말인데...' 나는 그때서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내가 평소 애 핏대를 울리며 옹호했던 '밥그릇 싸움의 정당성'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그것이 '배부른 자'들의 것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밥그릇 싸움'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쉽게 버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에 굴복한 것이다.

물론 한끼 식사를 위한 밥그릇 싸움과 아파트 평수를 넓히기 위한 밥그릇 싸움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엄정함과 절실함의 차이를 어떻게 무시할 것인가? 그러나 배부른 자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함부로 매도하거나 조롱할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그들의 밥그릇과 이기주의를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배부른 자들의 큰 밥그릇을 차지하는 싸움을 조롱하는 데 쓰이는 무기가 장차 배고픈 자들의 작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제압하는 데 요긴하게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유병문 씨, 석방촉구 집회 열려

10일 낮 1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유병문(96년 한총련 조동위원장)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유 씨는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지난 98년부터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중 정부의 선처약속을 믿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출두했으나, 지난 3월 17일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유 씨와 함께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농성단원들과 민가협 등은 지난 4월초 '청와대의 약속 이행과 유병문 석방을 위한 모임'(대표 오창규)을 결성, 이날 집회를 개최했다. [남택진]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1.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오는 5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국민연대는 앞으로 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을 하게될 예정 (4/6)
- 2. '4·3 정신' 훼손한 4·3특별법 시행령안**
제주 4·3특별법에 따라 제정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민간단체와 유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작성돼 논란을 낳고 있는데. 민간단체와 유족들은 진상 조사위에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등 문제가 많은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위원회 등의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혀 (4/5)
- 3. 교육 길 막힌 저소득층 자녀**
서울시 중부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관련해 수여범위를 재산이나 소득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한 학교당 무조건 10%선으로 한정해...수많은 학생들이 학비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4/7)
- 4. 강제송환, 절대 안될 말**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사린(가명) 씨가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하자 국내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사린의 송환반대를 주장 (4/4)
- 5. 자동차노조, 연대파업 돌입**
대우 등 4개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 대우·쌍용차의 해외매각 반대와 공기업화를 주장하며 연대파업에 돌입 (4/6)...정부, 선거를 불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공격
- 6. 늙은 여자는 집이나 가라?**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삼부커뮤니티가 43세 이상의 여사원 70여명을 별다른 이유없이 무더기로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4/7)
- 7. 국가기밀은 '기밀'다워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은 국가안전에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정보는 국가기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4/6)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4월 12일(수)

제 159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대학가 학생사찰 충격

한신대·건국대 등, 구시대 악습 여전

한신대학교에서 학교측의 학생 사찰 문서가 발견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문서는 지난 3월 26일 학교네트워킹을 통해 컴퓨터 작업을 하던 한 학생이 우연히 학생처의 파일을 열어 보면서 발견한 것이다. 그 학생은 그것이 한신대 제적생 최정철(96년 부총학생회장) 씨에 대한 사찰기록으로 판단, 학보사에 제보했다는 것. 최씨는 재학 시절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하다 97년 3회 학사경고로 제적당한 후 재입학을 요구해왔으며, 지난 3월에는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문서에는 최씨의 예전 행적은 물론 최근에 그가 참가했던 집회의 시간과 발언 내용까지 상세히 담겨 있어 최씨를 오랜 기간 사찰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가 드러나자 학생회 측에서는 학교 당국이 최씨의 재입학을 불허할 명목을 찾기 위해 세밀하게 사찰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학생처 직원 이 아무개 씨는 문제의 문서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을 인정한 후 "누군가 다른 직원이 작성한 것 같다. 그러나 그 작성 의도가 최씨의 재입학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교당국이 진보대학을 표방하면서 사찰을 한다는 것은 학교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격"이라며 학생처장에게 사찰문서 작성경위와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건국대에서도 지난 3월 사찰문

서가 발견된 바 있다. 'OHMYNEWS' 3월17일자과 18일자에 보도된 이 '학생간부 동향보고서'에는 학생간부들의 성향까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의 작성자인 건대 학생처 전모 씨는 "다른 대학 학생처도 일상적으로 하는 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대학가의 학생사찰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남택진]

총으로 위협하고 집단폭행

의정부 환경미화원 김현정 씨 연행

지난 3월 26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위탁반대'를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던 의정부 환경미화원 김현정(공공연맹 산하 경기도노동조합 위원장) 씨가 경찰관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4월 4일자).

김 씨는 11일 오전 동료 모친의 영결식에 참석하러 가던 중 의정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혐의로 연행되었다. 경기도노동조합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를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한차례 집단폭행을 가했으며, 연행 후 경찰서 화장실에서 집단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이날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의정부경찰서 측은 "김씨 과정에서 김 씨가 도주하려 해 마찰이 발생한 것"이라며 "화장실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역시 김 씨가 경찰관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를 면회한 강문대 변호사는 "화장실에서 수갑을 차고 있던 김 씨가 경찰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주장"이라며 "김 씨가 입은 부상 정도로 볼 때 경찰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노동조합은 담당 경찰관 등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남택진]

새로 나온 책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1999. 12 /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논문 /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적용 실태와 한계를 지적한 논문이 나왔다.

자유권조약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비준한 6대 국제인권조약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 이 논문은 △한국의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의무이행 실태 △국내 법원의 국제인권법 적용사례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국제인권법 직접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각국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논문은 적절한 예와 풍부한 자료를 통해, 90년대 이후에 국제인권법에 대한 정부나 법원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는 여전히 국제인권법의 의의를 반감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논문은 국제인권법이 우리 법관들에게 아직도 낯설기 때문에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괴리를 수박에 없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법조인 양성 체계와 교육내용이 국제인권법에 대한 국내적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국내법의 이론적, 실무적 개정작업이 동시에 추진될 때만이 국제인권법의 의의를 국내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유해정)

체첸 인권소식 ④

전쟁의 광기, 죽어가는 인권

체첸 지역 인권침해 조사촉구

"체첸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다. 수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이들 다수가 여성·아동·노인이다. 전쟁 초기, 러시아 연방의 폭격으로 인해 그로즈니에 있는 한 병원에선 환자 150명이 죽었고, 그 중 13명이 신생아였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전쟁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유엔인권위원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주제는 단연 '체첸 문제'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연방군과 체첸 반군간의 죽고 죽이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이 전쟁의

최대희생자는 의심할 나위 없이 죄 없는 민간인들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31일부터 5일간 체첸, 잉구셰티아, 다게스탄 등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전쟁의 광기가 빛은 인권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켰다.

로빈슨 씨는 "이번 방문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대량학살·죽결처형·고문·자의적 구금 및 약탈에 대한 증언을 직접 들었다"며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나아가 로빈슨 씨는 "이 사태의 주요한 책임은 러시아 연방정부에게 있다"며 "인권침해를 조사할 독

립적인 국가조사위원회의 설치"를 러시아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바실리 시도로프 러시아 정부 대표는 뒤이은 발언에서 "러시아 연방은 테러리스트를 진압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일 뿐"이라며 로빈슨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같은 날 회의장 밖에서는,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체첸의 어머니들(Mothers of Chechnya)'이 '체첸,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란 토론회를 열고 "러시아 정부는 평화적인 해결 가능성을 봉쇄한 채 대량학살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체첸 인민의 자결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체첸 지역내 러시아 연방 군인들의 즉각 철수 △국제조사단 파견 △전범재판소 설치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인권고등판무관이 보고한 몇 가지 사례

(인터뷰) 국제인권봉사회의 부소장 마크 톰슨 씨를 만나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 임명 필요"

"인권운동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수 절차가 마련될 것인가?" 이는 56차 인권위원회에서 많은 민간단체들이 갖는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 한해 동안 적어도 40개 나라에서 382명의 법률가가 인권 활동 중 보복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13명은 살해됐고, 22명은 실종됐으며, 49명이 구금되거나 고문을 받았다"는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는 '인권운동가 보호 절차'에 대한 높은 관심의 배경을 짐작케 한다(본지 3월 22일자 참조). 이와 관련해 '인권운동가를 위한 특별 보고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주요 단체 중 하나인 국제인권봉사회의 부소장 마크 톰슨(Mark Thompson) 씨를 만나 보았다.

- ◆ 왜 굳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가?
답 : 유엔인권위원회에는 주제별 인권 상황과 나라별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장치가 있다. 하지만 고문·살해·감시·폭행 등 인권운동가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상황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다.
- ◆ 특별보고관이 임명된다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답 : 고문·살해·일상적인 감시·폭행 등 인권운동가들이 당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할 것이다. 나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의 개발이 요구된다.
- ◆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수 절차 마련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은?
답 :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운동가의 보호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힘을 쏟고 있다. 물론, 그 결의안에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나 특별담당관(Special Representative)의 임명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현재 노르웨이 정부 대표가 초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다른 나라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탓에 내용이 너무 약하다. 우리는 정부들이 보다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체첸바: 최은아)

◎ 지난 1월 21일 두고은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로즈니로 돌아가던 한 여성은 다른 두 명의 여성과 함께 검문소에서 러시아 군인에게 붙들렸다. 군인들은 이들의 눈을 가린 채 어느 부서진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살려달라"는 호소를 무시하고 차례로 여성들에게 총을 쏘았다. 첫 번째 여성의 경우, 총알에 머리 일부가 뚫겨져 나올 정도였다. 끝에서 있던 그녀에게 날아온 총알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군인들은 쓰러진 여성들 위에 막무가내로 매트리스를 덮고 불을 붙였다. 다행히 그녀는 죽기 직전 숨어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됐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심해 급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 2일 폐허가 된 도시 체첸의 그로즈니를 방문했다. 살아남은 이들 대부분은 여성과 노인. 그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과 어딘가에 갇혀 있을 가족을 걱정했다. 그들간엔 러시아 연방 정부는 물론 체첸 반군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체첸 반군이 민간인들의 안전에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으며. 내가 만난 다수의 체첸인들이 한 말, "우리 모두를 악당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체첸바: 최은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4월 13일(목)

제 159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개인정보 유출 용납못해

시민,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대 소송제기

본인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유출해온 인터넷 업체가 법정에 서게됐다.

웹마스터로 있는 지승훈(29) 씨는 11일 '네이버컴(대표 이해진)이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삼보컴퓨터에 넘겨 원치않는 이메일에 시달리게 됐다'며 두 회사 상대로 각각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지 씨는 지난 2월 23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삼보컴퓨터 트라이웹으로부터 자사 물건을 구입하려는 내용의 스팸메일을 받았다. 미심쩍은 마음에 트라이웹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방문한 지 씨는 그곳에서 자신의 마이비스 회원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 씨는 '네이버컴의 마이비스 서비스 회원가입 당시 이용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타사와 공유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확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매일 10여통에 이르는 스팸메일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씨는 네이버컴에 항의서한을 발송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김기중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네이버컴이 법률에 위배해 지 씨의 정보를 삼보컴퓨터에 제공한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네트웍스와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도 11일 성명을 발표해 "인터넷 상에서 상업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터넷 서비스들이 개인정보를 불

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보네트웍스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등은 지 씨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유출 반대를 촉구하고 스팸메일의 폐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스팸메일이란?

스팸메일은 받는 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더기로 보내지는 홍보성 메일이다. 스팸메일을 받게되는 사람은 메일을 확인하고 지우는 부담과 함께 그에 따른 전화요금 사용부담을 지게된다.

(유해정)

4월 14일

(인권하루소식) 습니다.

행사와 동정

■ 성남남부경찰서 알몸수색, 인권유린 책임자처벌과 경찰청 훈령 8조 폐지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식 및 규탄대회

때: 4월 14일(금) 낮 12시 곳: 경찰청 앞(서울 서대문구)

주최: 공동대책위 준비위원회(02-2633-4657)

■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발족식

때: 4월 16일(일) 오후 2시 곳: 한국유네스코회관(명동역 6번 출구)

주최: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가족 대책위(준) (정금자 011-9746-2144)

■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때: 4월 17일(월) 오후 2시 곳: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3)

■ 제1차 대인지뢰 민간인피해자모임

때: 4월 17일(월) 오전 11시 30분 곳: 기독교연합회관 1110호

내용: 기독교연합회관 집합 후 국회, 63빌딩 등 견학을 겸한 모임

주최: 한국교회여성연합회(02-708-4181)

■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7년간의 집단 성폭력 토론회

때: 4월 15일(토) 오후 2시 곳: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

내용: 강릉 옥계면 여성 정신지체장애인이 마을 남성들에게 7년간 성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대책마련 토론

주최: 장애인여성공감(02-441-2384)

■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

때: 4월 18일(화) 오후 2시 곳: 기독교회관 대강당

내용: 위 행사와 같은 내용

주최: 여성정신지체인 김양 성폭행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02-521-5364)

시위 진압도 가지각색

대규모 불심검문, 자동차노조 차량시위 봉쇄

경찰이 자동차 4사 노동자들의 차량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대규모 불심검문이라는 '무기'를 동원했다.

11일 대우를 비롯한 자동차4사 조합원 1만6천여명은 차량 4천여대를 동원해 서울 광화문에서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반대를 위한 차량시위를 가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서울에 진입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검문소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았으며 자동차 1천2백여대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야 했다. 또한 이날 경찰 1만 5천명(132개 중대)은 남대문에서 광화문거리로 이르는 구간의 신호등 주변과 양 도로 변에 일렬로 서서 지방차량에 대한 일제검문을 벌이기도 했다.

금속산업연맹 조창목 부장에 따르면 경찰은 인천, 경기, 울산 차량은 무조건 세워놓고 신원조회를 한 후 직장이 파악되면 차에서 내리게 했으며 "이를 거부한 조합원들의 차량을 파손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총 36명의 조합원이 강제 연행되고 대우자동차 조합원 홍성기 씨가 십여명의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한편 하루 전에 상경하여 서초동 현대자동차 서울지부에 묵은 노조원 1백여명은 경찰의 원천봉쇄로 건물에 갇힌 채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울경찰청 경비과 담당자는 "서울시민의 불편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예방적 차원"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이 시위현장도 아닌 서울진입로에서부터 검문을 하고 통행제한을 한 것은 부당한 신체구속이며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김보영)

등록금 인상 반대 "이유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부점거투쟁 지지

지난 10일 6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저지와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면서 교육부를 점거한 사건과 관련, 두 시민사회단체가 이와 같은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대선 당시 교육재정을 6%까지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매년 교육재정 규모가 감소해 2000년 현재 교육재정은 GNP 대비 4.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등록금 인상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국의 대학에서 발생한 단식과 식발, 점거농성, 동맹휴업 등은 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과 사립학교의 과도한 등록금 징수에 대한 당연한 저항"이라고 그 입장을 밝혔다. (백은관)

<특별기고>

'안티 포스코'를 탄압하지 말라!

오병일(진보네트웍 인터넷 사업팀장)

지난 4월 3일 포항제철(주)은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에 대해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즉,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자사의 홈페이지(<http://www.posco.co.kr>)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3년여에 걸친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소식을 담고 있는 홈페이지이며, 포항제철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그 회사 홈페이지를 패러디하여 사용하고 있다.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창작물을 복사, 배포, 변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티포스코와 같은 패러디 사이트는 항의의 방법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주 쓰이는 것이다. 프랑스 저작권법은 이를 '공정한 이용'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는 저작자의 창작물을 도용하여 어떤 이득을 챙기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보통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는 자신이 원작을 도용했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히려 패러디의 경우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예로서는 초기의 락업지(락업지)라든가, WTO 패러디 사이트(<http://www.gatt.org>) 등을 들 수 있다.

포항제철의 목적이 굳이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의 운영을 막는데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거리 시위를 막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을 끌어왔던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을 세세하게 따져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는 저작권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탄압'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항의의 수단이었다 '노래가사 바꿔부르기'에 대해 저작권법으로 탄압했던 적은 있었지만, 저작권법이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저작권법이 기업의 경제적인 독점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자주 쓰일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포항제철은 뻔히 보이는 유치한 수작을 그만두고, 삼미특수강 노동자들과의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만일 포항제철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법원 역시 정치적 탄압의 동조자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네티즌들과 제 노동, 사회단체들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 지원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4월 15일(토)

제 159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 촉구

최근 들어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이 국제결혼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신분 불안 때문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이주노동자 가족 30여명이 내일(16일) 오후 1시 서울 명동의 유네스코회관에서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가족대책위(이주노동자 가족대책위(준))」를 결성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17만 명 정도. 민간단체들은 이

중 연간 7천에서 1만명 정도가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신분 탄로를 우려해 혼인신고조차 못하고 있으며, 단속에 걸릴 경우 사실혼 여부에 상관 없이 수일 안에 강제출국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간혹 합법적인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새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불법체류 경력 때문에 F-2(거주)

비자가 아닌 F-1(방문·동거)비자를 발급 받게 된다. 하지만 F-1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고작 3개월에서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정해진 체류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고국과 한국을 오가야만 한다. 이마저도 출입국관리소 내부규정상 한국인 배우자가 3천 만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또한 F-1비자로는 국내 취업이 불가능해, 한국인 배우자만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작별인사도 못하고 쫓겨났다

이에 일부에서는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여권을 위조하는 모험까지 감수한다. 실제로 지난 96년 한국인 정미숙 씨와 결혼한 파키스탄인 이주노동자 쥬베르 칸 씨의 경우, 불법체류자란 신분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99년 여권을 위조했다가 발각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출국 당했다.

지난 97년 방글라데시인 사이돌 이스람 수엘 씨와 결혼한 장미영(26) 씨 역시 올 3월 남편과 생이별을 해야 했다. 장 씨는 "죽음죄를 진 것도 아닌데 5살 난 딸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게 한 채 쫓아낼 수가 있다"며 "단지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준) 사무국장 장을 맡고 있는 정금자 씨는 "불법체류자는 행정적으로 출국기일이 지난 사람에게 불과하다"며 "그가 한국인과 결혼을 한 이상 우리사회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해정)

오늘 <논평>
내부사정으로 쉽니다.

강제퇴거 당한 쥬베르 칸의 부인 정미숙씨의 글

저는 파키스탄인 남편 쥬베르 칸과 쌍둥이 두 아이를 두고 있는 정미숙이라는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가정에 처한 일 때문에 어렵게 정말 너무도 어렵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96년에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불법체류 상태인지만 전 아이들을 미혼모의 아이들로 서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아빠가 살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저와 남편은 그 점 때문에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 어느날 갑자기 단속기간에 걸려, 한국에서 강제추방 당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쩌나? 쌍둥이 아이들을 아내 혼자서 어떻게 키우나? 결국 내가 추방당하면 헤어져 살든지 아니면 파키스탄에 함께 가서 살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음식에 한국말을 배우며 자랐는데, 전쟁도 끝났지 않은 나라에 데려가서 고생이나 시키는 것 아닌지? 남편은 이런 걱정으로 어린이집을 오가며, 공장을 오가며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 지난 1월 18일 남편은 한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쌍둥이들도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없는 한국에서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간다는게 너무 힘들었기에 아이들도 같이 파키스탄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랑스런 아이들까지 없는 이곳에서 저는 우리 가족들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남아 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날들이 길어질까 사뭇 걱정이 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남편이 한국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전 모든 힘닿게 뛰어 다닐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이 땅에서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남편과 사랑스런 두 아이들과 함께 서로 아끼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쥬베르 칸에 대한 법무부 장관님의 입국심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동방제약 노동자, '노예해방'선언

사장 횡포·노조탄압 맞선 파업 44일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외친 이 말이 21세기 사업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문제의 사업장은 징코민(혈액순환촉진제)을 만드는 동방제약(대표이사 박화목, 경기도 안성 공도면)으로 6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2000년 2월 2일자 참조>

△ 노동조합 인정 △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수당 지급 △ 4대 보험(의료, 산재,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시 △ 면접당시 책정한 임금 지불...

지난 3월 2일부터 44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 회사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이렇듯 세삼 요구할 필요도 없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입사한 뒤 3일째 되던 날 회의시간이었어요. 누군가 사장의 말에 이의를 표하자 사장이 갑자기 호통을 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너! 나가서 서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때부터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지켜보니 매사가 그런 식이더군요. 직원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질 않아요" (품질관리부 과장 박현욱(노조 문화선전부장))

박 씨의 말처럼 이 회사에선 노동기준이 아닌 사장 개인의 '무대보(?)' 정신이 노동 조건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증언에선 '사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사장만이 존재할 뿐이다.

"회사 안에서 빵, 과자 사먹는다고 찢린 사람도 있고, 누구는 밥 많이 먹는다고 '식충이'라 욕을 얻어먹으며 찢렸어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회사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감시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얘기를 창피해서 어디 가서 하겠어요?"

"1, 2분 지각해도 시말서를 써야하고, 월요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시말서를 써야 하죠. 참, 사장이 직원들을 월요일에 한 시간 일찍 나와서 예배보게 하는 건 아니시나요?"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난해

11월에 입사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일을 못한다면서 수습짜지를 때어주지 않아요. 제 이전에 입사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절차를 밟았죠. 사장은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에요. 동방제약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면서요. 그렇게 그만둔 사람치고 월급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대요"

창립한 지 25년 된 회사에서 1년 6개월 된 자신이 최고참이라는 이원범 대리는 "사장이 외할머니 상을 당해 하루 결근한 직원에게 사망진단서를 떼어오라고 해 그 직원이 결국 잠지까지 가서 증명서를 떼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으며 씩씩할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말이 좋아 노동조건 개선이지 사실상의 '노예'생활을 벗어나고자 이 회사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게 되었다. 연구원으로 일하는 문민우 씨는 "사직서까지 썼다가 약에 발해서 노조에 가입했다"고 말한다.

노조설립에 대한 회사의 대응은 가지가지였다. 노조 간부들을 현재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영입부서로 배치했고,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한 뒤 곧 회사 홈페이지와 잠지 등에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나 노조가 물러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결국에는 직장폐쇄 신고를 냈고,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받겠다며 노조원들의 신분보증인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4차례 사측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무담노동행위로 고발했다. 하지만 중재에 나서야 할 노동부조차 '박화목 사장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나 노조가 양보하라'고 권했다 한다.

조용섭 노조위원장은 "양보를 하고 싶어도 양보할 것이 없다"며 "동방제약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일 개인의 횡포가 기본적인 노동조건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모순을 깨고 비상할 수 있기를 동방제약 노동자들은 염원하고 있다.

(남택진, 백은관)

알몸수색, 공동대책위 발족 유치장내 인권사건 고발운동도

지난 3월 성남남부경찰서가 민주노총 소속 여성조합원들을 알몸수색한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사회단체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4개 단체는 14일 낮 12시 서대문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성남 남부경찰서 알몸수색, 인권유린 책임자처벌과 경찰청훈령 8조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알몸수색 공대위)를 발족했다.

알몸수색 공대위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경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경찰서 유치장내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례를 접수하고 경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고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유해정)

함께 일할 상임활동가를 찾습니다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053-426-2533)
홍보팀 간사 1인, 서류·면접, 오는 5월 10일까지, 근무지 대구
-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30대 전후 활동가 1인, 이력서·자기소개서, 4월20일까지, 근무지 서울
- 동성애자인권연대 (02-2235-7422)
홍보, 국제연대 등을 담당할 활동가 1~2인, 면접, 근무지 서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4월 18일(화)

제 159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12시간 동안 폭행당했다”

경찰 방관 속에 울산중앙택시 노동자 10명 부상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던 택시회사가 파업중인 노동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이번 폭력사태는 경찰의 방관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경찰 역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울산중앙택시(사장 김희택) 노동조합은 “14일 새벽 사측 간부가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폭행해 10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하고 이중 4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회사 이사 김영철 씨는 14일 새벽 5시경 노조사무실에 난입해 잠자고 있던 장승환 노조위원장의 벽살을 쥐고 “해고된 새끼가 왜 회사에 들어와있냐”고 폭언을 퍼부었으며 김 씨를 구두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함께 있던 노조원들이 김 씨를 제지했지만 김 씨는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지며 다른 노조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폭력사태는 노동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언양파출소(소장 김도헌) 순경들이 김 씨를 연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연행됐다 풀려난 김 씨는 다시 노조사무실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김 씨는 또 다시 언양파출소

순경들에 의해 연행됐으나, 경찰은 이번에도 “신원보증인이 있다”는 이유로 김 씨를 풀어줬다.

장승환 노조위원장은 “경찰에서 풀려나자마자 바로 폭행하기를 계속한 김 씨를 제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4번씩이나 김 씨를 풀어줘 폭행이 12시간이나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중앙택시의 이진철 업무과장은 “폭력사태가 발생했으나 노동자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해명했다. 언양파출소측은 김 씨가 노동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4차례나 불참해온 김 씨를 왜 풀어줬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노조는 16일 김 씨와 사장을 고소하는 한편 수일 내로 언양파출소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도 사측 부당행위 확인

중앙택시 노동자들은 지난 8일부터 △부당해고 철회 △임금감취분 환불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회사측은 “그 어떤 부정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다”며 노조측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노동부 산하 울산지방노동

사무소의 홍이곤 근로감독과장은 <인권하루소식>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조측 주장대로 회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던 점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사건 조사 자료와 함께 사장의 구속처리를 요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첨부해 넘겼다”고 설명했다. (유해정)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대한변협사협회 주최로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SOFA는 미군 범죄행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을 대한민국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돼있다”며 실질적인 재판권 행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미군은 기지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공역지 중 일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지사용료를 부과하는 한편 기지 및 시설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도록 SOFA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주영(대한변협 인권위원)변호사는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이들의 고용방식을 간접고용제로 전환해 미군의 부당노동행위를 우리의 노동관계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외교통상부 소속 김덕주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SOFA개정 역시 안보력 강화를 우선에 두고 미국과 협력하는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로부터 정부가 SOFA 개정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남택진)

주요공판안내

■ 전북대 명예교수 고정 간첩사건

- 한단석(회합·통신 등) - 지난 1월 간첩혐의로 구속됐으나 회합·통신 등의 단순 혐의로만 기소돼 경찰이 사건을 부풀렸다는 비난이 제기됨.
- 4월 18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3호, 속행

■ 인터넷 간첩사건

- 이창호(회합·통신 등) - 99년 한총련 정책실장으로 활동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북한측과 연락한 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
- 4월 19일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속행

인권
시평

개미

김규향 (아웃사이드 주간)

우리 사회를 보잘 것 없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보는 나름의 눈, 즉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일 게다. 대개의 우리에게 삶이란 나와 세상 사이의 대화와 긴장이 아니라 일렬로 행진하는 개미들의 삶과 같아 보인다. 물론 그런 우리의 모습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에게 강요된 극단적인 형태의 극우반공주의 체제와 관련한 것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의 3대에 해당하는 그 세월 동안 우리에게 극우반공주의 외의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은 곧 국가보안법이라는 중세적 처형도구에 머리통을 집어 넣는 일과 같았다.

아들에게 무슨 이유로든 해라 마라 하는 일이 없던 내 부모도 초등학생인 내게 늘 이르곤 했다. “애야, 정치 얘기 하면 안 된다. 잡혀간다.” 국가에 대해 이견을 갖는 일은 철없는 초등학생에조차 위험한 일이었다.

이제 우리는 공화정의 외피를 이루었다. 우리는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혹은 복덕방에 모여 앉아 얼마간 국가를 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가 요구하는 세계관에 대해 약간의 이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여전히 현실들은 그런 변화가 진정한 것인지를 의심케 한다.

학술 영역에서 공론화된 저작물을 출판한 일로 출판사의 대표가 구속되거나 일군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난데없이 체포되어 수사과정에서야 자신이 ‘이적단체’를 만들고 활동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황당한 일들은 과거의 얘기가 아니다. 세상을 보는 여러 방법 가운데 왼쪽편을 선택하는 일은 여전히 불편하다. ‘진보’ 혹은 ‘진보주의자’라는 말은 그 원래 의미와는 별도로 ‘사회주의’나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무난하게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되곤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권리의 한계선을 넘나들며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적극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다. 그렇게 정치적 한계선을 넘나들며 감시당하고 투옥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한계선에 훨씬 못 미친 지점에서 행진하는 개미의 삶을 살아가는 대개의 사람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게 사실이지만 말이다.

과거의 우리 사회가 자의든 타의든 극우반공주의에 적극적인 사람들로 넘쳐나는 사회였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군부파시즘이라는 폭력적인 방식 대신 언론이나 문화 같은 보다 세련된 방식을 선택한 극우반공주의 세력의 준동에 무덤덤한 사람들로 채워진 사회다.

어떤 세계관도 갖지 않는 일이 가치중립적이라는 생각은 순진하지만 어리석다. 행진하는 개미는 그 일상불란함 속에서 늘 안도하지만 자신이 어떤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지 자신도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태에 놓여 있다.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1. 국제인권조약, 여전히 찬밥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지 10주년이 지났지만 두 조약을 적극 이행해야하는 국제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국제인권법학회와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국정부의 국제인권조약 가입 10주년을 맞아 토론을 개최하고 “한국정부가 가입 자체에만 안주해왔을 뿐 적극적 이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

·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두 조약의 국내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 “사법부와 법조인 양성기관도 조약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 (4/10)

2.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중 대다수가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추방되자 이주노동자 가족들이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가족대책위’ 발족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 (4/16) 이들은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정파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

3. 개인정보 유출에 네티즌 제동

네티즌 지승훈 씨, “인터넷 업체 네이버컴이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산보컴퓨터에 넘겨줘 원치않는 스팸메일(홍보성 메일)에 시달리게 됐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4/11)

4. 여전한 학원사찰

한신대학교측이 학생회 간부를 사찰해온 문서가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건국대학교에서 학생 사찰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4/12)

5. 교육부 점거 투쟁에 사회단체 지지 성명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가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6명이 등록금 동결, 교육재정 확보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 점거 농성 벌여 (4/10) /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 “학교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 이유있다”며 지지의사 발표 (4/11)

6. 끝나지 않은 ‘알몸수색’ 투쟁

성남남부경찰서의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알몸수색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움직임 지속. 지난 10일 인권사회단체들이 이 문제로 토론회를 가진 데 이어 14일에는 ‘성남남부경찰서 알몸수색, 인권유린 책임자처벌과 경찰청 훈령 8조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4/14)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4월 19일(수)

제 159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장애인, 안 받습니다”

전국 105개 대학, 입시요강에 장애인 차별규정

전국 1백51개 대학 중 1백개 이상의 대학이 장애인 입학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일부 교육대학은 장애인은 물론 신체검사에 '용모 이상' 규정을 두고 키가 작거나 얼굴에 곰보자국, 반점 등이 있는 지원자의 입학 불허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들장애인야하(교장 박경석)은 지난 15일 전국 1백80여개 대학 중 1백51개 대학의 입시요강을 분석한 결과 70% 이상의 대학이 입학전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사전상담과 신체검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가운데 51개 대학은 중증장애인들의 원서접수를 거부하거나 입학 취소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백51개 대학은 장애인의 사전상담을 '반드시' 해야 할 과정으로 설정해놓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원서접수 여부와 입학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에 포함된 9개 교육대학을 비롯해 한려대와 덕성여대 등 51개 대학은 장애인이 사전상담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의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 수원가톨릭대 등은 노골적으로 입시요강에 중증장애인의 입학 거부를 명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장애인 교육환경 조성 회피

한편 사전상담이나 신체검사 등과 같은 장애인 차별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대학일지라도 입학 후 장애인들의 수학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모두

본인 부담으로 해결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희대와 동덕여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은 입시요강에 '입학 후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삽입해, 장애인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학교측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들장애인야하의 박경석 교장은 "교육이란 문제가 장애인에게 더욱 절실히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장

애인들에게 학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말하고 "평등을 가르쳐야 할 대학이 차별을 가르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노들장애인야하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입시요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렬)도 지난 3월 전국 2백여개 대학의 입시요강을 조사해 1백15개 대학이 장애인 차별규정을 두고 있음을 확인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심지어 일부 대학은 장애인 불합격처리 및 원서거부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드러난 모든 대학에 지난 4일 장애인 차별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해정)

새로 나온 책

「연변으로 간 아이들 - 탈북 아이들의 꿈과 좌절」

2000/ 김지연 사진집/ 눈빛 펴냄/ 151쪽

연변을 떠도는 탈북 아이들의 삶을 새로운 각도로 포착한 사진집이 나왔다. 쓰레기터미에서 음식 찌꺼기를 뒤지는 아이들, 벌떼처럼 달려들어 구걸하는 아이들, 공포와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 이런 것들이 과거 언론이 우리의 뇌리에 각인시킨 탈북 아이들의 모습이었던면, 김지연 씨의 '연변으로 간 아이들'에는 이런 익숙한 모습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들은 인형을 가슴에 품고 불이 터져라 풍선을 불고 툭툭툭 줄넘기를 하며 세상을 넘고 있다. "옥수수밭을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죽 끓이는 소리 같다"며 한 아이가 환한 웃음으로 말을 걸어온다. 그렇게 작가는 북녘의 어린 영혼들이 장난치고 웃고 떠드는 우리네 동네 꼬마들과 다름없다고 얘기한다.

그런데도 소나무 겹겹처럼 메마른 탈북 아이들의 현실과 그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 아이들의 메마른 표정은 좀처럼 숨겨지지 않는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라는 우리 아이들과 달리, 탈북 아이들은 숨바꼭질하듯 커튼 뒤로, 쓰레기터미 속 피어난 영경귀 뒤로, 희뿌연 유리창 너머로, 조그만 손바닥 뒤로 낮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다. 그렇게 가려진 모습으로 이 '평범한', 아니 '평범해야 할' 아이들은 왜 자신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숨을 수밖에 없는지, 자신에게 왜 '아버지 굶어 죽음, 어머니 행방 불명, 동생 울다 지쳐 죽음'이라는 신상명세서가 따라붙는지 되묻고 있다.

사진 찍히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처음으로 사진가가 된 것을 후회했다는 작가가 홀출단신 연변을 누비며 엮어낸 사진집의 관매수익금은 탈북 아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배경내)

헬기 소음과 최루가스 속 전원 연행

국제금융기구 반대 시위, 워싱턴 경찰 강경 대응

지난 16, 17일 미국의 워싱턴D.C에 사는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봄철 정기 총회에 맞춰 이들 국제금융기구들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인권영화에 관한 연수차 뉴욕에 체류 중인 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씨가 16일 시위에 참가한 후 보내온 글을 실는다. <편집자 주>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봄철 정기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준비된 '세계 정의를 위한 행동'은 워싱턴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시애틀의 신화'를 재현하지 못했다. 하지만 17일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이 개방적이며 투명한 체제로의 변화를 발표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 이들 기구의 정책 결정에 만만치 않은 부담을 안겨준 것만은 사실이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이 대규모 집회는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 본부뿐 아니라 백악관 남쪽 공원 및 조지타운대학, 워싱턴 시내 교회 등지에서 집회, 산발적 시위, 포럼, 토론회, 대국민 홍보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아

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을 폐쇄하라'를 외치며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군중들은 경찰의 거둔된 검문과 연행에 시달렸다. 시애틀의 함락의 아픈 경험을 안고 있는 미국 경찰이 3천명이 넘는 물리력과 물센 톱 없는 조지력을 발휘한 것이었다. 각국 정부 대표들의 참석을 몸으로 저지하고자 총회장 주변을 점거하고 있던 사회단체 활동가들도 지난 12일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 또 총회 개최 전날(15일)에는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 본부와 백악관 근처에서 저항하던 시위대 6백 여명이 헬기의 소음과 최루탄 연기에 휩싸이면서 연행되기도 했다. 강경한 초동진압으로 말썽이 될 만한 쪽은 모두 잘라버린 가운데 경찰이 16일 새벽 5시 각국 대표들이 기습적으로 회의장에 입장함으로써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총회는 '무사히' 개최되었다.

세계화의 재앙 날날이 고발

전세계 2백여 단체, 1만 여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세계화를 강력히 비난하고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불평등 및 환경 파괴 사례들을 날날이 고발하는 15일간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이 불러일으킨 문제들, 아시아와 남미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 등 국제적 이슈이외도 미국 내 독점/불공정 거래 문제 및 감옥의 민영화 문제, 세금 낭비 문제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집회를 조직한 '50년으로 충분하다 네트워크'는 지난 3월 대다수 세계의 민중들에게 빈곤과 불평등의 고통을 야기하고 환경 파괴를 일삼는 아이엠에프와 WTO, 세계은행을 추악한 삼위일체라고 맹비난하며 이들 기관에 대한 7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 바 있다. '50년으로 충분하다 네트워크'의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에 대한 요구사항은 △모든 채무 탕감 △구조조정 및 긴축정책 강요 중단 △구조조정의 피해자인 국민과 지역 사회에 배상금 지불 △이들 기관의 대규모 프로젝트(댐 건설 등)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불 △공공부문을 축소시키는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 중단 △부패한 채무국 권력자 및 그 부패를 부추긴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기소와 손해배상 요구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정책결정 등이었다. (워싱턴 : 김정아)

제네바 인권소식 ⑤

폭력의 공포에 시달리는 소수자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조치 촉구

유엔 인권위원회가 성적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에 조금씩 눈을 뜨고 있다.

지난 13일 핀란드 정부 대표는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의제 토론에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주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사법 외적 처형 및 약식 혹은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자한지르 씨의 보고서에 따르면, 80년부터 97년까지 브라질에서 1천6백 여명의 동성애자가 살해됐으며, 이들 사건 중 5%만이 가해

자가 기소됐다. 또 '멕시코에서만 95년부터 97년까지 적어도 1백25명이 그들의 성적 지향 때문에 살해됐다'

앞서 5일 '시민·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토론에선 성적 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폭력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위치는 "미국에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및 성전환한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포괄 집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교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 폭력, 동성애자 혐오증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나아가서 휴먼라이츠 위치는 "국가기예방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성적소수자들을 위협하는 폭력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10일 국제 게이·레즈비언 인권위원회와 휴먼라이츠 위치는 '성적 지향과 국제인권'이란 주제로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련된 유엔 인권 기구들에 성적 지향으로 차별 받는 사례를 알리고, 여성·아동들과 연대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도록 압력을 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여성·아동·성적소수자들이 폭력과 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들에 촉구하기도 했다. (제네바 : 최은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4월 20일(목)

제 159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4·3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

유가족, 4·3 시행령안 반대하며 4일째 농성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주4·3특별법)시행령의 올바른 제정을 요구하며 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사회단체회원들이 4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제주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제주4·3 행방불명인 유족회」 등 농성중인 33개 사회단체 회원들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4·3특별법 시행령’ 시안으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장관들과 행정관료들을 중심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조사기획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유족들은 특히 위원회와 조사기획단에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주4·3도민 연대」의 양동윤 위원장은 “4·3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그간 단 한 마디의 유감조차 표하지 않았던 국방부가 이제 와서 진상규명에 참가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위원회나 조사기획단에 군사전문가를 파견하려는 것은 과거 군인들이 저지른 양민학살의 실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것 아니겠냐”고 강력한 반대여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자세한 대답은 회피하면서 “시행령 시안을 오늘(20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고만 밝혔다.

현재 제주4·3연구소(064-756-4325)에서 농성중인 유족들과 단체 회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군사전문가 참여 문제를 백지화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22일 도민권기대회를 열고, 24일에는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남택진)

회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22일 도민권기대회를 열고, 24일에는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남택진)

<해설>

‘제주4·3특별법’은 지난해 12월 16일 제정됐다. 이 법의 제정은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빨갱이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던 유족들에게는 특히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독주로 인해 시행령(안)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가족들과 관련단체들이 제기하는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4·3특별법시행령(안)은 위원회 구성(제3조)에 있어 민간전문가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제주4·3위원회의

경우,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따라서 경제관련부처 장관이나 국방부장관 등 행정관료들이 주를 이룬다면 위원회가 본래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사학 또는 일반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방부는 4·3특별법시행령(안)의 위원회 구성(제3조)조항을 이용해 국방부 소속 군사전문가를 위원회와 조사기획단에 참여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두 기관에 참여할 경우 진상규명은커녕 조사가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방부와 군사전문가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 제8조는 희생자 신고의 주체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들에만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들 중 이런 범주의 유족이 없는 경우도 많아 신고주체를 유족에 한정시킨다면 희생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1백20일로 한정된 신고기간을 늘리고 신고장소 역시 제주도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남택진)

행사와 동정

■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2차 투쟁대회
· 때: 4월 20일(목) 낮 12시 · 장소: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
· 내용: 에바다 국·공립화 촉구, 에바다 의문사 어린이 추모제
· 주최: 전국 에바다 대학생 연대회의(02-361-4957)

■ 여성 평화 아카데미, 2000년 봄강좌
· 때: 4월 27일(목)~7월 6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소: 여성사회교육원 청산교육장(서울)
· 내용: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의 만남, 세계 평화운동의 발자취 등 10강의
· 모집: 선착순 30명, 수강료 3만원
· 주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02-2275-4860)

■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지난 17일부터 ‘대인지리 피해자 상담전화’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02-718-4181번으로.

<기자의 눈>

“장애인들은 나다니지 마시오?”

4월 20일은 스무 둘을 맞는 장애인의 날. 해마다 이맘때면 장애인의 인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절정에 이르지만, 이번 장애인의 날에도 장애인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집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쉴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공항에 장애인 데스크가 설치됐다는 소식이 일간지를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흐뭇해야 할’ 소식에 미간부터 찌푸려지는 까닭이 있다.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편의증진법)에 따르면, 관공서와 공항 등 주요 공공시설은 지난 10일까지 ‘당연히’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데스크 마련을 마치 대단한 사건인 양 자랑하고 칭찬하는 모습에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적기한인 지난 10일까지 공공시설의 60%가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의지부족이란 비난이 쏟아져 나올까 걱정됐는지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선수를 쳤다. 덧붙여 “미비한 시설에 시정권고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점을 시정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냐는 물음에 돌보기를 들이댈 뿐이다.

편의시설 설치가 60%정도 완료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진입로 경사 각도는 15°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 서대문 구청의 진입로는 30° 가 넘는 급경사여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야 할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곳을 편의시설이 완비된 곳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경찰청이 마련한 장애인 화장실은 출입문이 비좁아 휠체어가 통과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다.

편의시설 설치에 무관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태도는 장애인들의 마음을 더욱 허전하게 한다.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편의시설 설치 기한이 10일까지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었고, 여성단체들은 편의증진법이 여성(임신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무관심하다. 오히려, 장애인 관련법에 왜 여성단체가 신경을 써야 하는냐는 반응이다.

이제 편의시설이 미비한 공공시설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적 약자’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들이 거리로 나서는 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유해정)

서울대 시설노조 파업

학교측과의 교섭 촉구

경비원, 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조합」(서울대 시설노조, 윤홍립)이 학교측과의 교섭을 촉구하며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 시설노조는 “17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2백78명 중 94%가 투표에 참가해, 이 중 91%가 파업을 지지했다”며 “21일까지 전면 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 1백여명과 「서울

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학생대책위원회」 소속 학생 1백여명 등 2백여명은 19일 오전에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모여 파업 출정식을 갖고 학교측이 서울대 시설노조의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 시설노조의 윤홍립 위원장은 “지난 1월 노조 결성 이후 용역관리업체인 대호(대표이사 조규석) 측과 임금 인상 및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에 임했으나, 대호측이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노동자를 폭행하고 노조간부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해왔다”며 “학교측과의 교섭을 성사시켜 대호와의 계약 철회와 노동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측은 “시설 관리 노동자들은 학교 소속이 아닌 대호측 직원들이므로 학교측이 교섭에 임할 이유가 없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96년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서울대 소속 정규직 직원에서 용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이 됐다. 올해부터 이들을 관리하게 된 대호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32만원으로 삭감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포기 각서를 강요해 왔다. (유해정)

“에바다에 희망의 빛을”

국·공립화 촉구하며 이틀째 단식농성

「전국 에바다 대학생 연대회의」(의장 좌동엽) 소속 대학생 2명이 에바다 비리재단 해체를 촉구하며 이틀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좌동엽(장로교 신학대 93학번) 씨와 김주현(연세대 96, 지체 3급) 씨는 18일 낮 12시 연세대 장애우 동아리 ‘게르니카’ 사무실에서 △에바다 비리재단 해체 △에바다 학교 국·공립화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원래 민주당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한편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18일 오후 김선기 평택시장을 만나 에바다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평택시장이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며 사태해결을 회피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현재 에바다 복지회는 이성재 전 의원을 대표이사로 하는 이사회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지난달 31일 임기를 만료함에 따라 새 이사회 구성 권한이 평택시장에게 넘어간 상태다. 그러나 평택지역에서는 김선기 평택시장이 개인적으로 에바다 비리재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결국 비리재단이 에바다를 다시 장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3월 31일자). (유해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4월 21일(금)

제 159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산재노동자, 또 비관자살

요양치료 거부당하자 빙초산 마셔

산재노동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삼호중공업(구 한라중공업) 노동조합은 20일 "산재노동자 위생태(31) 씨가 산업재해의 고통과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요양 불응인 판정 등을 비관해 11일 빙초산을 마시고 자살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위 씨는 지난 97년 5월 관널작업 중 3m 높이의 족장이 붕괴하면서 추락해 허리와 왼쪽 다리를 다치고 뇌진탕 증후군 증세를 보이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사측은 위 씨의 부상을 "작업 중 부주의로 미끄러진 사고"로 처리했고, 근로복지공단 목포지부 역시 회사측 보고서를 기초로 허리 이상에 대한 요양만을 승인했다고 한다.

이에 위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를 요구했고 위 씨를 진찰한 조선대 병원측은 위 씨의 두통증세와 관련해 "뇌진탕 증후군으로 추정되며 보다 자세한 신경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은 요양불응인 판정을 내렸고, 결국 위 씨의 상태는 병원에 입원해야 할 만큼 악화됐다.

위 씨가 3살짜리 아들과 한 달이 채 못된 딸을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을 옮길 수 없다"며 장례를 미루고 있다. 이들은 "자살은 산재가 부른 참혹한 결과"라며 "최근 위 씨가 '왜 내가 나의 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못 받고 있는지 한심스럽다'는 등 자신을 학대하는 말을 자주 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삼호중공업 노조와 유가족들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책

위를 구성해 위 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피해보상과 재발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에도 산재노동자 이상관 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거부당하자 자살해 유족들이 1백55일간 농성투쟁을 벌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산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관련기사 1월 7일자).

광주지역 산재노동자
소견서 조작의혹 제기

김광수(29, 금호타이어 해고노동자) 씨 역시 98년부터 산재 인정 문제를 놓고 근로복지공단과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98년 5월 '우완관절 월상골 무혈성괴사증'이 발병한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산재법상의 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김 씨의 증상이 자택에서 사적용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빼어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자문의로 일했던 김양목 의사의 「산재보상에 대한 의학적 자문사례집」에서 자신의 증상이 산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사례집에서는 "무혈성괴사는 장기 간에 걸쳐 발병되는 증상"이라며 "피해자가 손목관절의 통증을 1년 전부터

계속 호소하여 온 병력으로 보아 본 상병은 업무수행으로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내용의 소견서가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씨는 18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요양신청 당시 의사 소견서를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소견서를 모두 본부에 올렸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본부는 "소견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자신의 소견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의 문길주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행정 편의와 사측의 눈치만 봐가며 일하고 있다"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해정)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도 정치적 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백성기(37) 씨 등 4명에 대해 19일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98년 1월 6일자).

백 씨 등은 지난 98년 사회주의운동의 이념과 역사를 검토·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진보운동의 동향 등을 소개한 '우리통신' 등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우리통신"이 혁명, 전위정당 등 계급투쟁의 혁명적 방법을 통한 노동해방을 선전·선동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정치적 소견을 피력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희)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7특별부(부장판사 김재진)는 20일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 37)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선고 재판에서 "피고(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1일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현 씨가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으로 구속, 수감됐으면서도 사회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고, 출소이후에는 북과 연계를 맺기 쉬운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현 씨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 씨는 보안관찰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나는 계급이 철폐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회주의자"라고 밝히면서 "보안관찰법은 악법임으로 나는 보안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모든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북한에 포섭되지 않

는다는 것을 법무부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나 역시 북한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현 씨는 "이번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보안관찰의 위법성에 대해 내린 역사적 판결 중 하나"라며 기쁨을 표시했다. (유해정)

4·3특별법 만신창이 우려 부처 이해관계 속 표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정부 차관회의가 20일 열렸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각 부처간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논쟁이 되고 있는 '군사전문가 참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관련단체 회원들은 "각 부처가 이해득실을 앞세워 법안을 난

도질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올바로 제정되는 날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월 20일자).

현재 4·3사건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제주 4·3연구소'에서 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주 4·3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남택진)

부산항 파업사태 진상조사 시민사회단체 현지 방문

신선대·우암부두 하역노동자들의 파업이 50일이 넘도록 계속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노동인권회관, 민교협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부산항부두파업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데 이어 20일 부산지역을 방문해 1차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현지조사를 통해 '복수노조를 인정하라'는 부산지법의 가처분결정 이행여부와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30일자).

조사결과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측은 "두 개의 노조가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암컨테이너터미널측은 "파업을 진행하며 부두에 복귀하지 않는 24명의 노동자 중 4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20명에 대한 징계조치 강구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인권회관의 박석운 소장은 "현재 신선대·우암 사측 모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파업을 정리하고 일터로 돌아간다 해도 계속 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진상조사단은 부산현지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2일 노동부를 방문해 부산지법의 가처분결정 이행 여부 등을 논의하고, 26일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택진)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4월 22일(토)

제 160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검사가 재판중인 피의자를 타 지역 교도소로 이감시켰다면 이것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98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경주교도소 수감중)는 형이 확정된 직후인 98년 5월, 검찰이 미결수였던 자신을 부당하게 이감시킴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9월, 1심 패소라는 좌절을 딛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되어온 강 씨의 법정투쟁은 21일에 열린 광주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 심리를 거치면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강 씨는 지난 97년 7월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검찰 조사가 끝나고 기소되자 바로 순천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검찰의 주장인즉 강 씨가 “절전을 통해 한총련 재건방첩을 전달했으며 단식농성을 배후조종”했기 때문에 “교도소 내 질서유지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었다. 강 씨의 변호인과 가족들은 “가족과 법적 조력인이 모두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순천교도소가 광주법원으로부터 3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여서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감조치에 반발했다. 그러나 광주교도소로의 재 이감은 1심 재판은 물론 항소심도 사실상 끝나갈 무렵인 98년 3월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강 씨는 우선 형사소송법 361조 2의 3항으로 맞섰다. 검찰의 이감조치는, “--검사는 항소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이송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이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강 씨는 “당시 교도관 입회 하에 직계 가족만으로 제한된 면회에서 한총련 재건방첩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거짓 말”이라고 일축하는 한편 “교도소 내

질서유지”는 교도소 당국의 고유업무인데도 교도소 측의 아무런 요청도 없이 검사가 이감조치를 한 것은 강 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검찰의 ‘농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와 관련, 이명을 요구하는 법무 담당자는 “미결수의 경우 다른 사건이 발생해 관찰법원이 변경되지 않는 한 관찰법원 교정시설에서 이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씨의 재판은 오는 6월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김보영)

<논평> 과거청산 3법 시행령 똑바로 만들어라

제4·3특별법 시행령 안에 반발하여 4·3 관련단체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이나 현재 정부가 작업중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시안에 대해서도 관련단체들이 분노를 키우고 있다 한다.

핸드폰 기종 바뀌는 것만큼 빠른 세대 변화 속에서 굳이 흘러간 ‘과거’를 다시 직시하려고 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행방불명되고 고문 받고 옥살이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보존해야 할 ‘공동의 기억’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한 우리의 ‘거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된 과거청산 3법은 이런 이유로 정말 소중하다. 유감스럽게도 정치인들의 손을 거쳐 통과된 법안은 매우 미진했다. 그래서 시행령이 그 미진함을 보완해줄 것을 기대한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그 방향을 제시해왔다. 보상이 아닌 실질적인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 대거 위원회에 들어갈 것,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내놓은 ‘작품’들을 보면 보상과 기념사업이나 대중 해치를 공무원들의 작업실을 떠올리게 된다.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에 쫓겨야 할 방점은 ‘보상’에 죄다 찍혀있다. 이미 광주보상법에서 드러났듯이 성급하게 보상과 기념사업을 추진할 때 그 역사는 뒷전에 밀릴 것이 뻔하다. 무엇을 규명해야 하는지가 빠진 상태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추모하라는 것인지 무엇에 대한 보상을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의 구성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을 피해자들의 농간을 이미 불러들인 것이나 다름없다. 시행령(안)은 민주화운동과 의문사에 관한 규정에서부터 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권한에 이르기까지 모호함으로 도배돼 있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과거청산 3법 시행령은 토씨 하나도 결코 호락호락 넘길 수 없는 과거청산의 청사진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얼렁뚱땅 넘어갈 판이다. 당장 웃음을 거둬들이고 성난 얼굴로 과거를 돌아 봐야 한다. 역사를 똑바로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똑똑한 시행령 만들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올해는 그냥 못 넘어가요”

대학가 등록금 투쟁 장기화, 교육재정 확충 요구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3월 31일자).

전국 60개 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반민중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교육대책위)에 따르면, 21일 현재 10여 개 이상의 대학이 등록금 인상 문제로 대학본관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또한 등록금 인상에 항의해 총학생회로 등록금을 대신 낸 ‘민주납부자’는 3천여 명에 달한다. 과거 등록금 투쟁이 3월 한 달을 넘기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눈에 띄는 장기화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는 개별 학교 차원의 ‘등록금 인상 저지’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교육재정

6% 확충’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희대는 21일 현재 30일째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등록금 인상률은 9.5%. 총학생회측은 “지난해 학교측이 등록금 동결을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 학생들의 분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학생들도 총투표를 거쳐 지난 10일부터 본관 점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학교측은 “등록금 동결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앙대, 동국대, 부산대, 강원대, 한국외대, 동아대, 경북대 등에서 본관 점거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민주납부자들의 제적 위기가

다. 등록금이 11.7% (신입생 12%)로 인상된 연세대는 25일로 등록금 최종 납부기한이 끝난다. 총학생회 문화국장 이국진 씨는 “1백50명의 민주납부자 중 총학생회 중앙 운영위원 15명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기로 해 제적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연세대 학생들은 지난 17일 1천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생총회를 열고 본관점거 농성을 결의했다. 강남대의 경우 이미 등록금 투쟁 과정에서 학생 4명이 무기정학, 3명이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으며, 서울시립대 학생들 역시 징계 조치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이같이 거센데도, 교육부는 별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석현 교육부 대학재정과장은 “등록금 인상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부분이라 교육부가 간섭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교육재정 확충 요구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고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교육대책위의 김선경 씨는 “국가의 재정 운용 방향을 수정하라는 것이지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막대한 혈세로 재벌을 지원하고, 국방비를 매년 증액하면서 교육재정을 확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대책위는 지난 주 교육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위반했음에도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대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대학의 총장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대학 총장들이 지난해 1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의에서 올해 등록금을 최상 15%, 최하 8%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교육대책위는 다음 주말 경부터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교육재정 6%확보·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주영)

<현장> 의정부 환경미화원 258일의 싸움 “사람답게 살립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요. 이 싸움으로 콩밥 먹게된 동료만 해도 6명인데, 이제 와서 내 살길만 찾겠다고 도망치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21일, 가물었던 대지를 적신 빗줄기에 사람들은 반가워했다. 하지만 의정부역 광장 앞에 마주앉은 50-60대의 남자들은 밤새 내린 비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반대와 비리사실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역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의정부환경미화원들의 모습이다.

‘저비용, 고효율’을 내세워 폐기물 담당사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것은 지난해 7월의 일이었다. 월급은 대폭 삭감되고 노동조건은 날로 악화돼 갔다. 이에 노조를 결성하고 시작한 싸움이 258일에 이르게 되었다. 게다가 시와 시설관리공단측이 임금의 일부와 야간수당 등을 횡령한 의혹마저 제기되었다. ‘사실 규명’을 요구하는 파업에 대한 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응답은 대체인력의 즉각 투입이었다.

그 동안 6명의 조합원이 구속됐고, 그 중에는 4살, 6살밖에 안 된 자식을 남겨둔 채 부부가 함께 구속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시에서는 이들을 “일은 안 하면서 월급 올려달라며 시위하는 속물들”로 선전하고 있다.

빛 바랜 작업복의 윤준근(49) 씨는 “비리를 저지르는 놈들은 하나도 잡아넣지 않으면서 우리가 항의하면 업무방해다 뭐다 해서 잡아넣는다”며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지 몰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이내 그는 환한 얼굴로 덧붙인다. “정의는 언제나 이긴다면서요, 우리의 요구가 무리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잘 해결될 거예요” (김정희)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4월 25일(화)

제 160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 지킨다

포털 도안 사용금지 결정, 미러사이트 개설 항의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만든 안티포스코(포항제철 반대) 홈페이지 (<http://antiposco.nodong.net>) 도안이 자사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포항제철이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자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빚발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4월 13일).

지난 17일 서울지법 민사신청 55단독이선희 판사는 "피신청인(안티포스코 운영자)은 포항제철 로고와 포항제철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서 안 된다"며 부분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국제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 등 국제 노동·정보 활동가들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포항제철에 항의메일을 보내는 한편 '미러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에 들어갔다.

'미러 사이트'(Mirrors-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란 특정 국가에서 사이트를 정치적 이유로 탄압할 경우, 다른 국가의 사이트들이 문제 사이트의 도안 및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안티포스코 미러 사이트는 일본, 영국, 스페인, 캐나다 등에 개설되었다. (▲영국 노동넷의 미러사이트<http://www.labournet.org/anti-posco> ▲일본 JCA의 미러사이트 <http://antiposco.jca.apc.org>)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운영위원장 장창원)도 성명을 내 "이번 가처분인정 결정은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자행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물론 노동운동단체와 통신단체 등과 연대해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운영진은 포항제철 로고를 나찌 상징 마크(철심자기)로 바꾸는 등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노총 등은 이번 주 중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남택진)

철도노동자 무더기 징계

공투본, 징계철회 요구 총력투쟁

철도청이 지난 20일 근무지를 이탈하고 무단 결근했다는 이유로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을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당한 노동자

는 부산 52명, 서울 21명, 대전 1명 등 74명. 이들은 모두 노조 민주화와 노조위원장 직선제 등을 요구하여 대의원대회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이어서 징계의 의도에 대해 의혹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를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징계가 철도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현 노조집행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대표 황영호 등) 소속 부산 조합원 7백여명은 지난 20일부터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작업거부에 들어갔다. 또한 공투본은 가족대책위를 구성해 시민사회단체에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하는 한편 징계대상자 6명이 회사 정문 앞에서 석사슬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투본 소속 서울 조합원 5백여명도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철도청의 탄압에 맞서 총력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결의했으며 공투본의 강제한 집행위원장과 이정순 대변인은 2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노조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철도청은 2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27일과 5월 2일로 연기했다. (유해정)

주요공판안내

- ▶ 청송감호소 출소자 윤치고 씨에 대한 감호소 당국 '무고' 사건
 - 윤치고, 4월 25일(화) 오후 4시, 서울지법 552호, 속행
- ▶ 매항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 매항리 전민구 씨 외 14인, 4월 26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법 516호, 선고
- ▶ 8·15 범민족대회 주도 관련 국보법 사건
 - 박해전, 4월 26일(수)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속행
- ▶ 경찰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철용: 97년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한 가두시위를 구경하던 중 전경들에게 학생들로 오인돼 집단폭행을 당함.
 - 4월 27일(목) 오전 10시, 서울지법 452호, 선고

인 권 시 평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공선옥 (소설가)

얼마 전 광주 인근의 대안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을 만났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다. 대체 어떻게 해야 그 학교를 갈 수 있는가, 고 물었더니 일단 그 학교에 진학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한다. 학부모로서 무엇보다 궁금한 학비관계를 물었더니 기숙사비 포함 월 40만원 가량이 든다고 했다. 나는 그만 기가 죽고 말았다. 물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엘 계속 다니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집 아이들을 위해 장학제도도 운용하고 있고 아이가 원한다면 근로장학생을 시켜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비감면제도도 있다고 했다. 어찌됐든 내 아이를 굳이 '대안학교'라는 곳에 보내야만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결론은 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 형편으로는 보낼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아이는 오늘도 공부를 잘해야 제가 원하는 그 학교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고 있는 중이지마는.

대안학교라! 대안학교라 함은 말 그대로 기존의 학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학교가 아니겠는가. 대안이 되지 않는 학교를 굳이 대안학교라 이름 붙일 수는 없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건 일단 기존의 학교들이 지고자선으로 떠받드는 최악의 모토가 아니겠는가. 거기다 기존의 학교에 보냈을 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비싼 학비라니! 나같이 돈 없는 학부모는 아무리 아이가 대안학교에 가고 싶더라도 보내지 못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인데....

환경이 오염되면서 새로운 환경산업이 생기고 환경산업자들이 제공하는 양질의 환경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환경을 오염시켜서 돈을 번 사람들, 혹은 돈이 많아 환경을 오염시킬 물질을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마는 교육에 있어서도 그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교육운동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우리가 환경운동하는 것도, 교육운동하는 것도 늘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다. 돈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기성복 싫어하고 유명디자이너에게 자기만의 옷을 주문하는 것처럼 혹시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은 뭔가 색다르고 뭔가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싶어하는 욕망에 죄없는 대안학교가 이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선한 사람들의 선한 의지들이 흑역라도 죽 췌서 개준다는 속담처럼 그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정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양질의 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일 것이기에.

주간인권호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1.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있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 김기태 씨,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고 증언(4/18)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갖고 진상규명 촉구(4/20)
2. 제주 4·3 진상규명, 독바로 해라
행정자치부가 국방부 군사전문가와 행정관료 등을 중심으로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구성하려고 하자 4·3사건 희생자 유가족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며 농성들입(4/17)
3.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에 불과하다 - 무죄
서울고법 형사 4부, 사회주의도 하나의 정치적 소견에 불과하다며 사회주의 운동의 이념과 역사 등을 제시한 잡지를 제작해 국가보안법으로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백성기 씨 등 4명에게 무죄선고(4/19)
4. 보안관찰처분, 구체적 위험 있어야
서울고법 형사 7부,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재판부는 △준법서약서를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자 양심의 자유이고 △출소 뒤 함께 운동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며 △검·경찰에 하는 자진신고를 거부하는 것 역시 제법위험성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등 구체적인 위험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보안관찰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혀(4/20)
5. 대학에선 장애인 안 받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하, 전국 151개 대학의 입시요강을 분석한 결과 이중 105개 대학이 장애인 지원자들에 대한 사전상담과 신체검사를 통해 장애인 입학에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4/17)
6. 산재비판 자살도 산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 산업재해를 비판해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4/23)
7. 무늬만 산재보험
노동부가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정작 산재발생률이 높은 건설업의 일부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노동계 반발(4/19)
8. 서울대 시설노조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서울대 시설노조, 용역관리업체 대화가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퇴직금 포기까지 제출 등을 강요하자 용역관리업체를 선정한 서울대학본부와의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 돌입(4/19)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전쟁 같은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발생률도 압도적으로 높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국제 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7번째로 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통계 연감을 분석한 민주노총은 25일 "한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주 50시간으로 비교대상 75개 나라 가운데 요르단(58.3시간), 이집트(57시간), 수단(56.1시간), 스리랑카(54.7시간), 마카우(51.8시간), 터키(51.2시간)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75개 나라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 주

노동시간인 41.7시간보다도 8.3시간이 나 긴 시간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29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98년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 2천6백12시간. 노르웨이, 독일 등 OECD 가입국 대부분의 나라가 연 1천4백~1천9백 시간대 노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 이어 노동시간이 두 번째로 긴 체코 역시 연 2천70시간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최악의 수준"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2000년 4월 26일(수)

제 160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민주노총은 "89년 이후 노동시간이 40시간대로 줄어들었음에도 99년 다시 50시간대로 늘어나 노동조건이 10년전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이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한 정부의 안이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비율(중대재해율)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를 표시하는 만인율이 3.33에 달해 미국(0.05), 독일(0.80), 일본(0.10), 태국(1.17), 멕시코(1.20)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주 44시간으로 돼 있는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시키고 주 5일 근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5월말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유해정)

전철연 의장 실형 선고

철거촌 사제총포 사건 관련 항소심

지난해 수원 권선 4지구 철거촌에서 사제총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총포 제작의 배후라는 혐의로 구속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부(재판장 한기택)는 24일 오전 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열고 "범치국가에서 공권력에 무력으로 대응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실형이 선고되자 전국철거민연합은 즉시 성명서를 내고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절대적 명분은 배제한 채 살아남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만 처벌한 판결"이라며 "제 민주세력과 함께 이번 선고결과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유해정)

대우차 노조에 공권력 투입

노조간부 무더기 연행, 노조 파업 돌입

해외매각을 반대하여 농성을 벌여온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이에 대우자동차 노조가 즉각 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 60여명이 25일 새벽 3시 30분 경 인천시 부평구 소재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 사무실을 급습해 농성 중이던 추영호 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19명을 강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로 노조원 1명이 크게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이 노조간부들을 대거 연행해가자 대우자동차 노조원 1천여명은 이날 오전 10시경 사내 조립사거리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바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사실상 대화나 교섭을 거부하는 만행으로 규정하면서 비상회의를 열고 무기한 파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급속연맹과 쌍용, 기아 자동차 노동조합도 이날 사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우자동차와 함께 연대파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이번 공권력 투입으로써 사실상 대화와 교섭을 거부한 이상 29일로 예정된 "노동절대회의"의 기조를 정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집회로 바꾸어 더욱 힘있는 대회로 진행"하는 한편 5월 총파업 조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유해정)

구속·수배 노동자 50명

노동절 앞두고 민주노총 집계

노동절을 눈앞에 둔 4월 말 현재 구속·수배 중인 노동자가 5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민주노총은 25일, 현재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12명이며, 38명이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2명의 구속자 가운데 6명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반대'를 주장하며 파업 중인 의정부 환경미화원노조 소속 노동자들로 특히 이 중에는 3살과 6살 난 딸을 두고 구속된 김현정(36)·양미경(37) 부부가 들어있다.

또한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반대'를 주장하며 파업을 벌인 자동차 4사 노조원 가운데 이미 3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25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5일 대우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연행된 노동자들을 더한다면 구속자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구속·수배 노동자 대부분이 파업과 관련되어 있어 파업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은 "비리와 신자유주의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이라며 "파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대응이 구속·수배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택진)

제네바 인권소식 ⑥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설

강대국들 다툼에 빛바랜 중국 인권 문제

막바지에 접어든 유엔인권위원회는 여러 가지 결의안 처리에 한창 바쁘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의 신설 결의안이다. 지난 17일 전원 합의로 채택된 이 결의안에 따르면,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3년이며 그 수임사항은 △적절한 주거의 기준 제시 △주거권 실현에 장애가 되는 각국의 법률 및 관행 조사 △바람직한 사례 소개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앞으로 강제퇴거·무주택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각국의 주거권 보장을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엔인간주거센터(HABITAT)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10억을 넘는 사람들이 부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무주택자 혹은 난민의 숫자도 1억을 웃돈다. 게다가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과 아동이다.

한편, '먹을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결의안 역시 찬성 49·반대 1(미국)·기권 2로 채택되었다. 특히 이 결의안은 개발도상국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이들 나라에 대한 외채 탕감의 필요성에도 언급하고 있다. 반대표를 던진 미국의 입장은 철저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식량을 많이 생산하고 농업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이 식량안보를 위한 길"이라는 것이었다.

○... 올해도 중국 인권문제에 관한 결의안 채택을 둘러싸고 국가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19일 미국 대표는 자신이 제출한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에서 △자유권조약과 사회권조약의 조속한 비준 △정치범의 석방 △종교 및 집회의 자유의 허용 등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여기에 서유럽과 동유럽의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이름 아래 가세했다.

이에 대해 중국 대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처리 동의안을 올렸다. 이어 파키스탄 대표는 "이 결의안은 인권을 문제삼음으로써 중국의 시장 개방을 이끌어내고 무역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 표결 결과, 불처리 동의안은 찬성 22, 반대 18, 기권 12로 통과되어 올해도 중국 인권문제에 관한 결의안 채택은 좌절되었다.

한편, 이를 지켜본 인권단체들의 표정은 엇갈렸다. 이번 회기 내내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를 규탄해 온 인권단체들과 티벳인들은 불처리 동의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렸다. 반면, 다른 인권활동가는 "물론 중국의 인권상황에 문제가 많지만, 미국이 자신도 비준하지 않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의 이중 기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약소국에 대한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는 반면, 강대국들은 어떻게든 비난을 피해간다"는 것이다. (제네바:최은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4월 27일(목)

제 160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철도 가족, '징계철회' 고공시위

징계 강행에 규탄시위, 대책위 구성으로 맞서

철도청이 부산철도차량정비창 노조원들에 대해 징계와 인사조치를 강행하자 노동자 가족들이 정비창 굴뚝에 올라 고공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4월 25일>

철도청은 지난 20일 근무지를 이탈하고 대의원 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7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노조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철도청은 24일, "징계위원회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뒤, 밤을 틈타 기습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산정비창 소속 김기태 씨 등 6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이들은 26일자로 모두 무연고자로 인사 조치되었다.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모두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대표 황영호 등) 소속 노동자들이다.

징계조치된 김기태 씨의 부인 이정인

'매항리 소음피해' 선고 재판 연기

26일로 예정된 '매항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매항리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이 원고측(매항리 주민 14명) 요구로 연기됐다.

원고측 변호사인 이석태 변호사는 26일 서울지법 민사37단독(장준현)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지난 13일 KBS 추적 60분에서 방영된 매항리 실상 녹화테이프를 재판부가 감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감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선고재판은 연기됐으며 다음 재판은 5월 18일에 열린다. (유해정)

씨 등 노조원 부인 4명이 40m 높이의 부산철도차량정비창 굴뚝에 오른 것은 26일 오전 10시 경. 이들은 "하루아침에 가정을 파괴하는 살인적인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며 굴뚝 중간지점의 난간에서 하루 종일 농성을 벌였다.

공투본 부산지부의 어용수 사무국장은 "이들이 올라간 굴뚝 난간이 매우 비좁고 비까지 내려 차칫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고공 농성자들은 오후 6시경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굴뚝을 내려오게 되었다.

이들 외에 나머지 징계자 가족들은 부산철도정비창장실(창장 진만오)을 점거하고 징계철회를 요구했으며, 징계조치된 6명의 노동자들은 굴뚝 앞에서 쇠사슬 시위를 계속했다. 또한 6시에는 7백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규탄집회도 열렸다. 이들은 철도청의 인사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부산정비창에서 농성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 전개에 부산정비창 노조원들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철도민영화 저지와 민주노조운동탄압 분쇄를 위한 부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부산 철도 민주노조 결성을 위한 민주노조위원장 선거를 예정대로 28일에 강행할 방침이다. 공투본 서울본부 역시 이번 징계조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오늘 2시 서울역에서 열 계획이다.

한편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철도청은 진만오 부산철도정비창장 등 간부 5명을 징계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도청은 이미 징계조치된 6명의 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6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늘과 5월 2일에 계속 강행할 방침이어서 노동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유해정)

박해전 씨에게 구형 3년

지난해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통일대축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박해전(범민족대회 남측본부 대변인·한겨레기자) 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6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신길수)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서울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박윤환)는 박 씨가 △북과 해외에 통신교류를 한 점 △서울대에 침입하여 행사를 강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서울대 학생처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화를 평화적으로 치를 것을 약속해 양해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외친 것으로 결코 북의 노선에 동조하거나 따른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5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해정)

인혁당 사건 25주기 추모제 및 진상규명 촉구대회

4월 27일(목) 오후 7시 명동 가톨릭 회관 7층

· 주최: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 (02-777-0643)

"잠시도 모이지 말아라"

88관광개발, 캐디 노조 간부 무더기 징계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88관광개발(주) 대표이사 여명현이 골프경기 보조원(캐디) 노조 간부 11명에게 출장금지 조치를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88관광개발(주)은 지난 23일 노조 위원장 신윤자 씨를 비롯해 노조간부 11명에게 무기한 혹은 3개월 출장금지 조치를 내렸다. 회사가 내세우는 이유인즉 이들이 지난 20일 "불법으로" 조

합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해 회사 기강을 흐트러뜨렸다는 것이다. 또한 88관광개발(주)은 회사직원들을 집단폭행했다며 이들을 용인경찰서에 고소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들이 노동 시간에 행사를 개최한 것도 아니고 일이 끝난 뒤에 모임을 갖으려 한 것뿐인데 회사가 이를 불법이라며 조합원

들에게 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노조는 "회사가 행사장 전기를 차단하고 교육감사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했을 뿐 아니라 이를 말리던 조합원들을 폭행해놓고 도리어 조합원들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며 사측의 조치에 대해 강한 분노를 나타냈다.

출장금지 조치를 당한 조합원들은 사측에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에는 88관광개발(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부터 매일 아침 출근투쟁을 벌여 왔다. 또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와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88관광개발(주)은 노동자에게 조기정년퇴직을 강요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일삼아 소속 노동자들은 물론 여성·노동단체의 비난을 받아왔다. (백은관)

행사와 동정

■ 아동방임의 현실과 아동의 권리

· 때: 4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 곳: 숙명여대 행정관 7층 회의실
· 주최: 아동권리학회 (02-3274-1669)

■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학생법정

· 때: 4월 28일(금) 오후 5시부터 ~29일(토) · 곳: 이화여대 중강당
· 주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학생법정 준비위원회 (02-365-4016)

■ 한일 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한일연대토론회

· 때: 4월 29일(토) 오전 10시 · 곳: 한글학회 1층 강당(구세군 회관)
· 내용: 한일투자협정과 노동권, 일본노동자와 투자협정 문제 등
· 주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02-778-4007)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년 상반기 심포지엄

-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때: 4월 29일(토) 오전 10시 · 곳: 이화여대 헬렌관
· 주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02-3144-1989)

■ 가정 폭력 없는 평화의 달 "내 이웃의 큰 소리, 혹시 가정폭력은 아닌가?"

· 때: 4월 30일(일) 오후 2시 · 곳: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주최: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02-2269-2962)

■ 2000년 어린이 주간 행사

· 어린이 인권교실 : 5월 1일(월) 오후 4시, 새뜻 공부방
· 새날을 열어 가는 아이들의 한마당 "희망으로 그리는 세상" : 5월 5일(금) 오전 10시, 개운산 근린공원,
· 어린이 인권 공동수업 : 5월 1일~8일, 중부·성북지역 각 초등학교
· 어린이 인권사진전 : 5월 1일~5일, 중부·성북지역 각 초등학교
· 주최: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 중부·성북지역, 새뜻·다솔·성모의 집 공부방 (문의 02-741-5363, 배경내)

■ 스무 돌 맞이 5·18 민주항쟁 참배단 모집

· 참배장소: 광주 망월동 묘역, 민주 문화예술제 행사장 등지
· 참배단 출발 : 5월 17일(수) 오후 11시, 여의도 공원 5·18 행사 이후
· 참배단 지원: 개인 및 단체/ 5월 4일(목)까지 마감
· 주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02-738-2606, 02-739-6851)

여성노동가상법정 뜬다

인터넷 상에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다루는 가상법정이 만들어진다.

26일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여성노동가상법정홈페이지(www.womencourt.or.kr)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의식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유이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의 김지은 교육팀장은 "이 홈페이지는 여성노동자들의 법적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남녀가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노동자, 학생,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병든질의단'이 만들어져 중요한 현안이나 상담 내용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유사한 일에 대한 판례를 제시하게 된다. 네티즌들은 누구나 배심원으로 참여해 이러한 사안에 대한 평결을 내릴 수 있다. (유해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4월 28일(금)

제 160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SOFA 잘 돼 갑니까?

국민행동, 정부의 단호한 개정의지 강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1백2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들로 구성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은 27일 오전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검토 △SOFA 본협정 및 부속문서의 전면개정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 폐기 등을 핵심적인 3대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 주권회복 등을 SOFA개정의 4대 원칙으로 내걸고 구체적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신병인도를 포함한 형사관할권 전면보장 △민사소송절차 마련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환경관련 규정 신설 △간접고

용제 전환 △관세, 과세상의 지나친 특혜폐지 △미군 농산물 검역권 확보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이장희(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SOFA 본협정 31조가 '본 협정은 영어본과 한국어본을 정본으로 한다.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영어본을 우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미군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 조항을 들어 자신들에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조항" 역시 새로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행동은 미국측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되어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미 양국이 SOFA개정협상을 4월말 재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협상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측이 간간히 언론에 흘리는 발언 내용을 보면 "SOFA는 잘 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식이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비롯한 형사관할권 문제만을 개정하는 선에서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국민행동은 올바른 SOFA 개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개정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SOFA개정협상을 4월말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해정)

"투표, 내년에 해라?"

투표 못한 장애인, 선관위 고소

지난 4.13 총선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투표를 포기해야했던 장애인이 관할 선관위를 고소했다.

경기도 광주군에 사는 서승연(36, 지적장애 1급) 씨는 2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 촉진 시민연대 등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투표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경기도 광주군 선관위를 장애인복지법 제23조(선거권) ▶ 2면에서 계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 ▶ 국제연대 담당자
 - 영어회화, 작문가능자
 - 영문이력서, 인권상황 소견서
- ▶ 정보통신출판 담당자
 - 홈페이지관리·한글편집 경험자
 - 한글편집서, 자기소개서
- ▶ 수시접수, 개별면접(선착순)
- ▶ 문의 02-522-7284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혁당, 의문사범으로 규명못해

25주기 추모제, 올바른 과거청산 촉구

27일 저녁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는 인혁당 사건 희생자의 유가족들과 관련단체 회원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인혁당 사건 25주기 추모제 및 진상규명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것이어서 참가자들의 관심은 두 법안으로 모아졌다.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인혁당 희생자는 사법살인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심'을 받기 전에는 사법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내용 중에는 '생명권 침해 조항'과 '재심 조항'이 삭제되어 이 법으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혁당 사건으로 부친 송산진 씨를 잃은 송철환(40, 노동자) 씨는 유족대표로 나서 "박정희 신드롬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배상도 아닌 보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인혁당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이룬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인혁당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온 책임자들을 단죄하고 과거청산을 하는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혁신계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혁당을 재건, 민청학련 활동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1천24명이 체포된 사건이다. 법원은 인혁당 관련자 8명에게 1975년 4월 8일 사형을 선고했으며 선고 후 20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이런 이유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남택진)

▶ 1면에서 이어짐

등 행사의 편의제공) 위반으로 성남지청에 고소, 고발했다. 서 씨는 "지난 13일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투표소는 2층에 마련되었는데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투표 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원들에게 휠체어를 들어달라고 부탁했으나 '내년에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투표소를 들뜬에 설치해야겠네?'라는 모욕적인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이에 따라 본인은 물론 함께 갔던 가족 4명도 어이없는 선관위에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해 선거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복지법 제23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선거권행사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선관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투표를 포기한 사례 등을 접수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유해정)

인간답게 살고싶다

노동절 110주년 행사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 쟁취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전세계 노동자들은 매년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올 29일 노동절 기념대회를 갖고 3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주40시간 노동제 실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평균 주 50시간이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최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장기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임시·일용직 등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을 보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법정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이를 전 산업에 시행해야 한다.

■ 구조조정 중단과 단체협약·임금 원상회복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국내외 자본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노동자에게는 임금감소·노동강도 강화·고용불안 등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일반적으로 박탈하는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중단을 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세운 기업들을 헐값에 넘기는 공기업 민영화와 국가기간산업의 해외 매각도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경제가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과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증가한 반면, IMF 경제 위기 동안 감소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다. 이에 생계비 확보와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올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임금을 15.2%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 조세개혁을 통한 사회보장 예산의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도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고, 단결권과 사회보장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자본은 고용불안정화 정책을 중단하고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 노동절 110주년 기념 수도권 노동자대회
4월 29일(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민주노총

▶ 110주년 노동절기념 영세사업장, 비정규직노동자대회
5월 1일(월) 오후 2시, 서울 종로공원
수도권 지역노조 연대회의(02-745-1706)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4월 29일(토)

제 160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유해정

부산 하역노조 파업 정당하다

민변, 법률적 견해 밝혀

지난해 말 한국노총 산하 부산항운노조가 설립돼 있던 부산지역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가 신설되면서 복수노조 허용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복수노조를 인정, 신선대·우암부두 지부가 신설됐으나 사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신선대·우암부두 항만하역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여온 가운데 법률가들이 "이들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본지 3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우)는 28일, 신선대·우암부두 파업과 관련해 "항만터미널 사업자들의 단체교섭거부는 가처분명령이행의 불법행위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미 부산지방법원이 '신선대·우암부두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을 내린 점에 주목해, "항만터미널 사업자가 비록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그 이의가 받아들여져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사용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준수되도록 노력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노동부가 항만터미널 사업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파업이 장기화되도록 수수방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이경우 민변 노동위원장은 항만터미

널 사업자들이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체노동자를 사용하는 한편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징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며, "노동부가 이를 방관한다면 민변 차원에서 노동부장관

을 고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변의 입장 발표가 있던 날, 신선대·우암부두 하역노동자들은 조합원 총회를 열고 70일간의 파업을 마무리하여 다음달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맹 정호희 사무처장은 "노동자들의 복귀결정은 싸움을 끝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의지"라고 말했다. (유해정)

<논평> 메이데이여 오라

세계노동절이 다시 돌아왔다. 8시간 노동 요구에 총탄과 곤봉세례를 받았던 노동자들. 그들의 넋이 아로새긴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속에서 마음놓고 일할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3조)'를 21세기 노동현장에서 확인하려 왔다. 그러나 최근 노동현장에서 심각한 '반 권리선언'이 선포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지덕지할 의무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결정된다.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란 노동자의 '집단지주의'를 부추기는 환상이므로 초기에 산산조각 나야 한다. 고용불안, 임금삭감, 빈부격차는 일에 대한 대가이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는 어용노조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버섯이다." 실업의 악몽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적은 임금과 기본적인 복지 혜택의 박탈을 강요당한다. 자본가들은 사표를 강요한 후 신심이나 배 풀 듯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수법을 남발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7위의 장시간 노동시간이 보태지니 산업재해의 증가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노동조건을 바꿔보겠다는 노조활동은 숨쉴 공간이 없다. '해의매각 반대'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대우자동차 노조에 경찰력을 투입해 간부를 연행해 간 것은 그 대표적 예이다. 불법파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검찰총장의 '준비된' 발표가 뉘를 잊고, '집단지주의'의 메타작도 빠지지 않는다.

정부는 법 제도적인 개선책을 늘어놓지만, 사실상 현장은 무법지대다. 노동위원회의 반복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포스코, 복수노조를 인정하라는 부산지법의 가처분결정은 무시된 채 어용노조의 폭력에 방치된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다. "노조 대의원 간접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도 어용노조의 폭력과 철도청의 부당징계로부터 철도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있을 110주년 노동절 대회에서 5월말 총파업 투쟁 돌임을 선언한다고 한다. <인권하루소식>에 매일 밀려드는 노동현장의 상황들,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절하고 '반 권리선언'을 의기양양 드러내고 있는 현실은 이런 선언의 정당성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노동자들은 반 권리선언을 불태울 버려처럼, 정부의 고막을 찢을 천둥처럼 메이데이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인간다운 노동의 권리를 움 퍽을 비처럼 메이데이여 오라!

이달의 인권하루소식 (2000년 4월)

흐름과 쟁점

1. 문제 많은 과거청산 3법 시행령

4.3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국방부 군사전문가를 진상조사단에 참여시키려하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반발하며 농성 돌입(4/20)/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민간기구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출범. 그러나 두 법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난항 계속(4/7,8)

2. 국제인권조약 가입 10년, 정부 이행 의무 방지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두 조약의 이행의무를 방지하고 있어 인권단체, 정부가 '가입'에만 안주하고 있다고 질타(4/11)

3. 법원의 연이은 '사회주의' 인정 판결

법원, 사회주의도 하나의 정치적 소견에 불과하다며 사회주의 서적 제작자에 무죄선고(4/19)/ 법원, 사회주의자를 자임한 보안관찰대상자의 보안관찰처분과 관련해 구체적 위법성이 없다며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4/20)

4. 최장시간 노동에 최고 산재율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중 7번째로 길고 '경제협력기구' 가입국 중에서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4/26)/ 장시간 노동은 산재를 초래,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산재에 대해 사측과 정부는 책임 회피로 일관해 문제(4/21)

5. 전국 151개 대학 중 105개 대학, 장애인 입학 제한

노동장애인아하, 전국 151개 대학 가운데 105개 대학이 장애인 지원자들에 대한 사전상담과 신체검사를 통해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4/17)

6. 부당노동행위에 노동자, 전면파업으로 맞서

울산중앙택시,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동방제약 등 사측의 부당행위에 맞서 노동자, 전면 파업에 돌입(4월 내내) 노동부 방관 속 회사 횡포 상상 초월

7. 자동차노조 '해외매각반대' 요구, 정부 '집단지주의' 매도

해외매각반대를 주장하며 대우자동차 등 4개 자동차 노조 파업 돌입. 정부, 이들의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 행동으로 매도한 후 공권력 동원해 대우자동차 노조 간부 연행(4/26)

8. 철도·하역노조, 민주화 길 험난

대법원이 3중 간선제에 의한 노조대표 선출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철도청과 현 철도노조가 이를 받아들이기키엔 민주노조 건설을 요구하는 철도노동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려 가족들이 굴뚝 위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기도(4/27)/ 부산항 하역노조 역시 복수노조 인정돼 단체교섭권을 갖게 됐으나 사측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노동자 파업 장기화. 인권사회단체, 조사위를 구성해 현지조사에 나섰으며, 민변 '파업지지' 밝혀(4/21,25)

인권시평

- 생태적 권리의 향기 (강내희 중앙대 영문과 교수, 4/4)
- 밥그릇 싸움의 정당성 (박복선 우리교육 편집장, 4/11)
- 개미 (김규환 아웃사이더 주간, 4/18)
-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공선욱 소설가, 4/25)

논평

- 기본적 권리를 출자로 재는 나라 (4/1)
-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4/8)
- 과거청산 3법 시행령 똑바로만 들어라 (4/22)
- 110주년 노동절에 부쳐 (4/29)

기고

- '안티 포스코'를 탄압하지 말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4/13)

현장보고

- 봉천 3동 한 철거민의 죽음 (4/5)
- 최춘마을 철거주민 아픔에 여중생 동참 (4/8)
- 삼부커뮤니티 해고노동자들을 만나 "싸움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4/8)
- 동방제약 노동자, '노에해방' 선언 -사장 횡포에 맞선 파업 (4/15)
- 의정부 환경미화원 258일의 싸움 -"사람답게 살립니다" (4/22)

주요판결

-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도 정치적 소견으로 인정해야한다(서울고법 형사 4부) (4/21)
- 스스로 사회주의자라 밝힌 보안관찰처분자에 대해 법원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는 보안관찰처분은 부당하다며 보안관찰처분 취소결정(서울고법 제7특별부) (4/20)

인권일지

1. 의정부 환경미화원, 시설관리 위탁반대하며 파업, 경찰 업무방해로 대거 연행 (4/1,15)
2.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김대중 정권 규탄!" 2000년 첫 민중대회 7천명 참가, 열기 후끈 (4/1)
3. 강제송환 위기 버마 민주화운동가 사틴, 인권단체 "보낼 수 없다" 대응 모색 (4/5)
4. 헌법소원 의식했나 법무부 '미결수 구치감에서 수감 못 채우게' 계호근 무준칙 개정 (4/7)
5. 불법체류자 자녀 학교 입학 가능, 신분탄포 시 입학 취소 가능성 (4/7)
6. 삼부커뮤니티스, 43살 이상 여직원 무더기 해고(4/8)
7. 최춘마을 강제철거, 여중생마저 반대 시위 (4/8)
8. 여성 피의자 알뜰수색 사회적 관심 지속, 토론회 개최, 공대위 구성 (4/11,15)
9. 여전한 대학가 학생사찰, 한신대 건국대 비밀 문서 발각 충격 (4/12)
10. 인터넷 기업 개인정보 유출에 네티즌 제동,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대 손해배상 1억 청구 (4/13)
11. "등록금 인상 반대" 교육부 점거투쟁, 시민단체 "담연한 저항" 지지 표명 (4/13) / 전국 10개 이상 대학, 한달 넘게 본관 점거 투쟁 (4/22)
12. 이주노동자 가정, 정부의 외국인 차별정책으로 생이별의 고통 (4/15)
13. 울산중앙택시 간부 파업 노동자 만나질 폭행, 경찰 보고도 모른척 (4/18)
14. 예바나 국·공립화 요구하며 대학생들 단식농성 (4/20)
15. 재판 중 이감은 불법,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제 법정 투쟁 (4/22)
16. 법원, 포털의 인터넷 홈페이지 배경화면의 지적소유권 인정, 삼미특수강 등 국내의 노동자, 미러사이트 만들어 항의 (4/25)
17. 구속·수배 노동자 50여명, 부부 활동가 함께 구속되기도 (4/26)
18. 남경남 전철연 의장, 사제총포제작 배후조정 혐의, 2년 6개월 실형 선고 (4/26)
19. 미국이 SOFA 개정 협상 계속 연기하자 시민사회단체 협상 재개 촉구, 대한변협, 토론회 열고 SOFA개정 필요성 재확인 (4/28,17)
20.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투표 못한 장애인, 관할 선관위 고소 (4/28)
21. 인혁당 희생자 유족들, 25년 추모제 열고 올바른 진상규명 촉구 (4/28)

나라밖 소식

- 제네바 인권소식
 -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4/5)
 - 전쟁의 광기, 죽어가는 인권- 체첸 지역 인권침해 조사 촉구 (4/12)
 - 폭력의 공포에 시달리는 소수자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조치 촉구 (4/19)
 -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설- 강대국들 다름에 빛바랜 중국 인권 문제 (4/26)
 - 헬기 소음과 최루가스 속 전원 연행 - 국제금융기구 반대 시위, 워싱턴 경찰 감경대응 (4/19)

인터뷰

- 국제인권봉사회 부소장 마크 톰슨 씨를 만나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 임명 필요" (4/12)

인권간행물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및 조직화 방안 (민주노총 펴냄, 4/5)
-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정경수 석사논문, 4/12)
- 연변으로 간 아이들 (김지연 사진집, 4/19)
- 주한미군범죄백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펴냄, 4/26)

인권하루소식

2000년 5월

(제1606호 ~ 제1625호)

통계로 보는 인권

(자료제공 : 민주노총, 관련기사 본지 4/26)

